

발간 등록 번호

11-B190031-000197-08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8 NO.3



아세안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시사점
동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방향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민간참여에 기반한 유상원조 개발협력모델 수립 연구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탄자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8년 제3호

한국의 개발협력

발행 : 2018년 10월

발행인 : 은성수

발행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인 : 홍성훈

주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 : 02-3779-6114(대표)

팩스 : 02-784-1030(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
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국제개발협력 동향

- 03 아세안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시사점
(오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 47 동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방향
(윤정현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 101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III. 한국의 개발협력

- 151 민간참여에 기반한 유상원조 개발협력모델 수립 연구
(김장생 연세대학교 교양교육학부 교수)

I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 205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도현 한국수출입은행 조사역)
- 229 탄자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오경일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

EDCF

I. 국제개발협력 동향

아세안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시사점
오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동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방향
윤정현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아세안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시사점¹⁾

오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목 차

- I. 서론
 - II. 아세안 개발원조 동향
 - 1. 수원국별 추이
 - 2. 공여국별 추이
 - 3. 분야별 추이
 - III. 주요 공여국 협력전략
 - 1. 다자개발은행
 - 2. DAC 회원국
 - 3. 중국
 - IV. 한국의 아세안 개발협력 동향
 - 1. 한국 양자원조 추이
 - 2. 아세안 지역통합을 위한 개발협력
 - 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저자가 연구책임자로 집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중국의 동남아 경제 협력 현황과 시사점'(2017)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힘

1. 서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 지역은 총 인구 6억 4천만 명이 거주하는 10개의 동남아시아 국가로 구성된다. 이 중 브루나이와 싱가포르가 각각 2017년 기준 일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이 28,000 달러, 58,000 달러로 고소득 국가이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5,000 달러와 10,000 달러 사이에 위치하며, 나머지 6개국이 5,000달러 미만으로 개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들이다.²⁾ 그러나 최근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지정학적 변화 등으로 이들 국가의 개발협력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아세안 개도국들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성과가 높은 편이다. 그 이면에는 다른 신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상황, 국제교역과 외국자본에 개방적인 정부 태도, 그리고 비교적 준수한 인프라를 갖춘 여건이 작용하였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중진그룹 국가들은 비록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990년대 초와 같은 고속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필리핀과 함께 이후 거시경제안정을 기반으로 국민소득의 꾸준한 증가, 중산층의 확대, 도시화 진전 등 많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륙부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CLMV(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로

2) ASEANstats

불리며 아세안 후발국 그룹을 형성하였으나 이제는 이 그룹을 졸업하고 중진그룹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진공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모델을 따라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를 통한 가공무역을 육성하는 등 수출지향 산업화를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나머지 'CLMV' 그룹의 전망도 비교적 밝아서 라오스와 미얀마는 조만간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기준 최빈국의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보이며 캄보디아의 경우도 2025년까지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IDA) 지원자격을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³⁾

아세안 개도국 중 미얀마의 부상이 매우 중요한데, 2011년 준민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감한 개혁개방이 시행되었고 2012년 미국의 원조관련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원조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미얀마는 낮은 개발수준과 많은 개발수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제사회제재로 인해 원조관계가 극히 제한된 국가였기 때문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제재해제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는 향후 아세안에서 가장 중요한 수원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신흥공여국의 등장으로 아세안에 대한 국제개발협력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중국의 개발원조는 그 정의와 분류, 공개가

3) Severino and Moss (2012)

기존의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여국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개발성격을 가진 중국의 대규모 공적자금이 아세안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단순히 개발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 및 지역질서를 자국주도로 재편하기 위해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협의체를 설립하였다. 중국 주도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은 아세안 지역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이며, 중국은 대륙부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란창(瀾滄)-메콩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역개발을 의제로 역내 영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 등 기존의 주요공여국이 적극 대응하면서 아세안의 공여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한국의 아세안 개발협력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입장에서 주요한 개발협력 대상 지역이다. 아세안 자체의 개발수요와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아세안 개발협력은 앞으로도 주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아세안 개도국들의 공통된 개발수요와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가별로 개발수준과 경제구조, 국제개발협력 여건, 국가정책으로 인한 개발협력 수요의 이질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아세안에 대한 개발원조 현황을 수원국과 공여국, 분야별로 살펴보고 주요 공여국들의 국가별 협력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아세안 개발협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아세안 개발원조 동향

1. 수원국별 추이⁴⁾

아세안의 최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수원추이를 보면 총지출 기준 2012년 89억 달러에서 2016년 104억 달러로 4% 정도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였다. 2013년의 경우 166억 달러로 그 규모가 급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미얀마에 대한 부채 탕감성의 지원으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당시 미얀마 개혁개방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었으나 미얀마가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으로부터 새로운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상환대출금을 상환해야 했고, 이를 위해 일본이 주도하여 국제사회가 대규모 브릿지론(Bridge Loan)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2014년 이후 아세안의 총 수원규모는 해마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하여 베트남($\Delta 6\%$)과 말레이시아($\Delta 55\%$)에서만 수원규모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다소 증가하거나 미얀마와 같이 2.6배로 대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은 아래에서 보듯이 아세안 최대수원국으로 베트남 수원규모의 변동은 아세안 전체의 수원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⁵⁾ 다른 국가들의

4) 아세안을 구성하는 10개국에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제외함

5) 다자원조에서 베트남에 대한 집중은 더 두드러지는데, 총지출 기준 아세안에 대한 세계

변동폭은 큰 편이 아니며 국제제재 해제로 원조가 재개된 미얀마의 경우에만 원조 증가세가 대단히 큰 편이다.

수원국별 분포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베트남이 전체수원액의 36%, 그 뒤를 인도네시아가 20%를 차지하여 이 두 나라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3위는 미얀마로 15%이고 그 뒤를 필리핀(9%), 캄보디아(9%)가 따르고 있어 중진국과 후발국이 순위에서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⁶⁾

〈표 1〉 아세안 국가별 수원 추이 I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별비중 (2016년)
베트남	4,012.8	4,306.1	4,583.4	4,048.9	3,768.4	36.2
인도네시아	1,896.6	2,160.9	1,913.0	2,092.1	2,119.8	20.3
미얀마	443.6	7,000.2	1,875.0	1,244.2	1,605.3	15.4
필리핀	838.7	936.9	1436.4	1264.2	967.8	9.3
캄보디아	742.6	775.9	777.6	769.9	807.3	7.7
태국	407.0	799.8	609.8	346.8	581.2	5.6
라오스	403.8	409.4	444.9	548.7	478.7	4.6
말레이시아	203.0	185.1	144.9	133.0	90.5	0.9
합계	8,948.0	16,574.2	11,785.0	10,447.8	10,419.0	100.0

주: 총지출 기준, 2016년 기준으로 정렬

출처: OECD, Stat

은행의 2014-2016년 3년 평균 원조를 보면 총 11억 달러 중 베트남이 약 9.6억 달러로 88%를 차지하며 ADB 역시 같은 기간 총 공여 6.2억 달러 중 베트남에 4.1억 달러를 공여하여 베트남 비중이 67%에 이릅니다

6) 태국은 주변 메콩유역국가들에 대해서는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임

총지출과 순지출을 비교해보면 국가별 원조수원의 특성이 좀 더 나타나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는 순지출이 마이너스 또는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차관이 수원액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일인당 GDP 5,000 달러 이상의 중진국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슷한 소득 수준의 필리핀에 비해 차관비중이 특별히 더 높은 경우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 2〉 아세안 국가별 수원 추이 II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별비중 (2016)
베트남	2,162.9	2,179.6	2,317.0	1,942.0	1,871.0	45.6
미얀마	285.5	3,290.3	1,031.8	901.9	1,067.2	26.0
캄보디아	539.0	479.5	499.8	479.8	477.0	11.6
필리핀	24.7	165.2	565.8	543.5	268.8	6.6
라오스	239.3	238.5	286.0	359.1	247.4	6.0
태국	△144.3	△94.2	267.1	△10.2	169.7	4.1
말레이시아	9.1	△125.3	△12.0	△22.8	△63.9	-
인도네시아	△34.6	△66.2	△418.3	△110.3	△48.1	-
합계	3,081.5	6,067.4	4,537.3	4,083.0	3,989.7	100.0

주: 순지출 기준, 2016년 기준으로 작성

출처: OECD, Stat

ODA의 절대적 수준 뿐 아니라 주요국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과 2016년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발전 추이와 ODA 수원 추이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발전이 따른 소득증대에 따라 GDP 대비 ODA 규모와

일인당 ODA 수원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여기서 미얀마만 예외적 증가를 보인다. 일인당 ODA가 높은 편인 국가들은 물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모두 2011년에 비해 2016년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미얀마의 일인당 ODA는 2011년 7.5달러에서 2016년 29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제규모 대비 ODA 수원에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모두 2016년에 감소하였으나 미얀마만 2011년 0.6%에서 2016년 2.5%로 급증하였다.

〈표 3〉 아세안 국가별 상대적 원조수준 변화(2011, 2016년)

국가	2011년			2016년		
	일인당 GDP (달러)	일인당 ODA (net, 달러)	GDP 대비 ODA(%)	일인당 GDP (달러)	일인당 ODA (net, 달러)	GDP 대비 ODA(%)
캄보디아	828.0	54.5	6.5	1,079.1	46.3	3.9
라오스	1,215.9	63.1	4.9	1,642.7	58.9	2.6
미얀마	1,034.8	7.5	0.6	1,408.1	29.0	2.5
베트남	1,377.1	40.5	2.8	1,735.3	30.6	1.5
필리핀	2,171.5	△1.9	△0.1	2,752.1	2.8	0.1
태국	5,093.6	△2.0	0.0	5,910.5	3.3	0.1
인도네시아	3,262.7	1.6	0.0	3,974.7	△0.4	0.0
말레이시아	9,377.2	1.4	0.0	11,031.8	△1.7	0.0

주: 2016년 GDP 대비 ODA 규모 기준으로 정렬, 일인당 GDP는 2010년 실질가격, 일인당 ODA는 경상가격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 공여국별 추이

공여국 측면으로 옮겨와서 살펴보면, 우선 아세안에 대한 개발원조 공여의 양자·다자의 비중을 보면 2014-2016년 3개년 평균으로 양자가 109억 달러로 75%, 다자가 81억 달러로 25%의 분포를 보인다. 이 비중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 4〉 아세안에 대한 양자·다자 공여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3년 평균	비중
총ODA	11,785.0	10,447.8	10,419.0	10,883.9	100.0
DAC 회원국	9,002.2	7,689.1	7,616.2	8,102.5	74.4
다자	2,755.9	2,675.8	2,705.0	2,712.2	24.9
비DAC회원국	26.9	82.9	97.8	69.2	0.6

주: 총지출 기준
출처: OECD, Stat

양자원조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인 최대 공여국으로 2014-2016년 아세안에 평균 약 37억 달러를 공여하였고 이는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 공여의 45.1%를 차지한다. 2위는 독일로 11억 달러(13%), 3위는 미국으로 9억 달러(11%), 4위 호주 7억 달러(8%), 5위 프랑스 5억 달러(6.1%), 그리고 한국이 4.5억 달러(5.5%)로 6위를 차지한다.

<표 5>

아세안에 대한 10대 공여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4	2015	2016	3개년평균	비중
	DAC 회원국	9,002.2	7,689.1	7,616.2	8,102.5	100.0
1	일본	3,866.5	3,627.1	3,457.9	3,650.5	45.1
2	독일	1,493.2	695.8	969.4	1,052.8	13.0
3	미국	875.2	845.3	969.1	896.5	11.1
4	호주	781.2	718.3	497.6	665.7	8.2
5	프랑스	562.2	484.3	426.4	491.0	6.1
6	한국	391.5	502.0	450.7	448.1	5.5
7	영국	258.5	233.8	207.2	233.2	2.9
8	스위스	116.4	117.6	142.0	125.4	1.5
9	노르웨이	89.9	84.1	107.0	93.7	1.2
10	캐나다	93.3	76.2	82.0	83.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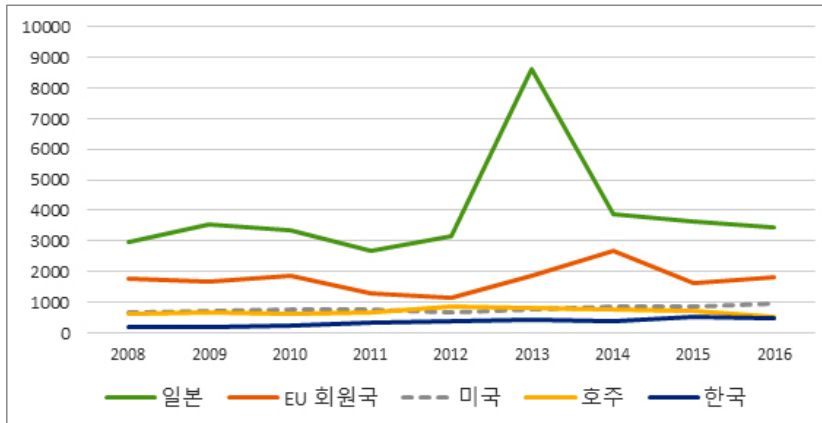
주: 총지출 기준, 2016년 실질가격, 3년 평균 기준으로 정렬, 3년 평균 기준 10대 공여국은 전체 DAC 회원국 공여의 95.5% 차지

출처: OECD, Stat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회원국을 하나로 묶어 DAC 회원국 중 5대 공여국을 국가별로 공여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2016년의 공여액은 2011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는 미약하다. 최대공여국 일본의 경우에도 2013년 미얀마에 대한 대규모 차관을 제외하고는 아세안에 대한 ODA 규모에 큰 변동은 없었다. 대체로 아세안에 대한 주요 국가의 ODA 공여규모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일본과 EU 등에서 다소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에는 2008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국만이 예외로 2008년 1.8억 달러에서 2016년 4.5억 달러로 연평균 12%의 성장을 보였다. 한국의 아세안 공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술한다.

〈그림 1〉 아세안에 대한 DAC 상위 5대 공여국 공여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총지출 기준, 2016년 실질가격
출처: OECD, Stat

아세안에 대한 다자원조의 경우 세계은행과 ADB가 2014-2016년 3년 평균 각각 11억 달러, 6억 달러로 함께 전체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EU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이하 Global Fund)이 10%로 따르고 있고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 이하 GAVI)이 3%를 공여하며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6〉

아세안에 대한 다자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2014	2015	2016	3개년평균	비중
	다자원조	2,755.9	2,675.8	2,705.0	2,712.2	100.0
1	World Bank	1,316.0	1,006.4	958.8	1,093.7	40.3
2	ADB	578.4	648.9	675.3	634.2	23.4
3	EU	265.4	372.2	393.7	343.7	12.7
4	Global Fund	269.4	233.5	323.2	275.3	10.2
5	GAVI	75.3	74.6	50.5	66.8	2.5
6	GEF	52.8	55.3	60.3	56.1	2.1
7	IFAD	-	69.7	55.6	41.8	1.5
8	UNICEF	38.1	42.9	41.9	41.0	1.5
9	OFDI	42.4	40.4	26.6	36.5	1.3
10	UNDP	32.2	29.7	22.3	28.1	1.0

주: 3년 평균 기준으로 정렬, 3년 평균 기준 10대 공여기구는 전체 다자 공여의 96.5% 차지

출처: OECD, Stat

중국의 ‘대외원조’는 대부분 OECD의 양허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ODA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 이외에도 상업차관과 수출신용, 투자 활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중국정부 역시 상세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가장 최근 공식통계는 2014년 중국 상무부가 발간한 『중국대외원조백서』로,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1개국에 140억 달러를 공여하였다.⁷⁾ 그러나 개발원조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국가별, 연도별 통계가 공개되지 않으며 아시아,

7) Government of China (2014)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륙별로 집합통계만을 제공한다.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해서 다수의 추정자료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AidData를 이용한다. AidData의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Version 1.0)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여 중국의 개발금융을 사업 수준에서 약정 기준으로 추정하고 OECD DAC의 건별통계(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⁸⁾ 특히 개별 사업을 ODA성 자금과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이하 OOF)성으로 분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idData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9억 달러의 ODA성 자금을 아세안에 공여하였고, OOF성 자금은 333억 달러를 공여하였다. 2012-2014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아세안에 대한 ODA 공여 연평균 규모는 3.6억 달러 정도이다. 이는 2014년 아세안 6대 공여국이었던 한국의 총지출 기준 공여액 3.9억 달러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중국의 아세안 ODA의 최대수원국은 캄보디아로 1.7억 달러를 공여하였고, 이는 2014년 DAC이 집계한 캄보디아의 총수원 ODA인 7.8억 달러의 21%에 해당되는 규모이다.⁹⁾ 캄보디아는 중국의 아세안 ODA성 공여의 절반 정도인 46.2%를 차지하였다. 2위는 인도네시아로 1.6억 달러, 전체의 43.3%를 차지한다. 중국의 아세안 ODA성 공여에서

8) Dreher et al (2017)

9) 캄보디아 수치는 총지출 기준임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중국의 개발재원을 ODA성 자금에 한정해서 논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아세안이나 다른 신흥시장에 제공하는 개발목적의 자금은 ODA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DAC 기준에 따르면 OOF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¹⁰⁾ 여기서 쟁점은 DAC 회원국의 ODA와 중국의 OOF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AidData에 따르면 중국은 아세안에 대해 OOF성 자금으로 2012-2014년 3년 평균 46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는 2014년 DAC 회원국들이 아세안에 공여한 ODA 90억 달러의 51%에 해당되며, 최대 공여국 일본의 ODA 39억 달러를 능가한다. 국가별로 보면 2012-2014년 3년 평균 기준 라오스가 29억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아세안 전체 약정액의 62%에 해당한다.¹¹⁾ 2위는 캄보디아로 8억 달러를 지원받고 18%, 3위는 인도네시아로 8억 달러 지원에 17%를 차지하였다.

10) Bräutigam (2011)

11)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OOF의 상당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있음. 해당사업의 정확한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총 사업비 70억 달러의 70% 정도를 중국이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는 OOF에 해당된다고 추정됨. 이 사업이 라오스에 대한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이어져 라오스의 채무 건전성(debt sustainability)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Hurley et al (2018)).

〈표 7〉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개발금융 제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지역	ODA성 자금				OOF성 자금			
	2005 -2014	2010 -2014	2012 -2014	2012 -2014	2005 -2014	2010 -2014	2012 -2014	2012 -2014
	10년 평균	5년 평균	3년 평균	국가별 비중	10년 평균	5년 평균	3년 평균	국가별 비중
캄보디아	243.0	347.6	165.6	46.2	560.1	799.4	806.1	17.5
인도네시아	84.1	123.0	155.2	43.3	686.5	493.1	764.6	16.6
라오스	58.9	34.5	29.7	8.3	1,101.6	2,087.0	2,865.6	62.3
말레이시아	0.0	0.0	0.0	0.0	130.2	0.0	0.0	0.0
미얀마	9.8	4.1	6.7	1.9	55.7	39.0	65.0	1.4
필리핀	9.8	0.8	0.5	0.2	52.4	56.0	0.0	0.0
동남아시아사업	0.1	0.2	0.5	0.1	0.0	0.0	0.0	0.0
태국	1.4	1.6	0.0	0.0	0.1	0.2	0.0	0.0
베트남	2.6	0.0	0.0	0.0	298.7	212.6	101.7	2.2
합계	409.8	511.9	358.3	100.0	2,885.4	3,687.4	4,603.1	100.0

주: 약정 기준, 2012-2014년 ODA성 자금 3년 평균 기준으로 정렬
출처: AidData(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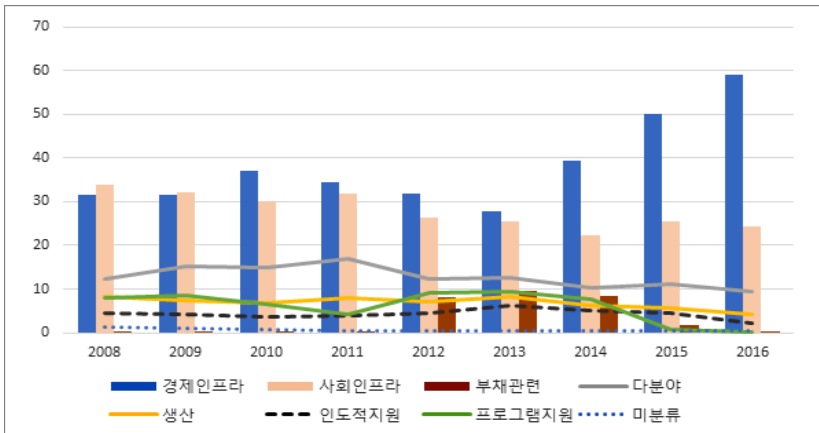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ODA 및 OOF 공여 상황을 살펴보면, ODA 기준으로 중국은 기존 DAC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10대 공여국에는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규모의 공여를 하고 있으나 언론에서 다루는 정도의 압도적 규모의 새로운 공여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발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F의 경우 아세안에 대한 기존의 최대공여국인 일본의 ODA 공여규모와 비슷하거나 능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아세안 개발협력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분야별 추이

아세안에 대한 개발원조를 분야별로 살펴볼 때 흥미로운 것은 2010년 이후 수년간 감소하던 경제인프라 분야가 2014년 이후 크게 늘어나는 반면 사회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여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3년 이동평균 약정액 기준으로 보면 2008년 경제인프라에 대한 공여는 26억 달러, 사회인프라는 28억 달러였다가 2016년에는 경제인프라가 65억 달러로 증가한 데 반해 사회인프라는 27억 달러에 머물렀다. 생산분야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다른 분야도 2011년보다 2016년에 감소하였고 부채관련 분야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얀마에 대한 부채탕감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인프라 분야와 사회인프라 분야는 2008년에는 각각 전체의 31%, 34%를 차지하다가 2016년에는 59%, 25%로 그 상대적 비중이 역전되었다.

〈그림 2〉 아세안에 대한 개발원조 분야별 추이

단위: %



주: 약정 기준, 2016년 실질가격, 3년 이동평균
출처: OECD, Stat

경제인프라를 다시 살펴보면 에너지와 교통 및 통신 분야 모두에서 공여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에너지 분야 공여액은 2008년 5억 달러에서 2016년 19억 달러로 연평균 19% 증가하였고, 교통분야 공여액은 동기간 2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연평균 11% 증가하였다.

〈표 8〉 경제인프라 중분류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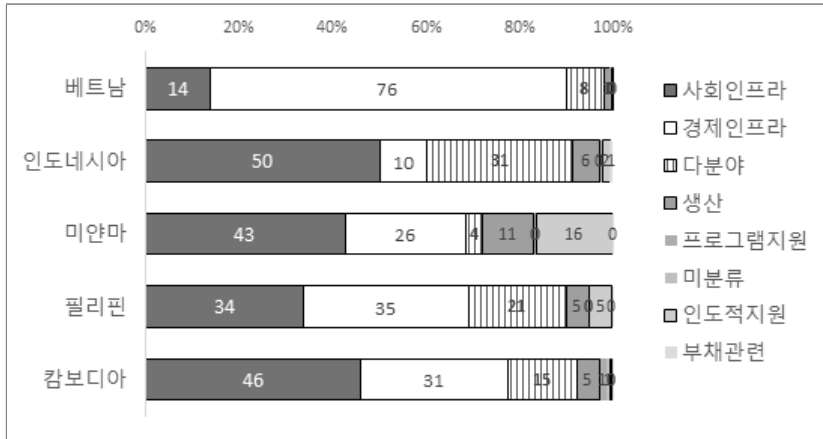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에너지	513.3	854.3	778.9	501.1	1,422.3	1,422.3	1,895.1
교통 및 통신	1,963.1	2,414.5	2,500.8	2,406.9	3,382.8	3,722.8	4,458.3

주: 약정 기준, 2016년 실질가격, 3년 이동평균
출처: OECD, Stat

국가별로 원조수원분야를 보면 최대수원국 베트남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경제인프라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두 번째 분야인 사회인프라는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세안 전체에서 예외적인 국가로 경제인프라가 사회인프라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유일한 5대 수원국이다. 필리핀의 경우는 경제인프라 35%, 사회인프라 34%로 그 비중이 유사하며 인도네시아는 반대로 사회인프라 50%, 경제인프라 10%의 분포를 보인다. 캄보디아나 미얀마 역시 사회인프라가 각각 43%, 46%로 거의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그림 3〉 2016년 주요 수원국 분야별 수원 현황



주: 약정 기준, 2014-2016년 총지출 3년 평균 상위 5대 수원국
출처: OECD,Stat

아세안 개도국, 특히 중진그룹의 경우 인프라 투자수요가 높으며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와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등 중진그룹 국가들의 투자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저조한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베트남과 같은 후발국 역시 산업화 가속화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분야별로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ODA 공여를 보면 에너지 40%, 운송 및 창고업 18%, 부채관련 16%, 농수산 10%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와 교통 분야가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양허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OOF성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경제인프라가 87%(에너지 45%, 교통 4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9〉 중국의 분야별 아세안 ODA성 자금 공여(2000-2014년 합계)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ODA	비중
에너지	2,365.9	39.9
교통	1,053.2	17.8
부채관련	949.0	16.0
농수산	608.5	10.3
광공업 및 건설	337.5	5.7
정부와 시민사회	248.6	4.2
통신	97.1	1.6
긴급대응	93.5	1.6
일반 예산 지원	68.7	1.2
기타	106.9	1.8
합계	5,928.9	100.0

주: 약정 기준

출처: AidData(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0〉 중국의 분야별 아세안 OOF성 자금 공여(2000-2014년 합계)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OOF	비중
에너지	14,940.6	44.9
교통	14,022.9	42.1
광공업 및 건설	1,568.2	4.7
통신	1,229.1	3.7
농수산	511.6	1.5
다분야	393.8	1.2
수자원	248.2	0.7
사회인프라	189.2	0.6
기타	182.5	0.5
합계	33,286.1	100.0

주: 약정 기준

출처: AidData(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III. 주요 공여국 협력전략

1. 다자개발은행

먼저 아세안에 대한 최대 다자공여자인 세계은행의 아세안 국가별 협력전략을 살펴본다. 세계은행의 경우 포용적 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력목표로 제시된 가운데, 국가별 수요와 수원여건을 고려하여 주요협력분야를 설정하였다. 대부분 수원국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에 조응하는 주제들이다. 세계은행의 베트남협력전략은 베트남의 하위중소득국 진입 이후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베트남 민간기업들의 역할강화와 전반적 인적자본개발이 주요협력분야이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정책상 인프라 투자의 높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민간부문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특히 주요 개발과제인 빈곤감소와 취약계층 보호, 거버넌스 개혁을 주요협력분야에 포함시켰다. 캄보디아의 경우 주력 수출산업인 의류·신발 산업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수출다변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된 것에 대응하고 현재 아세안에서 최저소득국이라는 점에서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가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세계은행의 아세안 주요 수원국별 협력방향

국가	주요협력분야	국가파트너십 기본틀
베트남	포용적 성장과 민간부문 참여 인적자본개발 지속가능한 환경과 복원력 거버넌스	Vietnam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period FY2018-2022
인도 네시아	인프라 건설 에너지 해양경제 지방정부서비스 국토관리 재정개혁(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지출)	Indonesia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Y2016-2020
미얀마	농촌빈곤감소 인적자본개발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부문지원	Myanmar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Y2015-2019
필리핀	정부 거버넌스 개혁 빈곤감소와 취약계층보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대응 내전종식과 재건	Philippine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eriod FY2015-2018
캄보디아	수출다변화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과 교육지원 빈곤층생업지원	Cambodia Country Engagement Note for the Period FY2016-2017
라오스	포용적 성장 인적자원개발 환경보호 거버넌스 개혁	Laos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CPF FY2017-2021

주: 2016년 ODA 총지출 기준 순서로 정렬,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제외.
출처: 세계은행 각국 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DB 역시 포용적 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력목표로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하위중

소득국 진입을 반영하여 협력목표를 경쟁력강화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향후 국가재정관리 효율화와 경제에 대한 민간참여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개발 의지를 반영하여 전력, 농촌관개시설, 도시의 수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의 분야의 투자에 적극적이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국내 교통인프라 뿐 아니라 미얀마와 주변국,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연계성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새로운 국가협력전략이 적용되는데 두테르테 정부의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인프라 건설, 수도권 이외의 남부 민다나오 등 지방개발, 또한 보건과 교육 등 사회투자를 주요협력분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빈곤감소가 핵심목표이며 라오스의 경우 자원개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비자원부문 경제분야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표 12〉 ADB의 아세안 주요 수원국별 협력방향

국가	주요협력목표/분야	주요전략/계획
베트남	고용창출과 경쟁력 강화 인프라 포용성 강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대응 개선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2016-2020 for Viet Nam
인도네시아	인프라개발 (전력, 관개시설, 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공공부문 관리 효율화 인적자원 개발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2016-2019 for Indonesia,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COBP) 2017-2019 for Indonesia

국가	주요협력목표/분야	주요전략/계획
미얀마	도·농간 연계성 및 지역과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 개선 인적자원 강화 경제현대화를 위한 구조 및 제도개혁 지원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2017-2021 for Myanmar
필리핀	인프라 투자 가속화 지방경제개발 사회투자 확대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2018-2023 for the Philippines
캄보디아	빈곤과 취약성 감소를 목표로 아래 3대 전략 추진: 포용적 경제성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개발과 통합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2014-2018 for Cambodia,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COBP) 2018-2020 for Cambodia
라오스	물리적 연계성 강화 비자원분야 성장을 위한 기술력과 노동생산성 개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2017-2020 for the Lao PDR,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COBP) for 2018-2020 for the Lao PDR

주: 2016년 ODA 총지출 기준 순서로 정렬,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제외
출처: ADB 각국 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DAC 회원국

1) 일본

일본은 아세안에 대한 최대 공여국으로 ADB를 통한 간접적 지원까지 고려한다면 양자와 다자 모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공여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은 일본의 무역과 투자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일본은 아세안에 대한 주요 역외투자자로서 아세안에 광범위한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그간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현재 아세안 전략은 외교안보적으로는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경제적으로는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본은 2013년 자유와 민주주의 지지, 해양규범 확립, 일·아세안 경제협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對아세안 외교 5원칙을 발표하였다.¹²⁾ 같은 해 12월 일본은 아세안과 ‘일·아세안 우호 협력에 관한 비전선 언문’과 ‘일·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6년 약 7,000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일·아세안 통합기금(Japan-ASEAN Integration Fund, 이하 JAIF)을 2013년 JAIF2.0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1억 달러를 추가 출연하였다. JAIF는 협력기금으로 아세안공동체 설립의 지원과 일·아세안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현재 아세안 전략에서도 인프라 협력은 핵심협력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인프라개발에 대응하여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개발금융 지원을 확대 했으며,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여 ‘양질의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12) 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보호 및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함, ② 항행이 자유롭고 열린 해양은 무력이 아닌 법과 규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확립하며,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을 환영함, ③ 다양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상호 번영을 도모함, ④ 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호함, ⑤ 젊은 세대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심화(Okano (2016))

있다. 일본은 2015년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Asia’s Future)’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동시에 향후 5년간 아시아 인프라에 1,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은 네 가지 행동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인프라 부문의 ODA 차관 확대 ②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s, 이하 PPP)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ADB와 협력 ③ 고위험 PPP에 대한 투자 확대 ④ ‘양질의 인프라 투자’가 국제표준으로 수립되도록 국제적 홍보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중 PPP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여러 세부적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개발도상국의 PPP을 위한 신종 ODA 차관 도입, ADB와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기능강화 및 교통·도시개발을 위한 일본 해외인프라 투자기구(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 Urban Development) 신규 설립이 그 내용이다. 일본은 동시에 ‘양질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후속조치로 2017년 ADB에 2년 동안 기술지원자금 4,000만 달러 기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최근 대륙부 동남아 지역협력 전략은 2015년 발표된 ‘신(新)도쿄 전략 2015’에 잘 나타난다. 2015년 일본과 메콩강 유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은 ‘제7회 일·메콩 정상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고 일·메콩 협력을 위한 ‘신(新)도쿄 전략

2015'를 채택하였다. '신도쿄 전략 2015'는 2012년 채택된 '도쿄 전략'의 후속 전략으로, 메콩 지역의 '양질의 성장' 실현과 일본과 메콩국가들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4개 전략을 포함하며,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쿄 전략에 대한 지원액 6,000억 엔보다 규모가 확대된 3년간 ODA 7,500억 엔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도시개발, 에너지, 교통 등 산업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메콩 지역의 철도 및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산업인재의 육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발전을 강화하여 양질의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2) 미국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2016년 2월 15일 캘리포니아 서니랜드(Sunnyland)에서 최초로 미-아세안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US-ASEAN Connect라는 새로운 아세안 협력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US-ASEAN Connect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며 ① 비즈니스 ② 에너지 ③ 혁신 ④ 정책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한다. 미국은 자카르타에 US-ASEAN Connect 센터를 개설하였고 본 센터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와 중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미국 역시 메콩지역 국가들과의 협의체를 설립하였는데 하부메콩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이하 LMI)가 그것으로 2009년 미국의 아시아 복귀 선언 이후 발표되었으며, 메콩 유역 국가들의 개발역량을 개선하여 아세안 내 개발 격차를 감소시키고자 설립되었다. ① 농업·식량안보 ② 인프라 ③ 교육 ④ 에너지안보 ⑤ 환경 ⑥ 보건 분야를 중점협력분야로 한다. 메콩유역국가들에 대한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해 공여국들의 원조정책을 조정하는 ‘Friends of Lower Mekong’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LMI 2016-2020 이행을 위한 종합행동계획’이 제시되었다. 미국은 2013-2015년 아시아태평양 안보 관여 이니셔티브(Asia Pacific Security Engagement Initiative)를 통해 LMI에 5,000만 달러를 공여하였다. 2016년 제9차 LMI 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을 선언하였는데, 이 파트너십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프라개발을 강조 하면서 기술 지원, 메콩강 유역 정부와 인프라개발, 관리경험 공유, 민간부문 연계성 강화를 강조한다.

3. 중국

아세안은 중국의 주변외교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중국의 아세안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중국의 세계강국 부상을 위한 지역 안보위협 해소와 주변국의 지지 확보, ② 중국과 아세안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국의 경제발전 확보¹³⁾, ③ 광시, 윈난성 등 중국

13) 중국에게 아세안은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2015년 기준 아세안은 중국 전체

접경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이다. 중국의 아세안개발협력 역시 이러한 상위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2013년 중·아세안 ‘2+7 협력틀’을 채택하였는데, 안보와 경제협력의 두 축 아래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추가자유화, 인프라 협력, 지역금융 협력, 해양협력, 안보협력, 문화교류 등 7개 분야 협력이 그 내용이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제안한 이후 중국의 아세안전략은 일대일로 구상의 틀에서 재편되고 있다. 아세안은 ‘일대일로’ 구상의 한 축인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이다. 중국은 중·아세안 정상회의, 중·아세안 엑스포, 란창-메콩 협력메커니즘, AIIB 등을 통해 중·아세안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아세안이나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개발협력전략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2014년 『중국대외원조백서』는 아프리카와 함께 아세안을 주요 협력지역으로 거론하였고 아세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협력(practical cooperation)’을 추구한다고 강조하였다.¹⁴⁾ 중국은 이 백서에서 중국의 아세안원조는 아세안통합을 위한 역내개발격차 감소를 위해 아세안 저소득국가들에게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인프라 건설, 산업생산, 농업생산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수출의 12.2%를 기록하며 3위를, 전체 수입의 11.2%를 차지함

14) Government of China (2014)

중국 역시 메콩유역국가들과 소지역협력메커니즘을 설립하였다. ‘란창(瀾滄)-메콩 협력메커니즘’은¹⁵⁾ 중국과 메콩유역 5개국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들의 협력체로 앞에서 소개한 일본의 ‘일·메콩 정상 회의’, 미국의 ‘하부메콩이니셔티브(LMI)’와 동일한 대상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은 그간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ADB에서 주도해온 GMS(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와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으로 메콩유역 협력에서 중국이 자신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협력분야는 지역 간 연계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개발, 접경지대 경제 특별구역 건설, 수자원개발, 농업개발 및 빈곤감소이다.

2015년 윈난성에서 제1차 란창-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중국 하이난성 쑤야(三亚)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양허성 차관 15억 4,000만 달러(100억 위안)와 100억 달러 규모의 크레딧라인(credit line)을 약속하였다. 또한 인적 교류 강화를 위한 란창-메콩 협력기금을 발족시켰다. 2018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2차 란창-메콩 협력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란창-메콩 5개년 행동계획(2018-2022)이 채택되었다.

중국주도로 출범한 새로운 다자개발은행인 AIIB는 2016년 1월 출범 이래 2018년 8월까지 아세안 국가에 대해 총 6건의 프로젝트(인도네시아 4건, 미얀마 1건, 필리핀 1건)를 승인하였으며 총승인액은 약 9.1억 달러

15) 란창강은 메콩강의 수원지로 티벳에서 발원함

이고 현재 인도네시아 1건, 라오스 1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세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승인된 사업들은 AIIB의 단독발굴이나 지원이 아닌 세계은행, 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이 개발한 사업에 대한 협조융자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심사중인 인도네시아 롬복의 Mandalika 관광지구 개발사업은 승인된다면 아세안에서 최초의 AIIB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3〉 AIIB의 아세안 국가대상 사업 승인 및 심사 현황

단위: 억 달러

국가	사업명	승인연도	사업기간	전체 사업비	AIIB 조달금액	협조융자 파트너
승인사업						
인도네시아	슬럼재개발	2016	2016-2021	17.4	2.2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댐개선	2017	2017-2023	3.0	1.3	IBRD
인도네시아	지역인프라 개발기금	2017	2017-2020	4.0	1.0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관개시설 현대화 및 보수	2018	2018-2023	5.8	2.5	세계은행
미얀마	민잔 (Mingyan) 화력발전소 건설	2016	2016-2018	3.0	0.2	IFC, ADB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홍수관리	2017	2017-2014	5.0	2.0	세계은행
심사중 사업						
인도네시아	롬복 Mandalika 관광지구 개발	심사중	2018-2022	3.0	2.6	-
라오스	13번 국도 개선사업	심사중	2018-2023	1.3	0.4	세계은행, Nordic Development Fund

출처: AIIB

IV. 한국의 아세안 개발협력 동향

1. 한국 양자원조 추이

한국의 아세안 개발원조 공여추이를 보면 총지출 기준 2011년 3.3억 달러에서 2016년 4.5억 달러로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하였다. 최대 공여대상은 베트남으로 2016년 1.9억 달러로 한국의 아세안 ODA 공여의 41%를 차지한다. 베트남은 그 비중이 2013년 56%에서 이후 점차 축소되고 있기는 하나 한국의 아세안 최대수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2위의 수원국은 필리핀(6,330만 달러)이며 3위는 캄보디아(5,730만 달러)이다. 증감 추이를 보면 최대 수원국 베트남은 연평균 4%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필리핀이 9%, 인도네시아가 8%를 기록하였다. 후발국인 캄보디아는 오히려 연평균 증가율 $\Delta 2\%$ 를 기록하였고 라오스도 2% 정도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국가는 역시 미얀마로 개혁개방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한국에서도 공여가 증가하여 2011년 800만 달러에서 2016년 4,73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연평균증가율은 34%에 달한다.

〈표 14〉

한국의 아세안 국가별 공여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베트남	149.3	213.0	239.8	176.9	224.2	185.4	4.0
베트남 비중(%)	45.0	54.7	55.7	45.2	44.7	41.1	-
필리핀	38.3	34.0	44.1	62.8	46.2	63.3	9.0
캄보디아	63.4	59.6	63.2	68.6	69.0	57.3	△2.0
인도네시아	32.3	45.7	38.7	28.1	46.2	50.5	8.0
미얀마	8.0	9.3	14.6	24.1	23.7	47.3	34.0
라오스	34.1	24.1	26.8	27.4	87.6	37.7	2.0
태국	4.6	3.0	3.3	3.3	4.7	8.8	12.0
말레이시아	1.9	0.4	0.1	0.3	0.5	0.4	△24.0
합계	332.0	389.1	430.7	391.5	502.0	450.7	5.0

주: 총지출 기준
출처: OECD, Stat

한국의 아세안 ODA 분야별 공여를 보면 경제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여가 사회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여보다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인다. 2016년의 경우 사회인프라 45%, 경제인프라 34%의 비중을 보였으나 2014-2016년 3년 평균에서는 사회인프라 37%, 경제인프라 4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15〉 한국의 아세안 ODA 분야별 공여 추이

단위: %

분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4-2016 평균
사회인프라	53.8	12.7	53.8	24.0	42.8	44.6	36.7
경제인프라	36.2	44.6	36.3	51.9	45.8	34.2	44.6
다분야	3.5	7.3	4.6	8.7	5.2	15.2	9.3
생산	6.1	35.2	4.2	14.3	5.8	5.5	8.7
인도적지원	0.4	0.1	0.0	0.0	0.1	0.2	0.1
미분류	0.1	0.1	1.0	1.0	0.2	0.2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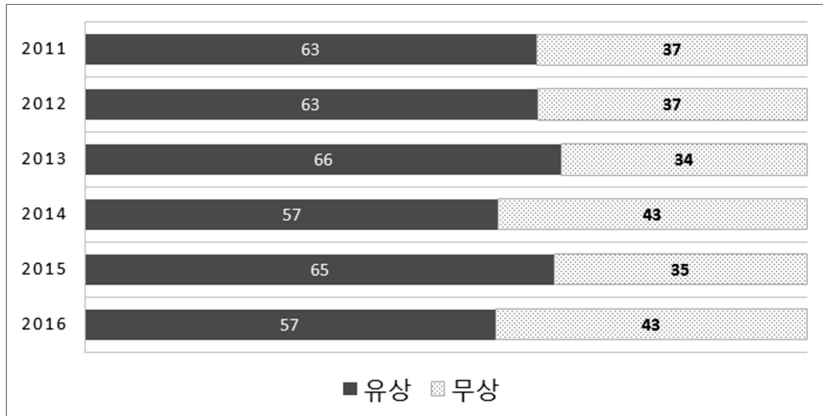
주: 약정 기준
출처: OECD,Stat

유무상 원조 비중을 보면 2011년 이후 아세안에 대한 양자원조 중 57-63% 정도가 유상원조, 37-43% 정도가 무상원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양자원조에 비해 유상원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베트남 등에 대한 양허성 차관의 규모가 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¹⁶⁾

16) 2016년 총지출 기준 유상원조 39%, 무상원조 61%, 순지출 기준 유상원조 36%, 무상원조 64% 차지함

〈그림 4〉 한국의 對아세안 유무상 원조 비중 추이

단위: %



주: 총지출 기준

출처: 한국 ODA 통계

2. 아세안 지역통합을 위한 개발협력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양자개발협력에 더하여 아세안차원의 협력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차원의 협력은 10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1) 아세안지역협력체와의 협력과 (2) 메콩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는 소지역협력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정치문화, 경제, 사회문화 세 분야로 이루어진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아세안공동체의 주요 동력은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 형성이다.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경제권의 부상과 이들 지역으로의

FDI 유입 증가에 따라 FDI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이들은 역내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여 역내 FDI 유치율을 확대하고 단일 소비시장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2015년 AEC 출범과 함께 ‘AEC 청사진 2025’를 발표하였고 경쟁력 있는 통합 경제 구축을 그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세안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aster Plan for ASEAN Connectivity 2025)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물리적, 제도적 연계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아세안 경제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은 회원국 간 개발격차이기 때문에 그 해소가 중요한 통합의제로 제기되어 왔다. 아세안은 이를 위해 별도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가 그것이며 농업,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CLMV의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한국은 한·아세안협력기금을 1990년 설립하여 지원규모와 범위를 지속 확대한 결과 현재 연간 7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로 인적교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17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 따라 그 기금 규모가 1,400만 달러로 두 배로 증액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일본, 미국 모두 대륙부 동남아 국가들인 메콩강 유역국가들과 별도의 소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연간 100만 달러의 한·메콩협력기금을 운영해왔는데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태국에 위치한 국제기구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인적교류 사업을 지속해왔다. 한·메콩 협력기금 역시 기금 규모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증액될 예정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아세안 개발협력동향을 요약하자면 먼저 경제성장으로 전체적으로 원조수원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특히 최대수원국인 베트남에서 그 둔화세가 완연하고 국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수십 년 만에 수원자격이 복원된 미얀마에서만 사실상 유일하게 원조수원이 크게 늘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 최대수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DAC 주요공여국, 다자기구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최근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법정상한선인 GDP 대비 65%에 접근해가고 있다.¹⁷⁾ 베트남 국가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 해외차입금의 급증이 아닌 국내차입금의 급증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국가부채의 급증은 수원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베트남이 경제성장으로 2017년 IDA 차관 자격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채무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수원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얀마는 2011년 개혁개방 이후 2013년 수원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원조가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도 GDP 대비 ODA 규모나 1인당 ODA 규모를 보면 향후 원조증가 여지가 대단히 크다. 다만 아직 미얀마

17) 다만 2016년 63.6%였던 국가부채는 2017년에는 61.4%로 안정화된 상태임

정부와 사회의 수원역량의 제약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아세안의 수원규모는 베트남의 수원이 얼마나 둔화되는지, 그리고 미얀마에 대한 공여가 얼마나 확대될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장기적인 이슈는 수원국 개발수요의 구조적 변화이다. 아세안 개도국들이 대부분 경제성장을 통해 멀지 않은 미래에 중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세안에 대한 개발협력은 최빈국이나 취약국 보다는 중진국과의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여국들은 장기적으로 중진국 협력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개발수요를 확보하고 협력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UN이 지정하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에는 아세안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속해있다. 2016년, 3년마다 발간되는 정기검토보고서에서 UNCTAD는 2025년까지 현재 48개국인 최빈국이 32개국으로 축소되고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를 제외한 라오스와 미얀마가 최빈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¹⁸⁾ 이 경우 캄보디아만 UN이 지정하는 최빈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현재 아세안에 세계은행 기준의 저소득국가(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995 이하)는 없다. 2017년 베트남은 IDA 차관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졸업하였고 2025년까지는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 모두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¹⁹⁾

공여국 측면에서 보면 DAC 회원국 내에서는 일본이 2위와의 격차가 현격한 최대공여국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신흥공여국인

18) UNCTAD (2016)

19) Severino and Moss (2012)

중국은 최근 공세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AidData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ODA성 자금의 공여는 매우 미미한 반면 양허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OOF성 자금으로는 최대공여국인 일본의 ODA 공여규모에 근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개발협력 확대는 신흥공여국이 등장하여 수원국에 필요한 개발수요를 채워주는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급격한 원조 규모와 사업의 증가로 인해 수원국 입장에서는 원조분절이 심화되고 거래비용이 급증하여 원조 효과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불투명성이 문제로 인식된다. 대규모 인프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와 수원국 정부가 정확한 사업내역과 양국간 합의된 지원조건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사업을 위한 대규모 차관도입으로 인해 채무건전성(debt sustainability)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채무건전성 악화는 수원국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개발협력 측면에서도 수원여건이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공여국 입장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에 대한 분야별 공여추이를 보면 최근 경제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여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인프라 등 다른 분야는 큰 변동이 없어 경제인프라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아세안 수원국들의 에너지, 교통 부문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아세안 주요국들이 인프라 투자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아세안에 대한 주요 공여국들의 개발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다자개발은행의 경우 대체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협력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별 발전단계와 특수성을 고려한 주요협력분야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세안 최대수원국인 베트남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은행과 ADB 모두 베트남과의 협력전략을 재조정하여 민간부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정책에 부응하여 인프라 투자 역시 주요 협력분야로 선정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주요 양자공여국들의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은 이러한 지역적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AIIB 설립에 대응하여 일본이 아세안을 포함하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인프라 구상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인프라 대신 ASEAN-Connect 등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중국과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한국의 아세안 개발협력 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 역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장기적 개발협력 수요 규모와 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지역이며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중진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개발재원 다양화를 들 수 있는데, 개발재원 측면에서 기존의 좁은 의미의 ODA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넓은 의미의 혼합금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소득증가는 개발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중진국 진입은 오히려 개발수요를 급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재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혼합금융 사업방식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DAC 회원국 중 아세안에 대한 5-6위의 상위 공여국이며 그중 공여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아세안 주요수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원조흡수역량, 또한 기존 원조의 효과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ODA를 급격히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한국의 對아세안 ODA 전략에서 현재 중요한 것은 ODA 효과성 제고 등 내실화이며 한국의 전체 ODA 예산의 증액으로 인해 아세안 ODA 공여가 확대 되더라도 원조 내실화가 수반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분야별로는 특히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인프라 분야를 중시하는 한국의 ODA 기존 패턴과 부합한다. 따라서 기존의 對아세안 ODA 분야별 비중 역시 크게 조정할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필요한 변화는 한국의 아세안 개발협력 내실화를 목표로 한국의 정책담당자들과 원조수행기관들이 아세안 국가별로 5년,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수원국의 소득증대와 수요변화에 따른 중장기 협력전략을 세워보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에 대한 양자원조 이외에도 아세안지역협력을

지원하는 지역차원의 개발협력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아세안사무국과 수행하는 한·아세안협력사업은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아세안지역통합이라는 아세안의 중요한 지역의제를 다루고 있고 매년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보고될 수도 있으므로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한·아세안 협력에 상징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오윤아·김미림 (2017). 캄보디아의 수출다변화 추진정책과 과제. KIEP 기초자료 17-08.
- 오윤아·신민이·김미림·이신애 (2017).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7-05.

해외문헌

- Bräutigam, D. (2011). Aid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ese Foreign Aid and Development Finance Meet the OECD-DAC Aid Regim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3(5): 752-764.
- Dreher, A., Fuchs, A., Parks, B.C., Strange, A. M., & Tierney, M. J. (2017). Aid, China, and Growth: Evidence from a New Global Development Finance Dataset. AidData Working Paper #46. Williamsburg, VA: AidData.
- Government of China (2014). Foreign Aid White Paper 2014.
- Hurley, J., Morris, S., & Portelance, G. (2018). Examining the Debt Implication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a Policy Perspectiv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Okano, Y. (2016). "Japan-ASEAN Relations Post 2015." Mission of Japan to ASEAN.
- Severino, J. M., & Moss, T. (2012). Soft Lending without Poor Countries: Recommendations for a New IDA.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Tian, S. (2016). "China Focus: Leaders of Lancang-Mekong countries convene, China plans loans for infrastructure." Xinhua.
- UNCTAD (2017).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6: The Path to Graduation and Beyond: Making the Most of the Process.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 World Bank (2018). Taking Stock: An Update on Vietnam's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Hanoi: The World Bank in Vietnam.

온라인 자료

한국ODA 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 (검색일: 2018.8.10)
AidData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 Version 1.0.
(<http://aiddata.org/data/chinese-global-official-finance-dataset>)
(검색일: 2018.8.10)
AIIB (<https://www.aiib.org>) (검색일: 2018.8.30)
ASEANstats (<https://data.ASEANstats.org>) (검색일: 2018.8.11)
OECD.Stat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18.8.15)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databank.worldbank.org/data/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2018.8.10)

동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방향¹⁾

윤정현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목 차

- I. 머리말
- II. 동아프리카 주요국의 산업개발 추진
 - 1. 동아프리카 산업구조
 - 2. 산업발전 정책
- III. 동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 1. 주요 선진국의 동아프리카 산업개발협력
 - 2. 국제기구의 동아프리카 산업개발협력
- IV. 한국의 동아프리카 산업협력 및 개발협력 현황
 - 1. 한국의 동아프리카 산업협력
 - 2. 한국의 동아프리카 개발협력
- V. 맺음말
 - 1. 시사점
 - 2. 동아프리카 산업개발협력 방향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주동주 외(2017) 「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 동부 아프리카 주요국을 대상으로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1. 머리말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유럽 열강의 오랜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끊이지 않은 내전과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 발전의 궤도에 전혀 올라서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는 다른 신생독립국들이 밀집한 아시아나 중남미와 달리 ‘위기의 대륙(Continent in Crisis)’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아프리카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서방의 여러 경제기관, 컨설팅 회사, 언론매체들로부터 ‘떠오르는 대륙’, ‘지구상의 마지막 성장엔진’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했다. 일례로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를 ‘희망 없는 대륙(Hopeless Continent)’으로 다루어왔으나, 근래 와서는 정반대로 ‘희망 찬 대륙(Hopeful Continent)’이라며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특집기사들을 연달아 게재하였다.²⁾

이는 무엇보다도 ‘암흑의 대륙’으로 명명되었던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가 2000년대 들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내전 감소라는 대내적 요인과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동시에 결합되면서 아프리카 경제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여

2)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에 대한 The Economist지의 일련의 특집기사들 제목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알 수 있음. 2000년 5월 11일자 ‘희망 없는 아프리카(Hopeless Africa), 2000년 5월 13일자 ‘희망 없는 대륙(The Hopeless Continent), 2011년 11월 3일자 ‘떠오르는 아프리카(Africa Rising), 2013년 3월 2일자 ‘떠오르는 아프리카: 희망찬 대륙(Africa Rising: A Hopeful Continent), 2016년 4월 20일자 ‘12억의 기회’(1.2 billion opportunities) 등.

지난 2001-2014년의 15년간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 성장률이 5%에 달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각각 1.8%, 2.6%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실적인 것이다.

이 같은 경제성장 성적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아프리카 부정론(Afro-pessimism)을 불식하고 아프리카 긍정론(Afro-optimism)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물론 대륙 전체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이 무수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프리카는 과거의 어둡고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모습으로 부상함으로써 ‘아프리카 성장론’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프리카 경제가 2014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국제 원자재 가격급락이라는 대외변수에 직면하면서 급강하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졌다. 향후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과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및 재균형(Rebalancing)³⁾, 글로벌 경제침체, 낮은 수준의 국제 원자재

3) 중국은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이며 특히 구리, 철광석, 석탄, 석유 등 광물자원의 블랙홀이자 대규모의 투자국, 원조 및 차관 제공국으로서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구조가 수출 및 투자 중심에서 소비로 전환됨에 따라 아프리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 중국의 對아프리카 수입액은 전년대비 38% 이상 감소함. 2000년에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규모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보다 훨씬 적은 7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360억 달러로 20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미국(333억 달러→453억 달러), 영국(136억 달러→231억 달러), 프랑스(273억 달러→501억 달러) 등은 아프리카와의 무역규모 증가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 2010년 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미국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해 오고 있음.

가격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⁴⁾는 최근 특집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회복과 양호한 기후조건에 따른 농산물 작황 호조 등을 전제로 아프리카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제전반과 에너지 등 원자재 시장구조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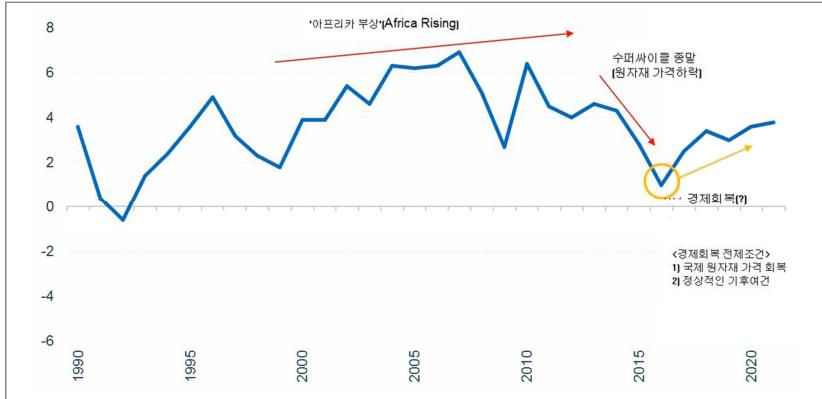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고유가가 지속되었던 지난 15년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국가는 앙골라,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수단 등 산유국이었으나,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 급락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급락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그림 1>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산유국들이 밀집해 있는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5.7%에서 2016년에는 0.1%로 떨어졌다. 이들 산유국들은 2014년 6월 배럴당 115달러를 기록했던 국제유가가 2017년 1월에는 39달러로 하락하면서 실물부문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에 있어 커다란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Charlotte King (2017)

〈그림 1〉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단위: %



출처: Charlotte King (2017)

이에 반해 아프리카 동부지역의 경제성장은 고공행진을 지속해 오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동부지역의 경제성장 속도는 서부 등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괄목할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지역은 서부 및 북부지역(석유), 남부 및 중부지역(금속광물)과는 달리 자원빈국이고, 국민소득 수준 또한 북부 지역의 1/4, 남부지역의 1/3 미만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지만, 정치적 안정과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기반으로 민간 및 공공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성장 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바야흐로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이 서부 산유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최근 5년간(2011-201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개국(Top-10)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인도, 베트남 등에 이어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초고속 경제성장국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앞으로도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동부 아프리카 들이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⁵⁾는 향후 5년간(2017-2021년)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최소 5% 이상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부 아프리카 지역은 정치적 안정성, 거시경제의 안정성, 투자환경 개선 등이 결부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아프리카 전체 투자의 26%(투자건수 기준)를 차지하며 남아공이 있는 남부아프리카(27%)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맥킨지 보고서⁶⁾는 정치 및 사회적 안정성, 경제 기초여건(외환보유고, 외채, 경제다각화, 수출 구조) 등을 토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을 측정했는데, 동아프리카 6개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모리셔스)이 '고성장 국가이면서 경제기초여건이 양호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연구에서는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산업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검토하였다.

5) Charlotte King (2017)

6)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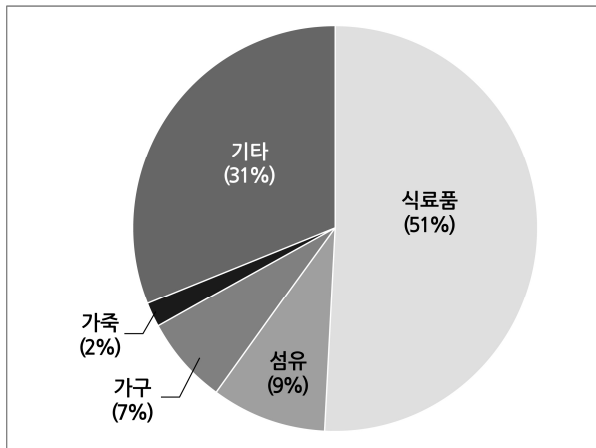
II. 동아프리카 주요국의 산업개발 추진

1. 동아프리카 산업구조

개발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 아프리카의 주요 5개국을 평균하여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비중을 보면 식료품이 51%로 절반을 넘고, 뒤를 이어 섬유(9%), 가구(7%), 피혁(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동아프리카의 주요 제조업: 업종별 구성비

단위: 비중, %



출처: The Swedish Trade & Investment Council (2016)

주: 1) 기타 산업은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 화학. 식료품에는 담배 포함

2) 5개국(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기준임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 화학 등 현대적 의미의 산업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또는 비교우위를 갖추기 어려워 주력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중간 또는 고급기술의 제조업보다는 저기술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동아프리카의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아프리카는 현재의 내부 역량과 대외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과거 한국 등 동아시아와 같은 산업화의 패턴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발전초기 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정도에 와있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주요 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노력여하에 따라 비교우위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그 동안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발전을 이룬 중국이 최근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조업 기반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주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⁷⁾ 이런 이유 등으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동아프리카 지역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새로운 허브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중국에서도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2012-2015년 동안 산업용 로봇 도입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남

동아프리카 경공업의 잠재적 발전요인으로는 정치적 안정성과 투자 환경 개선,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정부의 산업화 의지 이외에도 미국(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이하 AGOA)과 유럽(Everything But Arms, 이하 EBA)의 무역특혜(무관세) 제공에 따른 선진국 시장접근성 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의류, 가죽제품, 농산품(일부) 등 경공업 제품을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미국은 케냐 직물·의류 수출의 92%를 차지하고 있다⁸⁾

〈표 1〉 미국과 유럽의 對아프리카 관세특혜 제도

< AGOA, EBA, ACP >
<p>AGOA는 2000년 5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무역개발법(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 P.L. 106-200)을 그 취지에 맞추어 부르는 속칭이다.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무역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에서 제외된 1,800개의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직물 및 의류, 신발, 가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초 15년간 유효한 한시법이었으나, 2015년 6월 개정되어 2015년까지 10년간 유효기간이 늘어났다.</p> <p>EBA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가 2001년에 도입한 무역특혜 제도로서 전세계 49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quota-free)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EBA는 WTO의 일반 원칙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을 벗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관세특혜를 제공하는 일반무역특혜관세제도의 하나이다. GSP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에 따라 기본 GSP, GSP+, EBA로 구분 적용된다.</p> <p>EU는 GSP와 별개로 과거 식민지국가였던 아프리카-태평양-카리브해지역 국가들(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이하 ACP)에게 독자적인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0년에 78개 ACP 국가들과 아프리카 베냉의 코토누(Cotonou)에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였다.</p>

8) The Swedish Trade & Investment Council (2016)

또한 역내 시장통합이 탄력을 받으면서 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고 있어 역내 무역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이하 EAC)는 관세동맹(Custom Union) 단계로 발전하여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해 오고 있다. 제조업(주로 경공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수출용 원자재(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 특혜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산업발전 정책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조업의 발전 없이는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산업화를 국가개발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방향을 보면 ① 비교우위 산업(경공업)의 집중적인 육성, ②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 확충, ③ 산업단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 차원에서도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오는 2032년 2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제품생산의 다각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현재 8%에 불과한 공산품의 수출비중을 2032년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도 내놓고 있다.

동아프리카 주요국의 산업화 정책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티오피아는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2025년까지 중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2010년부터 ‘성장과 구조변환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이하 GTP)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⁹⁾ GTP는 농업 부가가치 증대, 제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개발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현재 GDP 대비 6%에 불과한 제조업 비중을 2020년에는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에티오피아는 여러 정부 전략 문서를 통해서 우선순위 산업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문서로는 2002년에 작성한 산업발전전략(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과 에티오피아 산업발전 로드맵(Ethiopia Industrial Development Roadmap 2013-2025)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전략문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산업이 섬유 산업, 피혁산업 및 농산물 가공 산업이다. 아울러 이들 산업의 발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섬유산업발전연구소, 피혁발전연구소 등과 같은 조직도 만들었다.

케냐는 오는 2030년 중진국 진입, 신흥 공업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전략, ‘비전(Vision) 2030’을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거시경제안정,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확충, 에너지 개발, 기술 혁신, 토지개혁, 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개혁 등 10대 과제를 핵심

9) ‘성장과 구조변환계획(GTP) 1’은 ‘빈곤타파를 위한 개발지속 및 가속화 계획(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 PASDEP)’의 후속 정책으로서 2010/11년부터 2014/15년의 기간 동안 GDP 실질성장률을 연평균 최소 11% 이상 증가시켜 계획기간 종료 시 에티오피아 경제 규모를 최대 2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이를 위해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이라는 이중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성장과 구조변환계획 2’를 2015년부터 이어서 추진하고 있음.

이슈로 다루고 있다. ‘비전 2030’은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Medium Term Plan, 이하 MTP)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MTP-1(2008-2012년) 단계를 지나 MTP-2(2013-2017년)가 추진되고 있다. 농업 및 축산업 발전, 농업 인프라 개선, 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이하 SEZ), 중소기업 육성 등이 핵심적인 추진과제들이다. 이와 더불어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업개발정책(National Industrial Policy Framework)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5년 9월 식품가공, 섬유산업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11%에서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산업구조전환프로그램(Kenya's Industrial Transformation Program)을 발표했다. 라무, 몸바사 등 연안지역은 물론 나이바샤 등 내륙지역에 걸쳐 산업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섬유와 피혁산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케냐 정부는 자국을 동아프리카의 산업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국가개발 목표를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표 2〉 케냐의 산업개발계획 개요

목표	GDP 대비 제조업 비중: 15%	100만 개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 투자 확대 (현재의 5배)	투자환경 개선 (2020년 50위)	
실천방안	차, 커피, 원예, 농작물, 섬유, 피혁 등의 수출 확대	농수산물 가공 산업단지 활성화	건설 및 석유·천연가스 개발투자 확대	IT, 관광, 도소매업 등 서비스 부문 활성화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환경 개선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산업단지 개발 확대	기술인력 양성	국내외 투자 유치	산업 육성 펀드 조성

출처: 코트라(2015)

탄자니아는 오는 2025년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개발비전 2025'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5개년 국가발전계획(Five Year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개발 분야는 인프라, 농업, 제조업, 인적자원개발, 무역, 공공재정 등 많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식품(농가공), 섬유, 피혁 등의 경공업 분야 육성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섬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섬유단지 개발과 이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오래 전부터 섬유산업 육성에 나서 1999년 면화발전기금(Cotton Development Fund: CDF), 2006년 면화발전신탁기금(Cotton Development Trust Fund: CDTF) 등을 설립하였고, 2012년에는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 직속의 섬유개발기구(Textile Development Unit: TDU)를 설립했다. 이어 2013년에는 섬유개발기구와 함께 섬유산업의 발전을 이끌 섬유·의류 제조업협회(Textile and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anzania: TEGAMAT)를 설립했다.

르완다 정부 역시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발전정책(National Industrial Policy)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산업, 섬유와 피혁 등 주요 산업에 국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특히, ICT 산업을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인 『비전2020』 (Vision 2020) 및 『경제개발 및 빈곤감축전략』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2007-2012, 이하 EDPRS)에서는 ICT 산업을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선정하고 있다.

섬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몇몇 섬유업체들이 키칼리(수도) 산업단지 내 의류 및 신발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 내에는 5ha 규모의 의류전용 단지를 별도로 조성했다.

르완다 정부는 키칼리 산업단지에 실크 생산을 위한 누에고치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투자규모는 300~500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르완다 정부의 섬유산업 정책은 무역정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에는 섬유제품의 국내생산 촉진과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중고 의류제품(신발 포함)의 단계적 수입금지에 들어갔다. 이어 2016년에는 국내 섬유산업 보호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섬유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중고 의류수입에 대해 관세인상(Kg당 0.2달러 → 2.5달러, 중고신발은 Kg당 0.5달러 → 5.0달러) 조치를 단행했다.

EAC는 이러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호응하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제조업 분야로 전환하는 산업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아프리카 역내 시장의 규모가 아프리카 내에서 큰 만큼 이를 바탕으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여 회원국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표 3〉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조업 발전전략

구분	정책 프로그램	핵심 목표
에티 오피아	- GTP(성장과 구조전환 계획) - 산업개발전략(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 8대 제조업(섬유, 피혁, 농가공 등) 집중육성 - 제조업 비중: 20% 달성
케냐	- 비전 2030 - 중기(5년) 개발계획(MTP) - 산업개발정책(National Industrial Policy Framework)	- 제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확대 - 제조업 비중: 15% 달성 - 제조업 성장률 10% 달성
르완다	- 비전 2020 - 국가산업정책(National Industrial Policy)	- 농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 제조업 비중: 20% 달성
탄자니아	- 개발비전 2025 - 5개년 국가발전계획(Five Year Development Plan)	- 제조업 성장률 확대 - 산업단지(SEZ, EPZ) 개발
EAC	- EAC Industrialization Strategy 2012-2032	- 시장통합을 통한 경제교류 확대 - 역내 가치사슬 창출(공산품의 다각화 및 제조업 발전) - 산업정책 개발역량 강화, 기술개발 및 R & D 확대, 중소기업 육성

출처: AfDB(20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III. 동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1. 주요 선진국의 동아프리카 산업개발협력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개발 정책에 부응하여 주요 선진국들도 이들 국가와의 산업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중국이 인프라 및 산업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은 보건, 빈곤 감소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는 있지만 산업 분야에도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영국의 동아프리카 지원 전략

1969년에 피어슨 위원회(The Pearson Committee)가 늦어도 1980년 이전에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이하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 지출할 것을 제시하고, 유엔이 1970년 10월 24일 이를 총회결의안으로 채택한 이래 이 목표치는 국제원조 사회의 중요한 권고 사안이 되어왔다.¹⁰⁾ 영국은 2013년에 G7 국가 중 이 목표치를 달성한 첫 국가가 되었다.¹¹⁾ 또한 이 해에 약 179억 달러를 공여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ODA를 공여하는 원조대국이 되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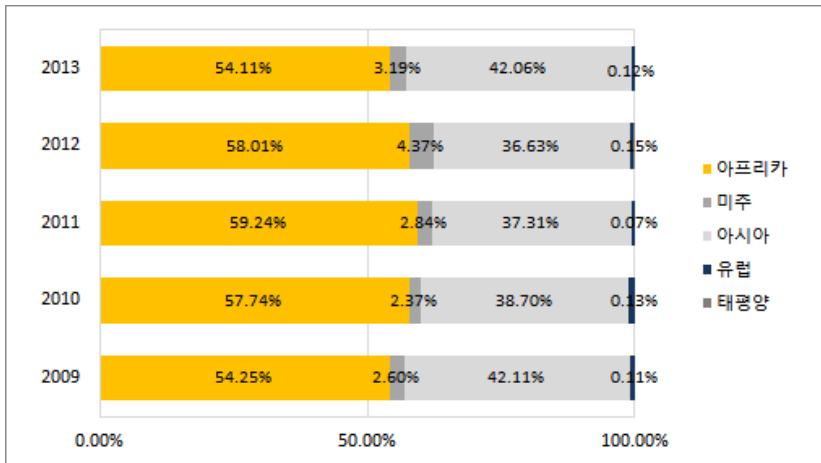
10) 1993년 국가회계시스템(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변경과 더불어 GNP는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로 대체되었으나 이 두 항목이 상이한 것은 아님

11) G7(7개 국가 그룹)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을 포함하고 있음

12) 2016년 독일이 ODA의 규모를 약 247억 달러로 늘림으로서 통계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으나, 영국은 GNI의 0.7% 개발협력 목표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영국은 <그림 3>에서 보듯이 아프리카에 양자개발협력 예산의 50%가 넘는 규모를 지원해 왔으며, 액수도 약 18억 파운드(2009년) → 20억 파운드(2010) → 21억 파운드(2011) → 22억 파운드(2012) → 25억 파운드(2013) → 26억 파운드(2014) → 28억 파운드(2015)로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¹³⁾ 이는 영국의 과거 식민지가 아프리카 각지에 산재해 있고, 특히 동아프리카에 주요국들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림 3> 영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비중



출처: DFID(20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사실 유럽 각국은 자국의 구식민지 지원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우선순위의 빈곤국(les pays pauvres prioritaires)을 지원

13) DFID (2016)

한다는 구실로 베냉, 지부티, 마다가스카르, 니제르, 차드 등 프랑스어권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OIF) 16개 아프리카 국가에 50% 이상의 개발협력자금을 집중시키고 있다.¹⁴⁾ 벨기에, 스페인도 그러하며, 포르투갈 역시 모잠비크, 앙골라, 상 뚜메 뿌린시베 등 前식민지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영국 역시 영연방 국가(British Commonwealth)에 개발협력자금을 집중시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최근 영국원조의 최대수혜국의 하나로 부상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보인다. 이는 프랑스가 가나 등 ‘프랑코포니’가 아닌 나라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국익과 원조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은 공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어느 정도 양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기준이 모호한 해외개발지원의 흐름은 영국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왜 영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인도와 중국에게까지 원조를 공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여 원조의 무용성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기도 한다.¹⁵⁾

14) 일반적으로 프랑코포니(Francophonie)로 불림. 가나와 모리타니아는 ‘프랑코포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프랑스의 집중원조국 대상에 속해 있음.

15) 표면적으로 영국은 2014/2015 회계연도에 인도와 중국에 영국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를 통한 직접 원조는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지만, DFID의 투자기구인 영연방개발공사(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 CDC Group) 등을 통한 비공식적 ‘투자’는 계속되고 있음. 이 문제의 배경에는 매우 복잡한 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더 이상 다루지 않음.

한편, 영국은 그동안 개발협력에 대한 전략적 비전이 결여되어 원조 정책의 일관성이 취약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¹⁶⁾ 이와 같은 비판에 따라 2015년에 영국 개발협력전략의 기본틀인 ‘영국의 원조: 국익의 관점에서 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① 글로벌 평화와 안보 및 거버넌스의 강화 ② 탄력성과 위기 대응성의 강화 ③ 글로벌 번영의 촉진 ④ 극빈곤의 해결과 세계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지원 등 영국의 해외지원에 대한 비전의 성취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¹⁷⁾

이와 같은 중기적 개발협력 비전이 브렉시트(Brexit) 이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주창하는 ‘글로벌 영국(Global Britain)’의 비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운용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영국은 원조대국으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며, 원조의 투명성과 효과성(value for money)에 입각한 영국 원조의 원칙과 GNI의 0.7% 이상을 개발협력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는 점을 새로운 전략에서 재확인하고 있다.

영국의 동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전략도 개발협력 비전이라는 큰 틀 내에서 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의 산업

16) OECD (2014)

17) Her Majesty's Treasury (2015)

개발과 중소기업 개발협력 사업은 빈곤감소와 경제·사회개발 차원에서 영국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협력 아젠다이며, 영국은 현재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중소기업 진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¹⁸⁾

(2) 미국의 동아프리카 지원 전략

미국의 해외개발협력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순으로 지원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1980-2012년) 아시아 지역에는 약 2,050억 달러, 유럽 지역에는 약 2,000억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같은 기간 아프리카(사하라이남)에는 약 1,200억 달러가 지원되었다.¹⁹⁾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진출로 인하여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 50년간 동아프리카 원조는 1960년 2억 1,100만 달러에서 2006년 560억 달러로 2,661% 증가하였다.²⁰⁾

지난 30년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수원국은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치, 그리고 경제적 요인이 미국의 해외협력사업을 움직이는 동력임을 감안할 때, 미국 안보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미국의 주요 협력 대상국임은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18) DFID의 프로그램 역시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성평등 등 다면화된 하부 요소(sub-components)를 포함하고 있음

19) Kafayat Amusa (2016)

20) Kafayat Amusa (2016)

미국의 동아프리카 지역협력전략은 ‘통합하고 번영하며, 회복력 있는 동아프리카(integrated, prosperous and resilient East Africa)’라는 아프리카 지원의 중기 비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외교 및 아프리카 외교의 아젠다와 부합한다. 이것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이하 AU)의 ‘아젠다 2063’, ‘아젠다 2030’등을 반영하여 수원 지역 파트너 기관의 전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²¹⁾

미국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로 진출한 2000년 이후 아프리카의 제조업 지원 등 산업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발을 빼는 모양새이다. 반면 보건과 교육,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사회 부문의 개발 아젠다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프리카의 경제개발과 빈곤 감소에 있어 중소기업과 산업, 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관협력이나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에 기반을 둔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즉 소액금융, 중소기업 금융 등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 사항 중 금융 접근성의 강화와 같은 기업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생산 활동 등을 포함한 산업 부문보다는 식량 안보와 빈곤 감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프리카의 농업 중소기업 부문에 지원의 초점을 두고 있다.

21) USAID (2015)

(3) 일본의 동아프리카 지원 전략

일본의 개도국 지원 패턴은 전반적으로 1970년대 아시아 일변도를 탈피하여 상대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지원액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일본의 개도국 지원액은 아시아 지역에 94.4%로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이 비율이 58.3%로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지원액 비중은 1970년 1.8%에서 2014년 13.2%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고, 아프리카에서 ‘잃어버린’ 일본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2016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600억 달러를 아프리카의 경제개발 지원에 약속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은 ‘제한적인 국가재정’으로 인하여 중국의 반 정도인 액수, 즉 향후 3년 간 300억 달러의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이다.²²⁾ 일본은 이와 같은 지원규모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양질의 인프라 건설’과 ‘양질의 인력자원개발’을 양대 축으로, ‘지원의 규모’보다는 ‘지원의 질(quality)’에 초점을 두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이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원규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꾸준히 늘어왔다. 아프리카에 대한

22) Takashi Tsuji (2016)

23)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나이로비에서의 TICAD VI에서 행한 기조연설에 이와 같은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의 기본 전략이 반영되어 있음

지원액은 1970년 약 8백만 달러에서 2000년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4년 16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액 기준으로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이며, 중남미와 비교해 보면 약 3.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일본의 개발 협력 전략에 있어 중요한 축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4> 일본의 대륙별 개발협력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SSA)		중남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70	419.4	94.4	8.2	1.8	2.3	0.5
1980	1,648.3	72.8	243.7	10.8	133.1	5.9
1990	5,140.1	61.7	887.3	10.6	637.6	7.7
2000	7,630.8	60.1	1,078.6	8.5	1,120.5	8.8
2010	8,106.2	53.1	1,835.3	12.0	1,005.6	6.6
2011	7,963.1	48.4	3,194.5	19.4	851.6	5.2
2012	8,156.9	56.2	1,843.9	12.7	474.9	3.3
2013	12,526.4	63.9	2,896.5	14.8	387.5	2.0
2014	7,271.2	58.3	1,643.3	13.2	434.2	3.5

출처: 日本外務省 (2017)
 주: 비중은 총액 대비 %

최근 일본의 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전략은 2013년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5회 아프리카개발회의(The Fif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이하 TICAD V)」에 기초하여 아프리카의 광역 인프라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가

수년 간 에티오피아에서 시행해 온 ‘카이젠(kaizen, 改善)’ 프로그램의 경험에 바탕을 둔 ‘One Stop Border Post(이하 OSBP)’ 프로그램,²⁴⁾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Great Rift Valley) 지열개발을 주요 축으로 하는 전력 개발, 그리고 산업인력개발 이니셔티브 등이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아프리카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개발 계획을 근간으로 한 광역개발계획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경제회랑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MP)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플랜에 관해 JICA는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경제발전 기반강화를 통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하고,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요구되는 민간 투자 촉진과 개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 일본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⁵⁾ 201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TICAD VI에 따른 중점 개발지역의 경제회랑개발계획, 즉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북부경제회랑, 나칼라 회랑(모잠비크), 그리고 서아프리카 ‘성장의 고리(成長の環)’광역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은 2017년 초 모두 완성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다년도 사업의 추진은 (1)일관성(一貫性)의 유지와 (2)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노력이 일본의

24) OSBP는 ICA(The Infrastructure Consortium for Africa)의 주축 프로그램이며, 일본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미국 등과 더불어 공여국 그룹에 속해 있음

25) JICA (2017)

對아프리카협력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관성의 유지는 아프리카 개발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며,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접근 방식의 필요성은 아프리카가 현재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일본의 대외협력 창구인 JICA는 TICAD VI의 후속사업 개발이라는 틀에서 산업개발 지원전략을 설계하고 있으며, 회랑개발과 이에 따른 인프라 정비 계획 외에도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 협력의 간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인 카이젠(改善) 프로그램의 경험에 바탕을 둔 OSBP, 전력 개발, 아프리카 청소년을 위한 산업 인재 육성 이니셔티브(African Business Education: ABE), 산업정책과 투자 촉진 지원, 일본 기업과의 제휴 등 아프리카의 성장을 일본의 성장으로 연결하려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의 동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전략이 이와 같은 對아프리카 지원전략의 큰 틀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설계, 수행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4) 중국의 동아프리카 지원 전략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에서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특히, 중국은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2000년 최초 개최

이후 3년마다 개최해오고 있으며 최근 2018년 9월 3-4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7차 포럼에서는 '더욱 긴밀한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구축에 관한 베이징 선언'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베이징 행동계획(2019-2021년)'을 채택하였다. 또한, 2015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아프리카 10대 협력 계획'을 제기한 이래 지난 3년 간 동 계획을 추진할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아프리카의 공업화, 농업현대화, 인프라개발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공표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프리카 각국의 인프라 건설에 중국의 자금 지원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발협력 추이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중국이 G2로 부상한 지금에도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ODA 정의와 보고 기준들을 따를 필요가 없어, 그들의 기준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통계를 집계한다. 설령 통계 자료 등 관련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매우 적거나 부분적인 것이 많아, 큰 그림은 물론이거니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기도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이 지난 2009-2012년간 아프리카에 지원한 100억 달러도 무상 지원이 아닌 양허성 차관이다.²⁶⁾ 그러나 중국은 지원과 양허성차관,

26) Yun Sun (2014)

소프트 론, 상업차관, 직접 투자, 부채 탕감, 무상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원’ 혹은 ‘지원을 마련(to provide support)’한다고 발표하여, 이를 다시 분리하여 OECD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중국정부가 약속한(committed) 지원 금액은 공표가 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disbursed)은 발표되지 않아 실제적인 중국 정부의 지원 규모를 확인할 수도 없다. 사실,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중국의 아프리카 지원 총액 750억 달러 중 OECD의 ODA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약 11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²⁷⁾ 중국 정부가 1995년 해외원조를 개혁하면서 중-아프리카 협력 사업의 주체를 정부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해외원조와 기금을 다양화하면서 이와 같은 모호성이 배가되었다.²⁸⁾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2025년까지 아프리카에 차관 및 투자 등을 포함한 1조 달러를 제공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는 사실이며, 이와 같은 규모의 지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중국이 아프리카 지원에 있어서 인프라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종종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경제사회 각 분야에 효과성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이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프리카 지원 경쟁에 있어서 중국만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²⁹⁾

27) Ming Wan (2014)

28) 朴英姬 (2006)

29) 예를 들어 2006년 중국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지원 액수 중 약 79%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중국의 동아프리카 지원은 크게는 1960년 주은래 이래의 아프리카 원조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의하여 강화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대일로는 육로를 연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경제회랑 건설 전략이다. 케냐가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허브 중 하나로 구상되고 있기에, 중국에게 있어서 동아프리카 국가, 특히 케냐는 중국 경제회랑을 아프리카 내륙으로 연장하여 이어주는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중국의 동아프리카 지원은 산업단지 개발 등 중국의 생산기지를 아프리카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교두보의 확보와 더불어 도로, 항만, 교량 등의 건설과 같은 물류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Standard Gauge Rail(이하 SGR)이라고 불리는 철도망의 구축 계획으로, 이는 일대일로 전략에 기반을 둔 동아프리카 교통인프라 개선 계획의 하나이다. 이 SGR 프로젝트는 몸바사에서 나이로비, 말라바(Malaba)를 거쳐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로 연결되며, 르완다의 키갈리(Kigali)와 북부의 주바(Juba)와도 연결하는 야심찬 대형 프로젝트이다.

지난 2017년 5월 31일 개통한 총연장 609km의 인도양 연안의 항구 도시 몸바사와 수도 나이로비 구간은, 기존의 metre-gauge 철도망을 SGR로 대체하여, 10시간이 넘게 걸리던 거리를 4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있음은 물론, 연간 150만 명의 승객수송과 더불어 약 2,2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케냐 정부는 이 구간의 개통으로 약 5.8%-8%의 GDP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380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총예산의 90%는 중국수출입은행이 무이자로 지원하고 10%를 케냐 정부가 부담하였다.³⁰⁾

이 자금들이 직접투자건, 지원이건, 값야 나아가야 할 차관이던 간에, 아프리카 정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중국이 아프리카 정부에게는 정말 반가운 존재인 것이다. 물론, 중국의 원조가 사업 수행에 있어 서방의 기준으로 볼 때 구속성 원조와 같다는 비판이 있지만, 유럽 등 서방의 원조도 마찬가지로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국제기구의 동아프리카 산업개발협력

2015년 12월 유엔총회(General Assembly)가 17개 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추인한 이후, UN 산하의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 등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의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아홉 번째 목표인 '산업, 혁신과 인프라 구조(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즉 '탄력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그리고 혁신의 촉진(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sation and foster innovation)'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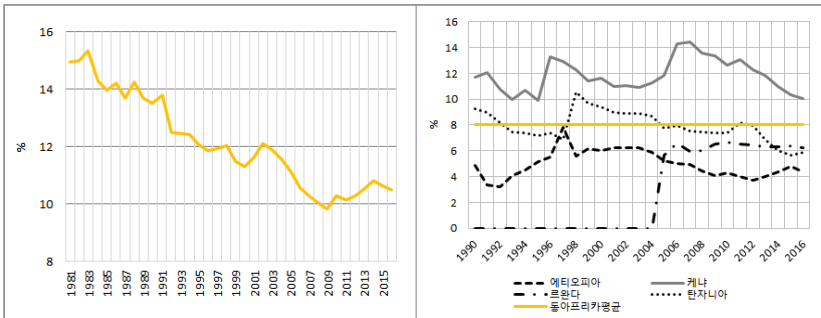
30) 中国 外交部 (2017)

명제는 아프리카 산업화의 지향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아프리카의 산업화는 지속성장의 전제조건이며, 궁극적으로 빈곤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논리에 따라, 유엔,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는 적절하고 효과성 있는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산업화는 더디기만 하고, 노동가능인구의 실업률은 이미 70%를 상회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산업 발전 추이도 아프리카 전체적인 추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케냐가 동아프리카 평균 약 8.05%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산업부가가치 기여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계속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의 산업기여도



(a) 아프리카 제조업 기여도 추이, 1981-2015

(b) 동아프리카 제조업 기여도, 1990-2016

출처: World Bank(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산업기여도는 '제조업 부가가치의 GDP 기여도'(Manufacturing Value Added: MVA) 사용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엔은 2016년 아프리카에서의 지속가능 산업화의 필요성을 유엔총회결의안(A/RES/70/293)에 담아내어, 향후 10년(2016-2025년)을 ‘제3차 아프리카 산업화시대(The Third Industrial Development Decade for Africa, 이하 IDDA II)’로 선언한 바 있다.³¹⁾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UNIDO)가 아프리카연합 위원회(AU Commission),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와 협력을 통하여 아프리카 3차 산업화시대의 실행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끌어 되었다. UNIDO는 2017년 11월 IDDA III의 추진을 위해서 비엔나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등 아프리카 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UNIDO는 빈곤 감소, 교역 역량 구축, 환경 및 에너지, 기타 범(凡)분야 이슈 등 4대 이슈 영역 지원에 초점을 두고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UNIDO의 최근 지원 사례³²⁾를 보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케냐에서 EU와 함께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예업, 차 산업을 대상으로 국제표준 인식 제고 및 준수 사업을 수행하였고, 탄자니아에서는 스위스와 함께 관광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식품 안전, 마케팅,

31) 이 결의안의 제목은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임

32) UNIDO (2017)

시장접근전략 등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지원 전략은 큰 틀에서 보아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구조 전환, 경제 다변화, 포괄적 성장 영역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산업 및 자원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분야 관련 주요 프로젝트는 <표 5>과 같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Ethiopia Competitiveness and Job Creation Project)'를 통하여 볼레-레미 2공단과 킬린토 공단, 디레다와 공단 등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표 5> 세계은행 동아프리카 주요 지원 프로그램

국가	프로젝트 명	사업개시일	사업종료일	지원액 (USD)
에티오피아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2007.6.21	2017.10.31	106,714,022
	ET Competitiveness and Job Creation Project	2014.5.13	2020.6.30	250,000,000
케냐	Kenya Petroleum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KEPTAP)	2014.7.24	2021.2.28	50,000,000
르완다	Land Husbandry, Water Harvesting and Hillside Irrigation AF	2013.12.19	-	36,151,984
탄자니아	Sustainable Management of Mineral Resources	2009.6.9	2018.12.31	51,748,237
	Energy Sector Capacity Building Project (ESCBP)	2013.3.26	2018.12.31	22,166,331

출처: AidData

지역개발은행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AfDB)은 동아프리카지역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산업 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통합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통합을 지역 개발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CES 삼각동맹(COMESA-EAC-SADC Tripartite: CES Tripartite)을 구성함으로써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설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fDB는 이와 같은 전략적 목표를 성취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도 함께 산적하여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동아프리카는 ① 제도와 개인의 역량이 취약하고, ② 관리, 운영 능력이 부실하며, ③ 민간부문의 참여를 결집하는 역량이 부족하고, ④ 치안 문제와 국경 지역의 갈등 요인 등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존재하는 역내 취약 요인을 시급히 해소하여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³³⁾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수력발전의 가능성과 같이 지역통합과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기회 요인도 있음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AfDB가 동아프리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에너지를 비롯한 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33) AfDB (2011)

〈표 6〉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동아프리카 주요 지원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명	사업 개시일	사업 종료일	지원액* (USD)
에티오피아	Djibouti-Ethiopia Power Interconnection	2015	-	42,890,000
	Hara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ject	2013	-	33,000,000
케냐	Expanding geothermal development in Kenya: a model for replication	2015	-	124,000,000
	Lake Turkana Wind Power Project	2013	-	150,000,000
	Ethiopia-Kenya Power Interconnection	2013	-	338,000,000
르완다	Skills, Jobs and Entrepreneurship in Rwanda	2013	-	37,500,000

출처: AfDB(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지원액은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기여분만을 기록함

IV. 한국의 동아프리카 산업협력 및 개발협력 현황

1. 한국의 동아프리카 산업협력

동아프리카 4개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은 4개국 모두 빈곤국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들이어서 절대 규모가 미미하다. 2017년 기준 4개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총액은 5억 1,600만 달러로 같은 해 5,736억 달러를 기록한 우리의 총수출에서 0.1%에 불과하였다.

〈표 7〉 한국의 對동아프리카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에티오피아	94	155	113	97	114
	케냐	258	345	257	162	205
	탄자니아	145	333	194	139	125
	르완다	13	19	17	20	72
	4개국 소계	510	852	581	418	516
수입	에티오피아	25	55	55	53	62
	케냐	29	28	28	104	40
	탄자니아	46	42	51	42	40
	르완다	1	1	1	1	2
	4개국 소계	101	126	135	200	144

출처: 한국무역협회 KITA Net

〈표 7〉에서 보듯이 4개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2014년 8억 5,200만 달러를 최고점으로 이후 2년 연속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5-2016년 2년 동안 한국의 총수출이 연속 감소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수입은 총수입이 역시 2년 동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프리카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다만 수입 규모가 미미하여 4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4개국의 對한국 주요 수출 및 수입 품목을 확인해 보면, 한국은 이들 국가로부터 주로 농축산 및 광업 부문에서 수입하고, 기계 및 화학 산업 등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개국에서 모두 커피가 한국의 수입품목 상위 2위 안에 들어있다.

최근 한국의 커피 산업 확장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늘어났다.

동아프리카 주요국가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8>와 같다. 4개국 가운데에는 에티오피아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에 2,65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케냐에 453만 달러, 르완다에 455만 달러, 그리고 탄자니아에는 4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표 8> 한국의 동아프리카 주요국 투자금액 (2013-2017년)

단위: 천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에티오피아	91	2,295	6,923	11,534	5,663	26,506
케냐	2,157	962	640	528	245	4,532
탄자니아	0	20	134	228	15	397
르완다	439	1,361	1,349	617	791	4,557
4개국 합계	2,687	4,638	9,046	12,907	6,714	35,992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한국의 동아프리카 개발협력

동아프리카 주요국가에 대한 한국의 원조 비중은 유상원조가 있을 경우에는 10%이상을 기록하였지만 유상원조가 없는 해에는 10%미만의 규모를 이어왔다. 유상원조가 없던 2015년에는 약 3%까지 감소하였다.

무상원조에서는 에티오피아가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으며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지 않은 케냐가 가장 적은 원조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총 원조금액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국가별 유상원조는 2013년 르완다 국립대 건립사업, 에티오피아 모조-하와사 도로건설, 2014년 탄자니아 샬린더 교량 건설 사업이 있었으며, 2016년에 에티오피아 도로(Gore-Tepi) 개선 사업, 케냐 과학기술원(Keny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사업, 탄자니아 다레살람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사업 지원이 있었다.

〈표 9〉 한국의 동아프리카 원조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동아프리카	127.5	234.7	181.6	74.6	381.3
에티오피아	21.7	141.5	31.3	27.3	151.5
케냐	4.0	4.4	11.2	10.1	108.5
르완다	7.3	79.1	33.2	13.0	9.7
탄자니아	94.5	9.6	105.9	24.2	111.5
전체	1,798.7	2,213.8	2,249.6	2,294.1	2,458.1
비중	7.1%	10.6%	8.1%	3.3%	15.5%

출처: OECD CRS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동아프리카 주요국에 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지난 5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유상원조가 지원된 도로 건설 분야, 교육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부분은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에서 고르게 지원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 기업, 무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표 10〉 한국의 동아프리카 주요국 원조 부문별 현황(2012-2016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교육(110)	40.5	10.8%	110.8	80.1%	15.3	4.4%	68.1	48.0%
건강(120)	28.5	7.6%	8.0	5.8%	31.8	9.2%	7.8	5.0%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13)	18.1	4.8%	0.1	0.1%	0.8	0.2%	0.1	0.0%
식수공급및위생 (140)	5.5	1.5%	7.4	5.4%	90.4	26.2%	3.0	2.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50)	1.8	0.5%	2.5	1.8%	60.3	17.4%	11.5	8.0%
기타사회인프라 및 서비스(160)	1.2	0.3%	0.4	0.3%	3.2	0.9%	1.0	1.0%
운송및창고(210)	226.7	60.7%	0.2	0.1%	116.5	33.7%	0.2	0.0%
통신(220)	2.7	0.7%	0.8	0.6%	2.0	0.6%	9.5	7.0%
농업,임업,어업 (310)	26.9	7.2%	5.1	3.7%	10.6	3.1%	19.6	14.0%
산업,광업,건설 (320)	2.4	0.7%	0.3	0.2%	1.4	0.4%	2.1	1.0%
기타다부문(430)	11.1	3.0%	0.8	0.6%	9.2	2.7%	17.1	12.0%
기타(1%미만)	8.0	2.2%	1.8	1.3%	4.2	1.2%	2.4	1.7%
합계	373.3	100.0%	138.2	100.0%	345.8	100.0%	142.4	100.0%

출처: OECD CRS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2012-2016년 분야별 5년 합계 및 비중

동아프리카에서 한국이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책 자문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세계은행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책자문을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의 다자사업으로 2015년에 수행하였다. 해당 사업의 취지는 한국 섬유 의류 산업의 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산업단지 개발 및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었다. 해당 사업은 에티오피아 투자환경 분석, 한국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 및 해외투자 사례 소개, 에티오피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기술적 권고와 더불어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케냐 산업단지 개발 자문 사업 역시 2015년에 시작되어 2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산업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함께 사업을 수행하여 1차년도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자문, 2차년도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케냐 KSP 2년차 사업에서는 2015년 산업단지 조성 정책자문 결과에서 적정 후보지로 선정된 아띠강(Athi River) 지역의 포틀랜드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유·무상원조 모두 인프라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여 인프라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여 인도적 지원 면에서 모두 부족함이 있다. 이는 ODA 전체 규모의 한정적인 자원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이지만, 동아프리카 산업개발 협력에 충분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진다.

V. 맺음말

1. 시사점

동아프리카의 산업개발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협력 형태와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지도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 농업국에서 선진 공업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① 한국은 아프리카와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②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이나 시사점이 무엇인지, 나아가 ③ 세부 분야에서의 산업정책 수립이나 제도개혁 등에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독립 이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등 국제기구와 여러 선진 원조공여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원조와 함께 수많은 정책 컨설팅을 받아왔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는데 이러한 점이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아프리카와 같은 후발주자 또는 추격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유용한 발전이론은 시장원리에 매달리는 신자유주의 모델보다는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의 발전경험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관련정책과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 한국의 학자들과 정책담당자, 산업 또는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개발관련 사업을 실시해 왔다. 한국이 다른 원조 공여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한국고유의 개발협력 상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SP)의 상당부분도 산업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아프리카는 산업발전을 위한 물적 기반은 물론 제도적 역량이 크게 뒤떨어져 있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앞서 산업화를 이룬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 기술, 경험 등을 학습 또는 벤치마킹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사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³⁴⁾ 산업화 지원에 있어 흔히 공장건설이나 직업훈련원 설립 등과 같은 ‘테크노크라트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산업화 문제는 단순히 투자나 기술적 해법으로 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적합하고 구체적인 산업정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 (institution) 등 내재적 발전역량 지원과 같은 포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산업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 놓았지만,

34) 설령,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학습 또는 벤치마킹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있더라도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사업이 무용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당 국가에 응용할 수 있는 정책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도 간접 경험이나 시사점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정작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action plan)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에티오피아는 2010년부터 ‘성장과 구조변환계획(GTP)’라는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 Economic Development, 이하 MOFED)의 역량 부족으로 구체적인 비전과 집행 내용을 담은 발전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³⁵⁾.

‘제도’는 도덕, 법률, 규칙, 관습 등과 같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사회규범으로, 정치·사회 발전은 물론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규모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기준으로 1인당 GDP 대비 비중을 비교할 때 케냐(1.16%)와 나이지리아(2.7%)는 미국(0.02%) 등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이렇게 낙후된 경제제도에서는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³⁶⁾³⁷⁾. 또한 경제발전은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의 힘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인적자원, 국민적 개발의지 등 국가적 자원과 그 나라를 둘러싼 국제환경 등 여러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한국형’ 산업개발협력 사업이 효과를

35) Woldegiyorgis (2014)

36) David Brady and Michael Spence (2010)

37) 만약 나이지리아가 칠레 정도의 제도적 수준을 갖추게 된다면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7배나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국의 입장 즉, 발전여건과 협력수요, 개발역량, 국제환경 등을 충분히 간파하는 노력과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산업발전은 보편성(일반성)보다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상황 등 국내적 요인과 더불어 국제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데, 한국의 산업화 역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특수한 여건 속에서 달성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협력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 사이에 불일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 요인으로는 강력한 정치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의 개발전략, 수출지향 공업화, 대규모의 해외 차입과 선진기술 습득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 만큼 정책적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아프리카와는 정치, 사회, 문화, 제도(institution) 등의 기본 여건이 다르고, 경제주체 즉, 정부와 민간 기업들 간의 역할관계도 다르게 작동했다. 정부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해외차관에 대해 100%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해주었다. 아프리카 국가들 경우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을 취한 점은 비슷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독립 직후 사회주의에 가까운 노선을 택하면서 민간 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현실과 한국이 고도성장을 구사했던 개발연대의 시대적인 상황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일례로

한국은 중국이 문화대혁명(1966-1976년)으로 대혼란에 빠진 시기에 산업발전에 착수하여 저임금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 동남아, 중남미, 남아시아 등 거의 모든 신흥국들과 힘겹게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흔히 절대빈곤과 식민지배 경험을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통적인 초기조건으로 들고 있지만, 이 정도의 역사적 사실 말고는 그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산업화나 경제발전정책의 추진체계도 다르다. 과거 개발연대 시기에 한국의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 EPB)이 부처 간 통합 및 조정 권한을 발휘하여 경제발전을 주도해 나갔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조직체계상 이러한 권한을 갖는 정부부처를 찾아보기 어렵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재정·경제개발부(MOFED)가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과거 한국의 경제기획원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처를 아우르는 추진력을 가질 수 없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에티오피아는 연방정부 체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사불란한 정책추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한국형 산업개발협력은 상대국(아프리카)과 한국의 특수성 모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대외협력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경험요소 그 자체 보다는 상대국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정치경제 상황, 산업구조, 지리적 여건, 사회문화적 특성,

인적자원 등 국내 요인과 함께 교역여건 등 제반 국제환경 요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아프리카 발전에 관한 여러 종류의 거대담론적인 발전처방은 이미 오래 전에 용도폐지 되었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때문에, 거시적 접근(think big)보다는 중소기업 육성, 산업인력 양성,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통관시스템 개선과 같은 미시적 접근(think small)에 집중함으로써 한국형 산업개발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분야별로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선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표 11>은 한국의 분야별 산업개발협력 가능분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1> 한국의 분야별 산업개발협력 가능분야

분야	아프리카 수요
산업개발 정책	- 유망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 수립
중소기업 육성	- 비교우위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정책 수립 - 식품, 섬유 등 경공업(중소기업) 가치사슬 창출 중소기업 펀드 조성방안
산업인력 육성	-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 인력 양성프로그램 마련 - 교육과 직업의 미스매치 해소 방안
전력인프라	- 산업화의 최대 걸림돌인 전력부족 해결 - 불안정한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 및 전력손실 해결
산업단지 개발·운영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FDI 유치 방안

분야	아프리카 수요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외자유치 방안 - 외자유치 다변화 정책 -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경영관리, 노동문화 등 습득(경쟁력 향상)
대체에너지 개발	-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통관시스템 개선	- 후진적인 통관시스템 개선(무역 원활화) - 복잡한 수출절차(원산지 증명, 위생검역 등) 개선방안
무역금융지원	- 수출용 원자재 또는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관세 환급제도 등 수출촉진책 마련 - 기타 수출촉진을 위한 국가 지원책 마련(WTO 규정 예외)
식품산업 육성	- 농산물 가공기술 등을 통한 가치사슬 창출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

출처: 저자 작성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큰 규모의 개발협력자금을 지원하기는 힘든 여건이다. 그렇다면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중심의 산업 개발 정책에 동조하면서 산업화 경험 공유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동아프리카 산업개발협력 방향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산업개발단지 개발, 중소기업 육성, 산업기술인력 양성, 외국인투자 유치의 4가지 분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산업단지 개발 지원 및 협력 방안

한국은 그동안 케냐, 에티오피아 등에 대해 KSP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 정책자문,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책 컨설팅을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도 동 부문의 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책자문 지원방안은 크게 ‘산업단지 개발’과 ‘기존 산업단지의 운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동안 한국은 주로 전자(산업단지 개발)와 관련하여 정책자문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개발금융 조달방안, 기업유치 방안,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방안,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전략 상품군 발굴(산업수요 고려),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생산네트워크 편입방안,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 심층적인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자문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아프리카 산업단지의 현실과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협력 방안

한국의 아프리카 중소기업 지원방향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역량개발’이나 ‘시장

접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제도(institutions)나 정책(policies)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후자는 창업 지원과 기술인력 양성과 같이 '기업 접근'이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최근 들어 케냐와 탄자니아 등을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높은 경제성장과 국내수요 확대로 '창업 붐'이 확산되고 있지만, 창업 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개발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아프리카 중소기업에 대해 느끼는 애로요인 중 금융지원, 유통망 개척, 기술인력 확보 등이 가장 심각하며, 정책 컨설팅과 교육 훈련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³⁸⁾하고 있어 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및 협력 방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직업훈련 분야 ODA 중에서 '기능인력 양성'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³⁹⁾ 직업 훈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자문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점과 연결하면, 기능인력 양성 분야 중에서도 직업 훈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자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업 기술 및 생산 인력, 기업 비즈니스 관련 인력 등 부문별로 수요가 고르게 분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아프리카의

38) 주동주 외(2017)

39) 주동주 외(2017)

중점 산업 중심으로 다양한 직군을 위한 직업 훈련 인프라 및 제도가 노동 시장 수요에 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프리카 각국별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들에 필요한 기술, 생산 및 비즈니스 인력을 정의하고 이들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의 현황 및 한계점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직업훈련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거나, 관련 교과과정 개발, 기자재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종별 직업훈련 기준 정비 및 직업훈련 수급 및 질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직업훈련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및 협력 방안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 시 각 국의 경제 및 투자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정부의 우선순위 육성 산업 및 애로사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후 해당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케냐의 경우 경제특구 입주를 위한 해외기업 유치 지원 및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탄자니아의 경우 광물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분야 다각화 방안, 에티오피아의 경우 사업 개시 등에서 요구되는 금융 제도 개선 및 ICT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 등이 개발협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의 경우 단독 ODA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그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유·무상 사업을 통합한 패키지 형태의 ODA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 및 제도 개선 작업을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ODA 사업을 목적별로 그룹화 하여 시행한다면 시너지 효과 상승과 함께 추후 사업 관리 및 성과추적에도 용이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가 절실하다. 현재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인프라 확충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특정 분야 투자의 경우 더욱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개발협력을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 확대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박영호 외 (2012).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산업연구원 (2016). 2016 KSP 케냐 : 케냐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한국종합기술.
- 주동주 외 (2011).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한국의 협력: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동주 외 (2017). 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 동부아프리카 주요국을 대상으로 -. 코트라 (2015). 케냐, 산업화 10년을 꿈꾸다. 해외시장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2014).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에티오피아.

해외문헌

- 朴英姬 (2006). 中国对非洲直接投资的发展历程与未来趋势. 海外投资与出口信贷. 2006年 第5期.
- 中国 外交部 (2017). 非洲‘世纪铁路’提前半年通车. 中非合作论.
- AfDB (2011). Eastern Africa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Paper 2011-2015, September 2011, Tunis: 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 (2014). Eastern Africa's Manufacturing Sector: Promoting technology, innovation, productivity and linkages, Regional Synthesis Report.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 (2017). East Africa Selected Project.
- AfDB·OECD·UNDP (2017). African Economic Outlook 2017: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ization.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 Charlotte King (2017). Sub-Saharan Africa: At a turning point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David Brady and Michael Spence (2010). Leadership and Growth.
- DFID (2016). Statistic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6. London: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Gao Zen (2007). Infrastructure in Africa Support by the Export-Import Bank of China. Presentation paper at the 3rd Annual Meeting of the Infrastructure Consortium for Africa. 17 January 2007. Berlin.

- Her Majesty's Treasury (2015). 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
- JICA (2017). アフリカの持続的成長を支えるマスタープラン——東アフリカの「北部回廊」開発.
- Kafayat Amusa, Nara Monkam, and Nicola Viegi (2016). How US aid to Africa has changed in the wake of China's growing influence. The Conversation.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Lions on the Move II: Realizing the potential of Africa's Economies. McKinsey and Company.
- Ming Wan (2014). The China Model and Global Political Economy: Comparison, Impact and Interaction, Oxon: Routledge.
- OECD (2014). The DAC's Ma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UNITED KINGDOM 2014.
- The Swedish Trade and Investment Council (2016). Sourcing Opportunities in East Africa, Leaflet, Business Sweden in Kenya, Nairobi.
- Takashi Tsuji (2016). Japan's Abe seeks to counter China's influence in Africa. Nikkei Asian Review.
- USAID (2015). East Africa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6–2021. Washington. DC.
- UNIDO (2017). Annual Report 2017.
- Woldegiyorgis (2014). The Ethiopian Developmental State and Its Challenges.
- World Bank (201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Yun Sun (2014). China's Aid to Africa: Monster or Messiah?. Op Ed., 7 February 2014. Brookings Institute.

온라인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2017.8.26)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검색일: 2017.8.27)
- OECD.Stat (stats.oecd.org) (검색일: 2017.8.27)
- AidData (<http://aiddata.org/research-datasets>) (검색일: 2017.9.28)

EDCF

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¹⁾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목 차

- I. 서론
 - II. 스리랑카 국가 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 1.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가경제개발정책
 - 2. 기후변화 영향
 - 3. 기후변화 관련 정책
 - III.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동향
 - 1. ODA 규모
 -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 IV.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현황
 - 1. ODA 규모와 지원전략
 - 2.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주요 성과
 - V. 결론
 - 1. 요약
 - 2.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 참고문헌

1) 본고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힘

1. 서론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국가이다. 2009년 30여 년간의 내전 종식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0-201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6.4%에 이르며, 2016년 기준 일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는 3,835 달러로 하위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y: LMIC)에 속한다.

2015년 취임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속가능 시대를 위한 국가경제 발전정책(2017)’을 발표하고, 정책과제로서 국민소득 증대, 고용 및 주거의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였으며, 농업·산업·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기반 마련을 강조하였다.

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는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된다. 세계은행(2016)에 따르면, 스리랑카에서 홍수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는 약 3억 8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특히 빈곤층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 연안 지역과 해양자원은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산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압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에너지,

운송, 산업, 폐기물 및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식량안보, 보건 및 위생, 수자원,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인프라, 거주지 등과 관련된 적극적인 적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여국·기관들은 스리랑카 지원전략 상에서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본고에서는 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중점 협력국인 스리랑카 지원과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스리랑카 국가 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1.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가경제개발정책

시리세나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국가경제 계획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입안을 추진 중인 ‘지속가능발전법(Sustainable Development Bill)’은 환경부, 국가정책경제부, 지속가능발전부의 장관 3명과 대통령 지명위원 8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창설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5년 단위의 국가정책 및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1월 발표된 ‘지속가능 시대를 위한 국가경제개발정책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for Sustainable Era, 이하 NEDPSE)’은 경쟁력 있는 ‘사회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창출을 목표로 국민소득의 증대, 고용 및 주거의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2020년 경제성장률 7%를 목표로 향후 4년간 3조 5,310억 스리랑카 루피(LKR)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 중 70%는 도로, 철도, 교량, 관개시설, 항만 및 공항 등 경제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교육, R&D, 직업훈련, 보건 및 기타 사회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²⁾

2. 기후변화 영향

스리랑카 정부가 2011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는 농업, 수자원, 보건, 연안지역의 네 개 영역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정리하였다(표 1).³⁾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강수형태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을 유발하는데, 스리랑카에서 재배 중인 대부분의 작물이 이상 고온과 강수형태 변화로 생산성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리랑카 건조지대에서는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과거부터 물 저장 및 공급이 핵심 도전과제였다. 이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심화된 가뭄으로 인해 수자원의 활용이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는 남서부 지역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산사태 또는 침수 등의 영향을 겪고 있다.

2)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2017)

3)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2011)

〈표 1〉

스리랑카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분야		영향
농업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 이상 환경에서 생산성 감소하며, 초기단계에 물 부족으로 생육 저해 • 토양의 수분 증발과 무기 비료에 포함된 염분농도 증가로 벼의 성장을 방해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 이상의 환경에서 생장이 저하되며 강우 의존종 작물로서 생산성 감소
	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강수량 변화로 생산성 감소 • 장기 고온현상은 생육을 저해하여 생산성 감소
	코코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에 민감한 작물 특성상 생산성 감소 • 기온상승으로 생산성 감소
	사탕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에는 강하나, 수분 함량이 품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작물로 강수량 변동에 의해 과거 대비 생산성 감소 • 밤 기온 상승은 개화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생산성 감소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상승은 토양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여 침식에 취약하게 하고 토양 내 염분 증가 촉진 • 해수 침투로 경작지 손실
수자원 (표층수·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강우특성이 변화하여 물 부족, 홍수 등 발생 • 이상고온과 건기의 지속은 표층수 증발을 유발하여 수력발전 위험, 관개 및 식수공급 장애 • 이상고온과 건기 지속으로 북부·북동부 지역의 건조지대 물 수요 증가, 공급을 감소시켜 지하수 고갈 위험 • 사용량이 많을 경우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수 오염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온에 노출된 취약인구의 사망률 증가 •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악화 • 집중강우, 가뭄, 대기오염으로 인해 수인성 질병 증가, 위생 악화, 기관지 질환 증가 등
연안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인간거주지 및 습지) 침수 • 해수면 상승으로 파고가 높아져 해안지형 침식 위험 • 집중호우로 저지대(콜롬보 등 도시 포함) 침수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지하수 고갈 또는 해수 침투 • 해수면 상승과 해수 침투로 연안 습지면적 감소 또는 이동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방조제 등의 방어시설 훼손

출처: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2011)

기후변화는 스리랑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NEDPSE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담은 Vision 2025는 스리랑카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잦은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은 빈곤층에 특히 인적·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Vision 2025는 정부주도 재해관리 개선, Blue Green Initiative로 대표되는 저탄소 발전, 환경 친화적 교통시스템 구축, 녹색금융 도입,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일회용 폴리에틸렌의 점진적 사용금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3. 기후변화 관련 정책

스리랑카에서 기후변화를 다룬 초기의 정책은 2002년 ‘국가환경정책(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이하 NEP)’이며, 이어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전략(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수립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기후변화적응전략(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이하 NCCAS)’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제출해야 하는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이하 NAP)’ 수립의 토대가 되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정책(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이하 NCCP)’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기후변화 적응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분야 또한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 평가된다. 스리랑카는 에너지 생산과 최종 사용부문에 대한 자발적인 감축 계획(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NAMA)을 수립한 상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 및 국가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마하웰리 개발·환경부⁴⁾ 내 기후변화사무국(Climature Change Secretariat: CCS)을 운영 중이다.

(1) 국가기후변화정책(NCCP)

2011년 발표된 스리랑카 국가기후변화정책(NCCP)은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악영향이 없도록,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동시에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명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원칙, 방향을 제시하였다(표 2).

동 정책은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인식하고, 취약성 평가와 국가 개발의제 수립 시 기후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식량안보, 수자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인간정주지와 토지이용, 인프라개발, 해안자원 관리에 있어 적응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식량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기후변화가 농축산업 및 어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시급히 다룰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식량생산과 관련하여 기후복원적·환경친화적·혁신적이고 적합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이를 전통 지식과 적절히 융합하도록 권장한다.

4)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표 2〉

스리랑카 기후변화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 하에서 기후변화 영향 적응·완화 - 국가 기후변화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알리고 경각심 환기 - 기후변화가 인간·생계·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 추진 - 지속가능발전 추구의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추진 -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방면의 이슈에 대해 사회의 지식수준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역량 강화 - 기후변화 영향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역량 개발 -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개발 과정에 주류화·통합 	
추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즉각적이고 잠재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가하므로, 이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탄력성 구축이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국가실정에 적합하며, 사회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할 것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활동으로 현재·미래의 기후변화 과제에 실질적으로 대응 - 생태안정성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통해 구축 가능 - 기후변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민 공동의 비전과 책임 필요 -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사 결정시에는 사전 예방 원칙을 따름 	
추진방향	
취약성	취약성 평가, 국가 개발의제에 기후 취약성 고려, 재해 관리, 건강(보건)
적응	식량생산·안보, 수자원·생물다양성 보전, 인간 정주지·토지이용계획, 인프라 설계·구축, 연안자원 관리
감축	에너지, 교통, 산업, 폐기물 관리, 농업·가축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분별적 자원·생물다양성 활용,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
지식관리	교육, 인식·역량 구축, 협력·파트너십, 기후 대응세대 육성
기타	제도적 조정, 연구·개발, 기술이전, 법률·규제, 시장·비시장 메커니즘, 자원조성

출처: Climate Change Secretariat (2011)

(2) 국가적응계획(NAP)

2010년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는 ‘칸쿤적응프레임워크(Cancun Adaptation Framework)’ 구축에 합의하고, 국가차원의 적응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는데, 스리랑카는 2016년에 국가적응계획(NAP)을⁵⁾ 발표했다. 스리랑카 국가적응계획(NAP)은 적응이 시급한 우선 분야와 활동을 명시하였으며(표 3), 범분야 이슈로서 ① 정책·법·경제·거버넌스, ② 제도 개발 및 조정, ③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④ 자원 조성, ⑤ R & D, ⑥ 기술 이전과 표준 수립, ⑦ 공동체의 적응역량 구축, ⑧ 교육과 훈련·인식제고, ⑨ 기후 재해위험 관리, ⑩ 기후정보 관리를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⁶⁾ 범분야 이슈 해결을 통해 분야별 적응역량이 제고되고 취약성을 낮출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스리랑카 국가적응계획(NAP)은 시기별 목표, 부문별·지역별 이행전략, 자원조달 방안,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원조달은 국내 자원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UN-Habitat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5)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6)

6)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6)

〈표 3〉 스리랑카 국가적응계획(NAP)의 우선 분야 및 활동

분야		우선순위 활동
1	식량안보, 농축산업, 어업	쌀(벼), 기타 작물, 원예작물, 사탕수수, 축산업, 어업, 농업과 토지황폐화
2	수자원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업 및 에너지 용수, 수원지 황폐화
3	연안 및 해양 부문	연안지역 관리, 해안가 안전(안정화), 연안 생물다양성, 해양산성화
4	보건	기후변화 오염물질, 질병의 발생 및 확산, 유해현상과 보건 영향, 고온/태양 압박(스트레스)
5	인간정주지와 인프라	도시 정주지와 인프라, 농촌 거주지와 인프라, 사유 거주지와 인프라, 연안 거주지와 인프라
6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산림, 야생환경, 습지, 농지 생태계(정원), 생물다양성 서비스 손실
7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연안 관광업, 관광업과 생물다양성, 문화유산
8	수출농업 부문	차, 고무, 코코넛, 기타 수출용 작물
9	산업, 에너지, 교통	산업, 에너지, 교통

출처: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6)

(3) 기술수요분석(TNA)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사항인 ‘기술수요분석(Technology Needs Analysis, 이하 TNA)’은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의 지원으로 2011년 실시되었다. TNA는 스리랑카가 온실가스 저배출 국가이나,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동 보고서는 스리랑카의 국가개발정책 우선순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분야별 취약성에 따라 적응이 시급한 분야를 식량, 보건, 수자원, 연안, 생물다양성으로 구분, 분야별 후보기술과 소용비용 및 경제·

부과하였던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당사국은 NDC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⁷⁾

스리랑카 NDC는 기후변화 대응을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이행수단의 네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목표(표 5)와 대응활동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섬국가로서 해수면 변화에 민감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농업·수산업·관광업에 종사한다. 따라서 스리랑카 NDC는 자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한 반면, 적응·손실과 피해 관련 목표와 활동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030년까지 스리랑카가 자력으로 달성하려는 감축목표는 BAU(Business As Usual)⁸⁾ 대비 7% 수준인데, 이는 동일한 남아시아 지역 최빈국인 방글라데시(BAU 대비 5%, 무조건부)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감축목표는 23%까지 확대 설정하였다.

7) 각국은 5년 주기로 NDC를 다시 제출하며, NDC 재제출시 역행, 즉 과거에 비해 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8) 향후 경제사회적 개발의 추세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변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정책도 실행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함. 기후변화 논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이 발전이 진행되는 상태를 뜻함.

〈표 5〉

스리랑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	기준/목표연도	감축비율(%)	
		자발적	자발적+국제지원
BAU	2010/2030	7.0	23.0
감축	에너지(발전)	4.0	16.0
	수송, 산업, 산림, 폐기물	3.0	7.0
적응	보건, 농축수산, 수자원, 관개, 연안/해상, 생물다양성, 도시계획, 관광		
기타	손실과 피해	바르샤바메커니즘과 조응하는 현지 메커니즘 개발	
	이행수단	NDC 이행을 위해 재정, 기술, 역량강화 분야에 외부지원을 고려	

출처: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6)

III.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동향

1. ODA 규모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2005년 약 13억 달러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에는 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⁹⁾ 양자원조 비중은 60%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처음 양자 대 다자 비중이 역전하여 2016년 기준 전체 ODA 중 양자원조 비중은 43%이다.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ODA 수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기준 0.5%를 나타냈다.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유형은 주로 차관으로 전체 양자 ODA의 53%를 차지한다. 주요 공여국은 일본, 한국, 호주, 영국,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등이나¹⁰⁾, 일본의 지원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최근 5년 평균

9) OECD.Stat 총지출액, 2016년 고정가격 기준

일본의 스리랑카 지원 규모는 약 9,600만 달러로 지원 순위 2위인 우리나라 지원 규모의 2배 이상이다.

지난 5년간 국제사회가 중점적으로 지원한 분야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로 전체 지원금액의 41%(교육 11%, 보건 7%)를 차지한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비중은 38%이며, 일반환경보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다분야에 대한 지원은 약 11%를 차지한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리우마커¹¹⁾로 추정가능하다. 2016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지원금액은 약 1,900만 달러, 적응활동에 대한 지원금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연간 지원규모의 변동이 크다.

〈표 6〉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감축	8.1	0.9	13.6	11.5	220.0	6.4	127.1	170.7	82.6	267.1	19.3
적응	-	-	-	-	64.6	97.9	10.8	137.6	86.3	43.2	377.0

주: 약정 기준

출처: OECD.Stat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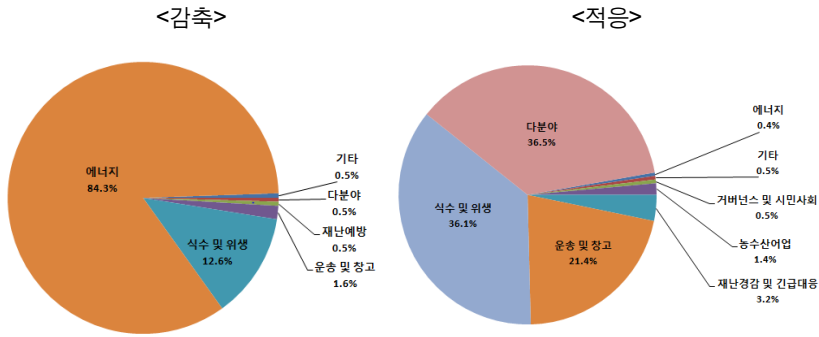
10)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으나, 스리랑카에 대한 제1공여국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 중국의 스리랑카 지원규모는 ODA 14억 달러를 포함 약 37억 달러에 달함. DAC 회원국 ODA 규모와 비교해보면, 2014년 중국의 대스리랑카 ODA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임.

11) 리우마커는 개별 ODA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감축 및 적응)을 해당 사업의 주요 또는 부수적 목표로 다루었는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OECD DAC의 정책마커 중의 하나임. 공여국 사업 담당자는 지원 통계 보고서 리우마커를 표기하며, DAC은 마킹된 사업의 금액을 합산하여 발표함.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공여국은 일본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4억 9천만 달러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사업은 약 3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 감축의 경우, 일본,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규모는 5년간 천만 달러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ODA 지원 규모 2위의 공여국이나 리우마커로 표기된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감축이 331만 달러로 5위, 적응분야 지원이 280만 달러로 9위에 머물렀다.

감축 지원의 경우, 에너지와 식수 및 위생 분야가 전체의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5년간 감축분야 총 지원 금액인 6억 5천만 달러 중 에너지 분야의 지원 규모는 약 5억 5천만 달러이며 이는 스리랑카의 최대공여국인 일본의 영향으로 일본은 지난 5년간 약 4억 9천만 달러를 에너지 분야에 지원하였다. 식수 및 위생 분야는 약 13%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프랑스가 6천 9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적응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분야가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어 운송 및 창고가 21%, 재해완화 및 긴급대응이 3.2%, 농수산어업이 1.4% 규모로 지원되었다.

<그림 1> 감축 및 적응: 중점 지원분야



주: 약정 기준. 2011-2015년 합계
출처: OECD,Stat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1) 일본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스리랑카의 중장기 개발 수요 및 경제정책 프레임에 기초하여 지원분야를 선정했는데, 재난관리 및 기후변화는 북부 및 동부 지역의 분쟁 영향 인구의 생활환경 개선, 경제성장 가속화, 빈곤퇴치 및 지역 개발 등과 함께 중점 분야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¹²⁾

일본은 2013년 스리랑카 국가지원정책(Country Assistance Policy: CAP)을 발표하였다. 스리랑카에 대한 일본의 개괄적인 원조 정책방향을 제시한 동 문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특히 신흥지역의

12) JICA 스리랑카 홈페이지 참고

경제성장 촉진을 기본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분야로서 인프라개발,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향상, 사회 인프라 지원을 통한 취약성 감소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인프라개발과 관련하여 감축 지원의 경우 운송 네트워크 개선, 전력 부문 개선, 폐기물 관리 및 하수 처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적응 지원의 경우 수자원 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콜롬보와 기타 지역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과 도시 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량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력 손실 감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송전 사업, 콜롬보 송배전 손실 경감 사업 및 에너지원 다각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 북부 지역의 수자원 공급 사업과 캔디(Kandy) 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폐수 관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촌지역 개발 부문에서는 농작지 등지의 급수를 위해 지형의 높이 차이를 활용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보건 분야에서는 스리랑카 재해관리법 제13호 및 국가 재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인프라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재난 관리 체제 구축과 방재 대책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관부처의 재난관리 체제 강화와 재난 예방 및 조기경보시스템 강화를 명시하였다. JICA는 정확한 기상 예측을 위한 도플러 레이더를 처음으로 스리랑카에 도입하여 지역별로 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산사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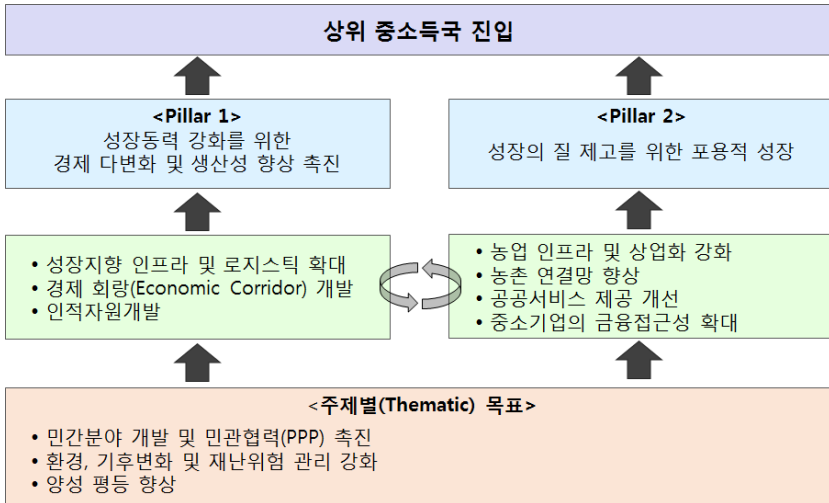
인한 토지 유실 경감 사업을 양허성 차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지원은 2017년 5월에 종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아시아개발은행(ADB)

ADB는 2017년 7월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을 발표하였다. ADB의 스리랑카 지원 전략은 스리랑카 정부가 2015년과 2016년에 발표한 국무총리 정책성명서 및 공공투자계획 2017-2020 등 스리랑카 정부의 개발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ADB의 Strategy 2020 중간검토의 기본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

ADB는 △경제 다변화 및 생산성 향상 촉진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포용적 성장을 통한 성장의 질 제고라는 두 가지 전략목표 하에 스리랑카의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개별 전략목표는 3-4개의 우선 투자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 관리는 민간부문 개발 및 양성평등과 함께 범분야 이슈로 다뤄진다.

〈그림 2〉 ADB 스리랑카 CPS(2018-2022)의 주요 내용



출처: ADB (2017)

전략목표 1의 우선 투자 영역인 ‘인프라 및 로지스틱 공급 확대’에서 에너지 분야를 다루고 있다. ADB는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비전통적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혁신 및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가스 기반 발전소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스리랑카와 인도간의 전력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장려할 계획이다. 전략목표 2의 우선 투자 영역인 ‘농업 기반시설 및 상업화 강화’ 부문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DB는 관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강화를 통한 용수효율성 향상, 관개 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농작물 다각화 및 상업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자원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의 주도권 향상, 기획 및 시행기관 간의 조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기후변화 및 재해 위험관리의 범분야 적용과 관련하여 ADB는 풍력과 태양열 등의 청정에너지 활용, 천연자원 관리, 하수처리시설 확장, 수자원 보존을 위한 누수 방지, 철도망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송 부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과 통합된 재난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ADB 운영 사업에서 환경, 기후 변화 및 재해 복원력에 대한 고려사항을 주류화 할 예정임을 밝혔다.

(3)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2016년 스리랑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이하 CPF)를 발표하고, 녹색성장기회 확보, 환경관리 개선, 적응 및 완화 잠재력 강화(주제 3)를 거시적 재정안정성 및 경쟁력 제고(주제 1), 사회통합 및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주제 2)과 함께 주요 지원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주제 3은 ① 녹색도시 개발, ② 기후 복원력 제고 및 재해위험 관리, ③ 재생에너지 개발 및 천연자원 관리를 통한 적응 및 감축 잠재력 강화의 세 가지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세계은행 스리랑카 CPF(2017-2022)의 주요 내용



출처: World Bank (2016)

스리랑카 정부는 2016년 1월 수도권인 서부지역 메가폴리스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는 스리랑카의 큰 성장 잠재력, 효율적인 노동 시장, 거래비용 절감 및 보다 수월한 지식 및 기술 이전 등 미래 성장 촉진을 위한 도시화 효과와 콜롬보 대도시 지역의 경쟁우위 활용을 고려한 것이다. 관련 사업으로는 메트로 콜롬보 도시 개발 사업, 전략적 도시 개발 사업, 콜롬보를 위한 전략적 녹색 성장 기술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도로 인프라 및 교통 관리 시스템 개선, 배수 기반시설 재건, 물 저장 구역 건설, 콜롬보 도시 습지 관리 전략 개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한 콜롬보 지역 당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기술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도시계획, 거버넌스 및 관리를 위한 개혁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취약성 및 자연재해 대응역량 제고 차원에서 세계은행은 투자 및 기술 지원, 도로 및 관개 생산 기반시설의 복원력 개선 사업, 댐 안전 및 수자원 관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 같은 사업 지원을 통해 인프라의 복원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공공자산 보호를 위한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은행의 도시화 지원 활동(Pillar 1, 목표 3.1)을 보완하고자 한다.

세계은행은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와 함께 위험이전 메커니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FC는 투자 시 환경적 성과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고객이 환경 위험을 식별하여 경감시키고 사업에서 적응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민들의 기후 위험 완화를 위해 지수형 날씨 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은행은 스리랑카의 기후보험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해 감소 및 복구를 위한 글로벌 퍼실리티(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경제적 이익 및 기후 적응과 완화를 개선하기 위한 해안과 육상 생태계 관리 강화를 지원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 하에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정부의 장기적인 전력 발전 프로그램 실행,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지원한다. 더불어 CPF 목표 1.4와

연계, 민관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민간 주도 투자 지원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 같은 세계은행의 지원은 혁신적 보증 기반 금융 모델을 포함한 투자 지원, 기술 및 정책 자문, 에너지 부문의 정책 및 규제 개혁에 대한 분석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은행의 주요 지원 방식은 스리랑카 정부의 목표 지원을 위해 민간 및 글로벌 재원 활용을 돕는 것이다. IFC는 민관협력 자문 및 투자 지원 등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서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세계은행은 개발파트너 조정프레임워크(Development Partner Coordination Framework, 이하 DPCF)를¹³⁾ 운영하며, 주제별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레로 도시 개발 분야에서 세계은행은 홍수 감소 및 도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ADB는 수자원 분야, 일본은 도시 교통 종합계획 개발을 지원하는 등 중점 지원 분야를 조정하였다. 자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해안 개발에서는 UNDP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협력하여 투자 및 기술 지원을, 직업훈련과 기술 지원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과 협력하는 등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조정 및 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DPCF는 세계은행 현지사무소에 위치한 개발파트너 사무국(Development Partners Secretariat: DPS)이 지원하는 원조 조정 체제로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원조의 일관성, 지속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스리랑카에 있는 공여국과 기관들이 정보 공유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하였음. DPCF에는 공여국 그룹, 개발파트너 포럼, 주제별 실무그룹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18개의 해외 공여국 및 기관, 16개의 다자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DPS는 분석 지원 제공, 회의 소집, 스리랑카 정부 지원 등을 주도함.

세계은행 CPF는 기후변화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녹색도시 개발 목표에 대해서는 △메트로 콜롬보 지역의 홍수 취약 면적 감소, △부도심 지역(캔디, 골, 자프나)의 신생 및 재건 공공면적 확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기후복원력과 재난위험 관리 강화 목표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면적, △기후 관련한 교통 위험 인구, △홍수 예측·댐 운영·수자원 분배 등의 부문에서 수자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정부기관의 수 증가를 성과지표로 제시한다. 감축과 적응 역량 강화 목표 관련, △보호지역 거주민의 소득활동 접근성,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확대, △풍력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이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4) 유엔개발계획(UNDP)

UNDP는 2017년 스리랑카 국가지원계획(Country Programme Document, 이하 CPD)을 발표하였다. CPD에 제시된 UNDP의 지원 방향은 ① 보다 포용적·효과적이며,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통한 평화 유지, ② 기후 및 재난위험 관리 통합을 통한 회복력 구축, ③ 증거 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데이터와 지식기반 구축이다.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회복력 구축은 물 관리, 폐기물 관리, 녹색 도시 개발, 자연자원 관리, 저탄소 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세, 벌금 및 인센티브 모색 등을 위해 민간 부문과 정부의 참여 증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표 7〉

UNDP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프로그램

구분	내 용
통합 물관리	GCF와 공동으로 농업 기반 생계 향상을 위한 통합된 물 관리를 통해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장벽을 해결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건조지역의 취약한 소농민의 회복력 강화를 지원
폐기물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폐기물을 에너지나 기타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공동 자원 시범 사업을 확장할 예정
녹색도시 개발	상업 및 도시지역을 친환경적이고 기후 회복력이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서부지역의 도시 지역 계획 기획 추진 예정(SDGs 7, 11)
배출 감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REDD+ 투자 프레임워크 및 실행 계획의 이행 및 공동체 임업의 확장을 통해 삼림 벌채 및 파괴 감소. 이를 통해 배출 감소에 대한 스리랑카의 국가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 (SDGs 13)
자연자원 관리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대중의 감시·감독 개선을 위해 시민 사회가 환경 법규 및 표준 집행 모니터링 정보법 조항에 대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청년층의 행동 변화 촉구에 중점을 둘 예정 (SDGs 16)
재생에너지	저배출 개발 촉진 및 저탄소 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세, 벌금 및 인센티브 모색 등을 위해 민간 부문과 정부의 참여 증진 지원. 이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및 국가 에너지 정책 하에서 NDC와 부합하는 국가의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

출처: UNDP (2017)

UNDP는 CPD에 국가 우선순위와 목표에 따른 주요 분야별 성과, 산출물과 성과지표를 제시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2022년까지 ①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제고, ②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이익 창출, ③ 친환경적 거버넌스와 청정-녹색 개발(blue/green development) 실현을 기후변화와 관련한 성과목표로 수립하였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구축 부분에서는 ‘기후변화와 재난위험에 대한 적응과 복원력 향상을 위한 정책,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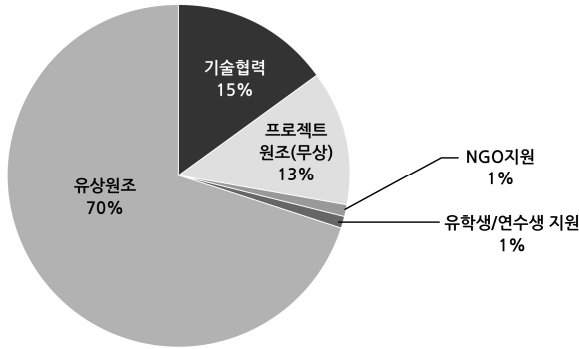
관리 전략의 국가 및 지역(도시/농촌) 단위에서의 실행'을 산출물로 설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로 ① 스리랑카 국가 예산 중 재난위험 감소 및 기후복원력 강화 관련 예산의 비중, ② 기후복원력이 있는 생계수단 채택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가뭄취약지역의 인구(남녀 구분) ③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기후 쇼크 및 기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건조지역의 인구(남녀 구분)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IV.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현황

1. ODA 규모와 지원전략

한국은 일본에 이어 대스리랑카 제2의 ODA 공여국으로 지난 10년간 ODA 지원추이를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원 규모는 2009년 내전종식 이후 증가하였다가 2012년 6천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다시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기준 2012-2016년간 스리랑카 지원총액은 총지출액 기준 2억 3천만 달러(연평균 4,600만 달러)이며, 이 중에서 차관 규모는 1억6,200만 달러로 70% 이상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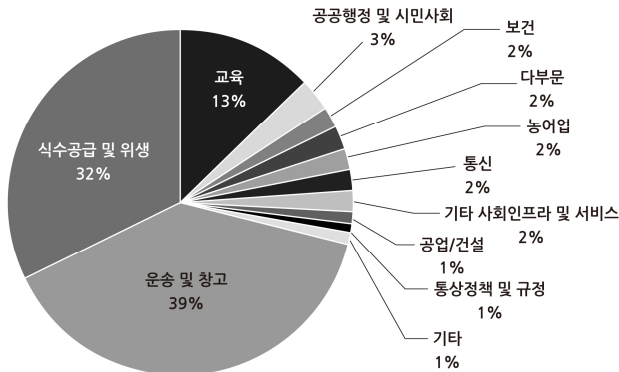
〈그림 4〉 ODA 사업유형별 스리랑카 지원 현황



주: 총지출 기준(2012-2016년 누적)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동 기간 내 분야별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운송 및 저장 39%, 식수 공급 및 위생이 32%로 두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1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CPS 중점 협력분야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분야별 스리랑카 지원 현황



주: 총지출 기준(2012-2016년 누적)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6년 발표된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스리랑카의 인적·사회적 자본 및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의 중장기 국가개발계획(빈곤감축계획 및 1500일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100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로 수립하였다. 스리랑카의 국가개발계획과 한국의 원조역량 및 기회·장애요소를 고려하여 4가지의 중점 협력분야(교육·교통·물 관리 및 위생·지역개발)를 선정하고,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는 CPS 추진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¹⁴⁾ 제1기 CPS 이행 과정에서 교육, 보건 등 타 분야에 비해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제2기 CPS는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제·사회 인프라 분야에 포함되었던 물 관리는 독립적인 중점 협력분야로 설정되었으며, 지역개발 지원 기본방향은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고체폐기물의 증가와 매립지 관리 역량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고체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제도도입·운영,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14) 기후변화는 제1차 CPS에서도 스리랑카의 주요 특성으로 언급된 바 있음. 스리랑카는 기후변화 취약국가이며 폭우, 홍수, 산사태, 태풍, 쓰나미, 토네이도, 강풍 등의 주요 위험기상과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30% 이하로 감소하였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및 강우량이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스리랑카의 기후 취약성을 인식하고, 급수차 제공,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구호 제공 등 분쟁 취약국 예산을 통하여 기후 변화 적응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구축하고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KOICA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주로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UN-Habitat 등 국제기구 또는 현지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와 협력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향후 이 같은 형태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¹⁵⁾

EDCF는 주로 교통·통신 및 수자원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생 매립식 쓰레기장 구축 사업, 상수도 사업 등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1,400만 달러 규모의 쓰레기 수거 차량 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동으로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¹⁶⁾

15) KOICA 스리랑카 현지 사무소 면담(2017. 7) 내용

16) EDCF 스리랑카 현지 사무소 면담(2017. 7) 내용

2.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주요 성과

(1) Galle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스리랑카 곶(Galle)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은 스리랑카 정부의 곶 광역시 상수도 개발계획(Greater Galle Water Supply Scheme)의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남부 주요도시인 곶에 우수한 품질의 상수도를 공급하여 증가하는 상수도 수요를 충족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다.¹⁷⁾ 곶 광역시는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및 인구 증가(연평균 1%)로 급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역 발전과 함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난 해소가 곶 광역시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재원과 수자원 관리 기술 및 역량이 부족하였다. 인근 Gin강에서 공급하는 용수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갈수기(5-9월)에는 수위 저하로 인해 취수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해수 역류 현상이 일어나 집수지에 염수가 침투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일부지역에서는 하루 6시간 이내의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졌다.

EDCF가 지원한 Galle 광역시 상수도 개발계획 2단계 사업은 1차에서는 취수·펌프장, 정수처리시설, 배수지 건설 및 지역별 급수관로, 해수

17) Galle 광역시 상수도 개발계획은 사업 실시기관인 스리랑카 국영상수도공사(이하 NWSDB)가 1995년 일본 국제후생공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수립하였으며, 관련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었음. 1단계 사업은 ADB가 지원하였으며, 취수장 및 송수관로 건설, 취수장 펌프 교체 등의 공사가 기 완료되었음.

제방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졌고, 2차 사업에서는 각종 밸브를 설치하고 급수관로를 부설 공사함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445km의 상수도 급수관로가 설치되었으며 약 22만 명에게 용수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도에 82%였던 식수 접근률은 2007년 완공 후에는 84.7%로 향상되어 2015년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목표(84%)를 달성하였다.

〈표 8〉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표		긴(Gin)강으로부터 원수를 취수 및 정수하여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산업발전에 기여
사업대상지		골 광역시 및 남서쪽 해안 지역 등 (급수지역 120km ²)
사업기간/규모		2000-2008년(완공) / 47.9백만 달러
사업 내용		1차: 정수처리시설, 취수시설 및 저압펌프, 송수관, 가압펌프, 배수시설, 해수제방시설 등 설치 2차: 각종 밸브 설치 및 급수관로 부설공사
수행 기관	한국	EDCF
	스리랑카	차주: 재무기획부(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실시기관: 상하수도관리부(Ministry of Water Supply & Drainage) 국영상하수도공사(National Water Supply & Drainage Board)

출처: 한국수자원공사(201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평가보고서¹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과 달성도가 높아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는 사업 실시기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쳤다. 1차 사업은 기상

18) 한국수자원공사(2011)

악화로 인한 폭우와 홍수피해(2004년 5-6월) 및 쓰나미(2004년 말)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9개월이 연장되어 41개월 만에 완공되었으며, 2차 사업도 쓰나미 피해 및 우기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2년보다 약 14개월이 연장되었다. 평가보고서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피드백 체계가 보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2)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함반토타(Hambantota) 태양광 발전단지 내에 구축된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산업은 스리랑카 최초의 계통연계형 태양광 시범 사업으로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공급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사업은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에서 시도한 시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태양에너지의 계통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간 발전소업체 및 투자자들의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업 대상기간 스리랑카의 전력 수요량은 매년 평균 5.2%씩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력생산량의 평균 성장률은 약 4.5%로 전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수요 증가 외에도 화석연료의 높은 수입의존, 불안정한 강우량, 유가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풍력, 소수력,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사업 수행당시 국제 유가 상승과 극심한 기후변화로 전력공급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2012년 실론전력청의 운영손실이 급증하였다. 이 사업은 KOICA가 건축과 기자재를 공급하고 운영인력 및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스리랑카 정부에서 기초공사 및 사후관리(국가전력망 연결 설치)를 담당했다.

〈표 9〉 함반토타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표		태양광 발전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수립을 통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정책에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사업대상지		스리랑카 함반토타 바루탄칸다
사업기간/규모		2009-2011년(2년) / 300만 달러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자재 지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일체 통합 지원 전문가 파견: 사업 총괄, 태양광 발전 유지 관리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 기술인력 양성
수행 기관	한국	KOICA, (주) LG GNS
	스리랑카	동력에너지부 산하 지속가능에너지청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4b)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평가보고서¹⁹⁾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태양광발전 사업을 국가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스리랑카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19) KOICA (2014)

스리랑카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2015년까지 전력공급 100%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기후변화와 유가변동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뛰어난 일사조건을 갖췄음에도 태양광 분야는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발전이 미약하였고 2009년 당시에는 상업용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전무하여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였던 10%를 당초 2015년 목표에서 2014년에 조기 달성하였고 이에 본 사업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과급효과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연간 CO2 배출량 감축효과는 300톤 이상이며, 환경기여도 측면에서 연간 11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동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2015년 스리랑카 최초의 민영 태양광 발전소(10MW 규모) 건설이 시작되었다.

(3) 발라체나이 홍수피해 방지 배수시설 설치사업

바띠칼로아 발라체나이 지역²⁰⁾은 동북부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2004년 12월 쓰나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긴급복구 우선순위 지역이다.

20) 사업대상지역은 스리랑카 정부의 국가개발 3대 전략의 하나인 동북부개발에서 중요한 지역이며 콜롬보로부터 350km 떨어진 지역으로 타밀반정부군(Liberation of Tamil Tiger of Ealam)이 활동했던 지역임

이 지역의 강수량은 최근 20년 동안 급속하게 상승하였으며 몬순기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강우량은 28%나 상승했다. 또한 배수시설 인프라도 열악하여 발라체나이는 전국 24개 군 단위 지역에서 2002-2012년 기간 중 홍수로 인해 인적 피해를 입은 인구가 약 23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스리랑카 재난구호부의 긴급요청에 따라 북측은 독일, 남측은 우리나라가 분할 담당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배수로를 건설하였다.

〈표 10〉 발라체나이 홍수피해 방지 배수시설 설치사업

구 분		내 용
사업 목표		상습 침수지역인 발라체나이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홍수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제공
사업대상지		바띠칼로아(Batticaloa)시(District) 발라체나이(Valachchenai)읍
사업기간/규모		2006-2008년(3년) / 3.9백만 달러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주배수로 설치 및 기존 배수로 확장, 교량 건설 • 전문가 파견: 배수관리, 구조 전문가 파견, 실시설계 검토,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사업전반 관리 등 수행 • 연수생초청
수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 PMC: 수자원 공사
	스리랑카	재난구호부(Ministry of disaster Relief Services/MDRS)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4a)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CPS(2012-2015)의 중점 분야인 ‘수자원을 포함한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에 부합하였으며, KOICA의 중기 지원전략 상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적합한 사업이었다. 사업기간은 우기 및 분쟁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약 5개월이 지연

되었으나 비용효과 측면에서 투입에 대비한 산출의 결과는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독일과 비교해도 사업 추진, 감독 및 대응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평가이다.

수혜자 만족도를 토대로 평가한 사업 효과성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²¹⁾에서 수혜자는 사업을 통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자녀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며, 수인성 질병이 감소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배수로 사업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복구 할 필요가 없어져 생업에 전념하여 전반적인 소득수준도 증가하여 전체 응답자 110명 중 98명 (89.1%)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사업 종료 이후 배수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품폐기물 관리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

스리랑카는 도시권역에서 발생하는 고품폐기물의 약 75%를 350여개의 비위생매립(open dumping) 방식으로, 15%는 약 70개의 퇴비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매립지에서는 메탄가스가 상당량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지하수 오염에도 일조한다.²²⁾ 또한 스리랑카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폐기물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21) KOICA (2014)

22) EDCF 현지사무소 면담 내용

고형폐기물관리는 스리랑카가 당면한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원국은 국가차원의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고형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나²³⁾, 현재의 정책과 제도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의 검증된 통합적·체계적 고형폐기물관리 경험을 지원받고자 한국 정부에 통합적인 폐기물관리 정책자문을 요청하였다.²⁴⁾

이 사업은 한국의 폐기물관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국가차원의 통합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하여 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 단기·중장기정책,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리랑카에 적합한 고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시범사업계획안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였다. 스리랑카의 고체 폐기물 건립사업의 기간은 2014년부터 약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국토연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기술적 부문에 대한 용역발주를 통해 전문기관과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스리랑카의 비위생 매립 및 퇴비화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2018년까지 소각처리비율 50%, 위생매립 비율 6% 확대와 비위생 매립비율 19%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된 도시고형 폐기물의 위생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4) 기획재정부(2015)

〈표 11〉

고체폐기물 관리 KSP사업

구 분		내 용
사업 목표		한국의 폐기물관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통합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하고 지역 내 발생 고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
사업기간/규모		2014 / 970만 달러
사업내용		국가 통합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컨설팅 시범 사업 수행(캔디 지역 고히고다(Gohagoda)매립장)
수행 기관	한국	국토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 (주)건화 환경플랜트부
	스리랑카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중앙환경청(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

출처: 기획재정부(2015)

정책자문을 통하여 선정된 시범사업은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제안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동 시설을 통하여 매립량을 1/2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시스템에 관한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리랑카 고위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자문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본 사업에서 제시한 정책자문 내용과 시범사업은 스리랑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정책컨설팅을 마친 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본 사업에서 제시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1. 요약

스리랑카의 국가개발 전략 및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주요한 도전과제로 인식된다. 스리랑카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스리랑카 농업, 수자원, 위생, 연안지역에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국가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왔다.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기후변화가 스리랑카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대응 체제를 갖추는 일이 우선이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對스리랑카 협력방식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공식 발표된 국가경제개발정책(NEDPSE)은 스리랑카를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중점 추진분야를 제시하였는데, 기후변화 위험 영향을 고려한 분야별 지속가능한개발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남서회랑의 콜롬보를 중심으로 한 메가폴리스개발 계획에 따라 도시화로 인한 폐기물 처리시설, 식수공급 개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연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 해일 및 홍수 피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북서부 농업지대를 대상으로 한 농업협력이나 북동회랑 분쟁지역의

인프라 건설 및 싱할리 고도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 개발 계획에 우리나라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시급한 과제를 강조한다. 2011년 국가기후변화정책(NCCP)은 정책의 목적에서부터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며 국가 기후 취약성 인식제고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 추진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파리협정 이행계획인 NDC에서도 섬국가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제시하고,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스리랑카 국가적응계획(NAP)과 적응분야 기술수요를 토대로 볼 때,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업·수산업을 포함하는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기 분야는 다소 경중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기온의 상승과 강수량 변화, 즉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 또한 예상된다. 예컨대 기온의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는 스리랑카 주식인 쌀의 생산성을 저하하며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수자원 부족, 위생환경 악화는 스리랑카 북부 및 동부 빈곤층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통합 및 화해’의 추구에도 걸림돌이 된다.

일본, ADB, 세계은행, UNDP 등 주요 공여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 상에서 기후변화는 독립 주제라기보다는 범분야 이슈로 다뤄진다. 공여기관들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악영향을 도전과제로 인식하며,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생에너지, 재난 관리 및 재해 복원력 제고, 수자원 관리, 녹색 도시 개발,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업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범분야로서의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성과목표와 지표는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농촌 개발, 기후복원력 강화, 재난위험 관리 등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세부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를 SDGs 달성과 연계하였다. 또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선과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를 적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기관 지원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별 기관들은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 내에 활발히 활동하는 공여기관의 수가 비교적 소수이다 보니, 조정 메커니즘이 갖춰진 것도 특징이다. 일례로 콜롬보 도시개발에 있어서 세계은행은 홍수발생 빈도 감소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반면, ADB는 콜롬보의 수자원 관리에, 일본은 콜롬보 도시 교통 종합 계획 부문에 중점을 둔다. 또한 세계은행과 ADB는 스리랑카 정부의 기술발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동일한 실행계획, 보고 시스템 및 성과관리 틀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DPCF 등 공여국의 개발조정협의체에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부문별·주제별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 방지, 협력사업 발굴 등 적절하게 조정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상수도 보급, 폐기물 관리, 농업분야 협력과 같은 강점 분야를 지속적으로 주력하여 가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양자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에 우리나라가 출연한 기후변화 관련 신탁기금을 활용하거나, UNDP와 같은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GCF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다. 지난 2016년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을 통해 지원한 ‘스리랑카 신재생에너지 통합 지원 사업’이 한 예이다.²⁵⁾ 이처럼 녹색 성장을 주제로 하는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스리랑카 기후변화 지원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고 협조유자 방식으로 본 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재원 뿐 아니라 지역·분야 전문성 및 경험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스리랑카에서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상수도 개발 사업, 고체폐기물 관리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사업설계 및 평가 등의

25) KGGTF 홈페이지

단계에서 기후변화 측면의 접근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기후변화 지원 영역의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 사업에 범분야 이슈로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는 작업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세부 사업에서도 발굴부터 평가 단계까지 프로젝트 전 주기에 걸쳐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ODA 사업 전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을 극복하고 기존 사업에 기후변화 위험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에 특화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2기 CPS에서 중점분야로 제시한 물 관리와 지역개발 분야에서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서는 사업 초기의 발굴 및 선정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성과 목표, 산출물,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측정방식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성과관리 틀을 마련해야 한다.

2.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스리랑카 지속가능 국가발전계획과 비전 2025는 외국인투자 및 수출 활성화, 물류인프라 강화를 통한 인도양의 허브로서의 자리매김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목표에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도로·상하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이 시급하다. 또한 스리랑카 주요 수출 품목인 쌀, 차 등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 복원력을 갖춘 관개시설과 수자원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하에서는 분야별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1) 농업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즉 쌀의 생산성 저하, 장기적으로는 수출 작물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가 예상된다. 농업분야에서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① 개량과 개발 등 품종의 다양화, ② 효율적 농법과 고급 농업기술, ③ 기후변화 인식 및 정보관련 농민교육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작물 품종의 다양화와 고급 농업 기술은 스리랑카 기술수요분석(TNA)에서도 언급된 우선순위 농업 기술이다. 예시적인 활동으로는 강우량의 감소, 즉 가뭄에 보다 잘 견디는 품종을 개발하여 도입하거나, 물을 적게 사용하는 농법 보급, 품종 또는 농법을 공동체에 확산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교육을 들 수 있다.

품종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역시 쌀을 주식으로 하여 벼 등 작물 생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IRRI(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나 Climate Smart Agriculture 프로그램에 오랜 경험을 가진 FAO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2) 수자원 관리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한 물 저장과 공급 등 물 관리는 역사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이슈이다. 물의 저장과 공급은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의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전 2025에서는 북부 건조지대의 식수 공급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북부와 북동부, 남동부 지역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지하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기후변화는 표층수의 증발 및 중금속 오염, 지하수 고갈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활동으로는 농업·생활용수의 보급과 관리, 물 저장시설 개선, 하천관리와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등이 있다. 빗물 집수와 지하수 이용은 기술수요분석(TNA)에서 우선순위로 명시된 시급한 기술이며, 해수 담수화는 비전 2025에 언급되어 있는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에서 이미 상수도 인프라 건설과 이동식 식수보급 활동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EDCF ‘콜 광역시 상수도 개발 사업’은 관광지인 콜 광역시 인근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생활용수의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수문을

설치함으로써 염수침투 현상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류지의 복원은 스리랑카 전통 물 관리 방식을 토대로 하는 사업으로 일본, UNDP, GCF가 관심을 기울이는 활동이다. UNDP는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던 소류지 복원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GCF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재해대응

스리랑카 기후는 2000년대에 들어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기 시 집중호우는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폭우를 감당하지 못한 숲과 배수 인프라로 인해 산사태 및 홍수 피해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스리랑카가 수문기상학적 현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상 예보·경보 인프라와 역량 지원, 기후복원적 인프라 구축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집중호우시 예상 강수량을 관측하여 산사태 우발지역에 주민 대피 경보를 제공하는 인프라 및 역량 구축에 협력하거나, 보다 직접적인 재해 대응책으로는 산사태 방지벽 설치, 조림을 통한 산사태 방지 등의 활동이 그 예이다. 장기적으로는 관측 등의 기상 예보 기술로 강수량 또는 기쁨의 지속 기간을 예측하고 그에 부합하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업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인수 · 이호생 · 송유철 (2014).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2015).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III: 스리랑카. 스리랑카 녹색도시인프라 개발 정책자문: 고품폐기물관리를 중심으로.
- 정지원 · 송지혜 · 이상미 · 오혜경 (2017).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수자원공사 (2011).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2014a). 스리랑카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후평가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2014b). 스리랑카 발라체나지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사업 사후평가보고서.

해외문헌

- ADB (2017).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Sri Lanka, 2018-2022.
- Central Bank of Sri Lanka (2017). Annual Report 2016.
- Climate Change Secretariat,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1). The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of Sri Lanka.
- Climate Change Secretariat,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6). National Adap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Impacts in Sri Lanka.
- Dreher, A., A. Fuchs, B. Parks, A.M. Strange, and M.J. Tierney (2017). "Aid, China, and Growth: Evidence from a New Global Development Finance Dataset." AidData Working Paper #46. Williamsburg, VA: AidData.
-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GCF (2016). Consideration of funding proposals – addendum: funding proposal package for FP016.

Government of Sri Lanka (2017).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for Sustainable Era.

Government of Sri Lanka (2017). Vision 2025.

KGTF Partnership (2015). KGTP Progress Report 2013-14.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2011). Technology needs assessment and technology ac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5).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on Sri Lanka 2016-2020.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2016).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2017). Public Investment Programme.

UNDP (2017). Country programme document for Sri Lanka 2018-2022.

World Bank (2016). FY17-20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온라인 자료

ADB (www.adb.org/projects/country/sri) (검색일: 2017.9.5)

GCF ([http://www.greenclimate.fund/-/strengthening-the-resilience-of-small holder-farmers-in-the-dry-zone-to-climate-variability-and-extreme-events-through-an-integrated-approach-to-water](http://www.greenclimate.fund/-/strengthening-the-resilience-of-small-holder-farmers-in-the-dry-zone-to-climate-variability-and-extreme-events-through-an-integrated-approach-to-water)) (검색일: 2017.11.23)

JICA 스리랑카 (http://www.lk.emb-japan.go.jp/itpr_en/00_000038.html) (검색일: 2017.10.12)

KGTF (<http://www.kgreengrowthpartnership.org/#Featured-Stories>) (검색일: 2017.12.12)

OECD.Stat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17.6.9)

UNDP (<http://www.lk.undp.org/content/srilanka/en/home/ourwork/overview.html>) (검색일: 2017.11.1)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en/country/srilanka/overview#1>) (검색일: 2017.9.22)

EDCF

III. 한국의 개발협력

민간참여에 기반한 유상원조 개발협력모델 수립 연구
김장생 연세대학교 교양교육학부 교수

민간참여에 기반한 유상원조 개발협력모델 수립 연구¹⁾

김장생

연세대학교 교양교육학부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민간 협력을 통한 유상원조의 현황 및 사례
 - 1. 프랑스
 - 2. 세계은행(World Bank)
 - 3.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4. 민간협력을 통한 유상원조 사례 평가
 - III. 국내 민간협력 기관 현황
 - 1.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2. NPO (Non-Profit Organization)
 - 3.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 4. 학계
 - IV. EDCF와 CSO 협력 모델
 - 1. EDCF와 CSO의 협력 가이드라인
 - 2. EDCF와 CSO의 협력방안
 - 3. CSO 선정기준
 - V. 결론
- 참고문헌

1) 본 연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EDCF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I. 서론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한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대적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개발에 대한 통합적 모형 구축이며 둘째는 시민사회가 개발의 외부에서 벗어나 참여자로서 ODA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개발에서 비주류적 관점으로 여겨지던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식,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과 인권, 어린이, 여성, 난민, 환경, 문화 다양성 등의 이슈들이 개발의 직접적 목표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는 개발의 통합적 모형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개발의 최종 목표인 삶의 질 개선은 경제적 개발성과를 기초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 또한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발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개발의 방향 설정과 타당성의 선결 조건 결정에 주요한 고려 요소로 여겨지지 않아 왔으나, 최근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고려는 개발의 필수 선결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개발 모형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삶의 질 개선으로 직·간접 또는 상호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요한다. 또한 이는 단순한 접근방식의 다양성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하 CSO)와 같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을 통한 개발사업의 방식과 범위가 시민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EDCF 사업은 인프라 구축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사업 집행 방식과 틀을 구성하여 왔기에 위에서 제기된 개발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개발의 투명성을 견지하고 다각적 접근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민간영역은 구성원들의 원조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 더욱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자체 평가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근시안적인 결과를 중시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되는 경우 또한 존재하며, 민간부문이 고유의 장점을 살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독립성이 약화되고, 동시에 재정 의존성을 키우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민간 협력의 양적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원조의 효과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질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적인 EDCF 사업 모형을 구축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프랑스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이하 AFD), 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AfDB)의 시민사회 협력 모델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국내 CSO의 현황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향후 EDCF가 CSO와 협력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II. 민간 협력을 통한 유상원조의 현황 및 사례

1. 프랑스

(1) CSO 협력 현황 및 특징

프랑스의 유상원조는 경제재무부 총괄 하에 프랑스개발청(AFD)을 통해 이행된다. 프랑스의 개발원조는 2011년 외교부가 수립한 중기전략 2011-2020을 따르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공유되는 성장, 빈곤퇴치 및 불평등 해소, 공공재(public goods) 보호, 안정성 및 법치 증진 등 4가지 기본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개발목표에 맞춰 AFD는 제3차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12가지의 실행 목표를 정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국제파트너십과 프랑스 시민사회 간의 협력 강화’이다.³⁾ 프랑스의 원조 전략에서 늘 강조되어온 CSO는 AFD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해왔다.

2012-2017년간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를 통한 공적개발원조를 두 배 이상 증대시키겠다는 프랑스 대통령의 공표에 따라 CSO의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CSO 이니셔티브(CSO Initiatives)’ 예산이 크게 증대되었고, 2013년 AFD와 CSO의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Cross-cutting Intervention Framework AFD

2) MAEE (2011)

3) AFD (2012a)

and CSO 2013-2016, 이하 CSO 프레임워크)의 수립으로 CSO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⁴⁾ 부처 간 개발원조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개발정부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이하 CICID)⁵⁾는 2013년 개발협력정책의 혁신을 위한 4가지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고, 그중 하나인 ‘모든 개발주체자의 더 나은 조정(coordination)을 위한 방향’으로서 지방정부와 CSO에 열린 개발협력 정책을 내세웠다.⁶⁾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실행에 대한 대화와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과 국제연대를 위한 국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u Développement et de la Solidarité Internationale, 이하 CNDSI)를 설립하였다. CNDSI는 연 3회 정부, 의원, 특히 NGO를 포함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 간 정기적인 협의를 위한 협의체의 역할을 한다.

CSO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2-2016년간 AFD는 CSO, 외교부 등과 많은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은 주요 5가지의 실천사항을 도출하였다.

4) AFD (2013)

5) 프랑스의 국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함

6) CICID (2013)

〈표 1〉 AFD-프랑스 CSO간 협력 개선을 위한 결의사항

구분	세부내용
AFD-프랑스 CSO간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AFD-CSO협력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AFD 웹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 그 외 AFD의 정책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재난과 재난 후 환경에 대한 고려	‘위기-재건-개발’의 연속환경에 대한 이해 개선, 각 환경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지원, AFD-외교부-CSO간 심도 있는 대화
CSO참여 방식에 대한 적응	주요 프랑스 CSO 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식 도입 - 다년간 파트너십 체결, 공동출자 비율증대, 공공이익 프로젝트(국제개발 및 연대교육사업, 커뮤니티 협력강화, CSO 조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협력강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
심사 및 모니터링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 자료, 정산서, 보고서에 대한 간소화
CSO 이니셔티브 규정 개선과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예비선발을 위한 ‘Calls for expression of intention’ 실시 등

출처: AFD(2017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난 20여 년간 CSO는 식수 및 위생, HIV/AIDS 예방, 소액금융 등의 사업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길러왔고, 스스로 개발한 사업(CSO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용역, 권리 옹호 활동, 수원국 파트너의 역량강화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 원조의 접근성, 지속가능성, 수원국 현지 CSO 역량강화를 위해 CSO의 참여는 AFD 사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⁷⁾

7) AFD (2013)

CSO 지원 분야는 CSO 역량강화, 인권, 민주주의, 기후변화 대응, 경제 및 사회개발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SO만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특수 환경(재난 후 상황, 취약국가 등)에서 CSO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 지원 분야별 비중은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CSO 프로젝트 분야별 비중(2012-2016)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공공이익*	12.0%	25.0%	18.0%	13.0%	27.0%	19.0%
보건, HIV	28.0%	15.0%	22.0%	14.0%	10.0%	18.0%
농업	29.0%	17.0%	8.0%	20.0%	18.0%	18.0%
인권, 거버넌스	9.0%	19.0%	23.0%	20.0%	21.0%	18.0%
교육	10.0%	3.0%	14.0%	13.0%	9.0%	10.0%
경제개발	4.0%	7.0%	3.0%	10.0%	4.0%	6.0%
식수, 위생	5.0%	8.0%	9.0%	1.0%	2.0%	5.0%
환경, 천연자원, 기후	0.0%	4.0%	3.0%	9.0%	5.0%	5.0%
재난 후 지원	-	-	-	-	4.0%	4.0%
인프라, 도시개발	3.0%	3.0%	0.0%	0.0%	0.0%	1.0%

출처: AFD (2017a)

* 공공이익: 국제개발 및 연대의식 교육, 커뮤니티 협력강화, CSO조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협력 강화 등

CSO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는 2012-2016년간 444백만 유로, 이 중 65%는 'CSO 이니셔티브' 방식의 지원이었다. 대상 지역은 아프리카(65%), 지중해 지역(16%), 아시아(10%), 라틴아메리카(10%) 순이다. 2012-2016년간 주요 15개 CSO가 총 CSO 지원액의 54%를 지원받았다. 프랑스 CSO를 통한 ODA 지원금을 2배로 증대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사실상 프랑스 CSO가 조직 규모와 분야에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케 되었고 매년 신규 CSO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CSO 이니셔티브' 보조금을 받은 프랑스 CSO의 사업으로 2,500여 개의 수원국 현지 CSO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140개의 프랑스 CSO가 324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⁸⁾

(2) CSO 협력 방식

1990년대 초부터 농업, 도시개발 분야에서 NGO들이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참여해왔다. 2000년대로 들어와서 교육, 보건, 환경 분야로 NGO 협력 분야가 확대되었고, NGO-AFD 간 협정을 통해 환경 분야 및 국제연대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증대되었다. 또한, 협력 방식도 용역계약을 통한 사업 수행, 공동출자 등으로 다양해졌다. 2009년부터 프랑스의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MAEDI)는 CSO 지원 사업을 AFD에 일임하여 매칭펀드의 형식으로 CSO에 직접 사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형식으로 CSO는 AFD와 협력하고 있다. CSO 협력은 AFD 내의 CSO 파트너십 부서(NGO Partnerships Division: DPO)에서 전담하고 있다.

AFD-CSO간 전반적인 협력에 관해 다룬 보고서를 종합하여 AFD가 채택한 협력 방식은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CSO에 공동출자 형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CSO가 구상한 사업과 AFD가 공모한

8) AFD (2017b)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AFD의 사업과정에서 용역계약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AFD-CSO 간 협력 증진과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 등의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표 3〉 AFD-CSO 간 협력 방식

협력 방식	특징	대상
직접지원 (co-financing)	CSO 이니셔티브: 프랑스 CSO가 주도하여 만든 사업을 지원. AFD와 CSO 간 공동출자로 최대 3년간 사업특성에 따라 AFD의 지원금이 예산의 50~75%로 상이함.	프랑스 CSO
	FISONG (Sectoral Innovation Facility for NGOs): AFD가 선정한 테마에 따라 연 2회 혁신적인 개발협력 아이디어 공모 (농업, 환경, 기후, 에너지, 식수 및 위생, 보건, 도시개발, 교육, 직업훈련, 사회복귀, 기업가 양성 등 전 분야)	프랑스 CSO 현지 CSO 국제 CSO
	APCC (Calls for Crisis and Post Crisis Projects): 재난 및 재난 후 긴급지원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현지 및 국제 CSO, 현지 정부와의 공조 제고	프랑스 CSO 현지 CSO 국제 CSO
	FFEM (French Fund for World Environment): 생태다양성,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하는 아프리카 CSO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	아프리카 CSO
프로젝트 참여 용역계약	AFD 프로젝트 단계 참여(사업기획, 타당성 조사, 사업수행), 연구용역, 영향평가	프랑스 CSO 현지 CSO 국제 CSO
정책, 전략 대화	AFD의 개발협력 전략에 관한 고위급 정책대화	AFD와 협력하는 주요 CSO대표
	프랑스 CSO와의 협력방안 개선	프랑스 CSO
지식생산	CSO네트워크, CSO 프로젝트 경험 자료화 및 공유	프랑스 CSO

출처: AFD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CSO는 분야 전문성, 사업관리능력, 현지 전문성의 강점으로 AFD의 사업에 자주 참여한다. 주로 사업기획, 타당성 조사, 혁신적 접근방식 연구 등에 참여한다. 또한 CSO는 직접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AFD의 개발 프로젝트와 환경 및 사회영향 평가 그리고 정책, 전략대화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에 수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⁹⁾

AFD는 유무상 원조를 모두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CSO 협력 전략 또한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AFD의 관계자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프랑스의 유상원조에서의 CSO 참여방식을 정리하였다.

〈표 4〉 프랑스 유상원조에서의 CSO 협력 방식

구분	유상원조에서의 CSO 협력 방식	세부사항
정부차관 (AFD)	- 유상원조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주로 개별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 기관) - 수원정부대상 정책자문(주로 학계, 연구원)	예비조사, 타당성 조사, 사회 환경 분석, 사업 모니터링, 종료평가, 영향평가, 정책자문
	- 유상원조 사업실행(주로 부분적, 무상사업형태)	CSR 관련, 커뮤니티와의 밀착접근 방식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요소
	- 유상원조사업의 직접 수혜	유상원조 사업에서 수혜 기관 역량 강화 지원 등
기업대출 (AFD, PROPARCO)	- 유상 프로젝트에 보완적인 무상사업 참여 - 직접수혜 - 연구용역(주로 컨설턴트)	농업, 산림, 환경, CSR 부문

출처: AFD 관계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9) AFD (2012a)

유상원조에서의 AFD와 CSO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혼합형’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유무상 혼합이다. AFD의 유상사업에 보완적인 무상 사업을 CSO가 수행한다. 사회적 책임, 커뮤니티의 참여와 밀접한 사업요소를 CSO를 통해 실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둘째, 프로젝트-연구-역량강화의 혼합이다. AFD는 사업의 예비조사(타당성 조사), 사회 환경 분석, 사업 종료 평가, 영향평가 등 유상사업에 필요한 연구를 CSO를 통해 실시한다. 또한 유상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데 CSO가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CSO 자체가 역량강화 수혜기관이 되기도 한다.¹⁰⁾

〈표 5〉 프랑스의 CSO 협력 예시

프로젝트	협력 방식	세부사항
가나 고무생산 산업 지원 사업	직접수혜 (역량강화)	가나 농업개발은행(ADB)에 32백만 유로 대출 지원. ADB-GREL-고무생산자협회(ROAA)의 3자간 협정체결. 5,500농가(18,000ha의 고무 플랜테이션)에 대출, 고무생산자협회(ROAA)의 역량강화 지원.
코트디부아르 도시 빈민지역 상수급수 지원 사업	사업실행	코트디부아르 경제인프라부에 C2D(부채탕감개발협정)의 형태로 도시빈민가의 상수 급수 지원. 수도회사(SODECI)가 실행기관으로서 상수 급수 연결 시행. NGO인 Action Against Hunger가 사업 수혜자 선정, 커뮤니티 위생 인식 개선 활동 실행.
인도네시아 기후정책 및 기술지원 차관	사업평가	2012-2013(2년)간 AFD-JICA 공동예산으로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비 예산지원 및 기술지원 평가. IRD(국립연구소)와 University Paris-Dauphine 공동으로 평가 실시.
농업생태 분야 지원 평가		15년간의 AFD 지원 농업생태분야 사업에 대한 평가를 GRET(NGO)와 Montpellier Supagro(농업전문학교)가 실시.

출처: AFD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 Country Director, AFD Côte d'Ivoire 서면 면담(2018.3.12.)

〈표 6〉

프랑스의 CSO 협력 요약

협력 전략	협력 현황	협력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O를 통한 개발원조 증대 - CSO 직접지원(CSO 이니셔티브)을 통한 CSO 협력 강화 - CSO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상 혼합사업에서 CSO가 무상사업 수행 - 인도적 지원, 취약국 지원에CSO 적극 활용 - CSO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무상) - 사업기획, 계획 자문, 연구용역(환경영향평가, 사회환경분석) - 사업실행(Sub-project)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CSO 역량강화

출처: 저자 작성

(3) 프랑스 유상원조의 CSO 협력의 시사점

프랑스는 CSO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취약계층의 요구사항에 대한 높은 이해, 현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분야 전문성,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활동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랑스 원조의 지속가능한개발을 꾀하며, 프랑스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협력국 현지 시민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역량강화와 사업효과성을 동시에 증진시키고자 한다. 프랑스의 이와 같은 CSO 협력 전략은 토지 활용, 교통, 에너지, 식수, 보건 등의 개발 사업에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현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점을 지니고 있다. CSO는 현지 지방정부 및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 공동체와의 밀접한 협력 및 조정능력이 필요한 사업의 기획, 자문, 타당성 조사, 조직 역량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FD는 유무상 원조를 모두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유무상 혼합 사업의 형태로 CSO가 무상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세계은행(World Bank)

(1) CSO 협력 현황 및 특징

World Bank는 CSO와의 협력을 1970년대에 CSO를 포함한 다각적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으로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World Bank-NGO 위원회’의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공식화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그 참여적 접근을 통해 협력을 더 심화하였다. 1981년에 처음으로 CSO 협력 정책을 수립하였고, CSO와의 긴 협력의 역사 동안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2014년 ‘시민참여 주류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Strategic Framework for Mainstreaming Citizen Engagement in World Bank Group Operations, 이하 시민참여 주류화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World Bank는 그동안의 오랜 사업운영에서 지역별, 분야별로 축적한 경험을 통해, CSO 참여는 국가별 환경과 여건에 맞아야 하고, 정부의 주인의식이 중요하며, CSO 참여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갖고 해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시민참여 주류화 프레임워크’는 World Bank의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자문 서비스에서 시민참여 주류화를 용이하게 하고, 개발의

성과를 개선하며,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World Bank는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성과제고를 위해 CSO와 협력하는데 있어 다음의 하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CSO의 참여가 개발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 CSO 참여 확대
- 의무적 CSO 참여 매커니즘(협약, 고충처리 매커니즘)에서의 참여의 질적 성과 개선
-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혜자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CSO 참여를 100% 달성(수혜자 피드백)
- World Bank 사업 운영에서 수혜자 피드백을 포함하여 CSO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보고 개선

World Bank 사업에서의 시민사회참여의 주류화는 다음의 5가지 원칙에 따른다.

〈표 7〉 World Bank의 CSO 참여 주류화 5대 원칙

원칙	세부사항
성과중심	- CSO의 기여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참여 진입점 파악 - 주로, 공공재정운용, 거버넌스, 천연자원관리, 사회통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었음
사업의 주기 전반에 걸친 참여	- 사업준비, 실행, 평가 단계에서의 CSO 참여 증대

원칙	세부사항
수원국 시스템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원국 시스템이 CSO의 참여를 지원 및 강화하도록 지원
상황, 맥락 기반	- 협력대상국의 상황과 맥락에 기반한 접근, 수원정부 및 수혜자의 참여 의지와 역량 등 수원태도 고려
점진적, 반복적, 측정가능	- CSO 참여 주류화는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배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진전 사항에 대한 검토와 수정 권고

출처: World Bank (2014)

World Bank는 전 세계에 걸쳐서 수 백 개의 CSO와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의견 설문), 프로젝트 기획 자문(공청회, 포커스그룹 토의), 역량강화(제안서 작성 요령 강의 등), 연구용역(환경영향평가, 사회분석 등), 연수(커뮤니티 보건요원 훈련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 World Bank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에서 CSO의 참여 비율은 평균 82%로 매우 높다.

〈표 8〉 World Bank의 2010-2012년간 CSO 참여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합계
총 프로젝트 수	386.0	385.0	248.0	1,018.0
CSO 참여 프로젝트 수	330.0	309.0	204.0	843.0
CSO 참여 프로젝트 비율	85.0%	80.0%	82.0%	82.0%

출처: World Bank (2013)

이상원조에서의 CSO 참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개발정책대출(Development Policy Lending, 이하 DPL)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Investment Project Financing, 이하 IPF) 사업에서 CSO의 참여가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IPF 사업은 DPL 사업보다(6-12개월) 준비

기간이 더 길며(1-3년), CSO가 참여할 수 있는 부문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DPL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요구 사항이 까다로워 CSO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DPL 지원시 점차적으로 거버넌스나 사회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있어, 이를 중요시 하는 CSO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¹¹⁾ 2010-2012년 간 IPF 사업의 77%, DPL 사업의 86%에 CSO가 참여했다. 다만 CSO 참여사업의 비중면에서는 DPL이 IPF보다 높지만, CSO 참여 범위나 참여 강도측면에서는 DPL이 IPF보다 크지 않다.

World Bank 내 사회개발부에서는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Group을 두어 World Bank, 협력국 정부 CSO 간의 World Bank 지원 사업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에 참여적 접근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Group은 사회적 책무성, 시민참여 환경 조성, 참여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과 정책 관련 CSO의 참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2) CSO 협력 방식

World Bank의 유상원조(DPL, IPF)에서 CSO가 참여하는 방식은 <표 9>와 같다.

11) World Bank (2013)

〈표 9〉

World Bank 유상원조의 CSO 참여 방식

구분	세부사항
자문, 협의	-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핵심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자문 - DPL과 IPF의 경우 수원정부가 자문을 구하고, World Bank가 지원할 수 있음. 방법: 공청회 또는 회의, 포커스 그룹토의, 가구조사, 인터뷰, 전문가 그룹 활용. 마을위원회, 여성회 등 현지의 비공식조직 참여.
	- 세이프가드 관련 자문은 World Bank 지원 사업에서 가장 흔한 경우이며, 대부분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짐 - IPF의 경우 CSO 자문의 90%가 세이프가드 관련임 - 사업준비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실행 중 자문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위험관리, 공동학습, 수정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문 시 이해관계자를 분석해야 하며, 자문그룹 내 여성, 장애인 또는 취약 계층을 포함시켜야 함
	- 자문성과를 자료화하여 사업 실행단계에서 활용하도록 함
공동작업	- 의사결정과정과 행사에서 시민과의 협력은 시민의 요구에 더 잘 부합 할 수 있고, 시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방법: 의사결정 조직에서의 시민사회 멤버십 부여, 참여적 기획, 예산, 시민 재판관 활용 등
시민사회 의견 수집, 저장, 보고	- 시민사회의 피드백을 공공서비스 별로 시기에 따라 수집 (효과성, 포괄성, 거래비용, 서비스의 질) 방법: 설문조사, 포커스그룹토의, 핫라인, 커뮤니티 평점표
고충처리 매커니즘	- 토착민과 비자발적 이주를 유발할 수 있는 IPF의 경우 고충처리 매커니즘 필요 - 비자발적 이주를 유발하는 모든 사업은 재정착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함 고충처리 매커니즘은 사법적, 커뮤니티차원, 전통적 분쟁 조정 매커니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고충처리 매커니즘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사업준비 단계 및 실행 단계에서 미리 파악되어야 함 방법: 고충 트래킹 양식과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회의, 사업지 방문
사회통합과 임파워먼트	- 커뮤니티주도의 개발사업(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은 수혜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커뮤니티주도의 개발사업은 실행기간이 길며, 이는 참여적인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구분	세부사항
CSO 역량강화	- 시민, 시민사회, 커뮤니티, 정부관리 등의 공공재정관리, 천연자원관리, 업무 수행 역량강화를 통해 World Bank 사업의 성과를 제고함
ICT	- ICT를 매개로한 CSO참여를 통해 참여 절차의 투명성, 포괄성, 비용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출처: World Bank(20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0> World Bank의 CSO 참여 사례

사업명	CSO 참여방식	세부 내용
Niger Bain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Ecosystems Management Adaptable Program Loan	자문	환경과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활동을 사업준비 전 시작하여 사업준비 기간까지 지속하였음. 세이프가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사회,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주민, 취약계층,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세이프가드 보고서가 현지에서 공개 되어 독립적인 환경 및 사회전문가와 공청회를 통해 자문을 수렴. 이 과정에서 수혜 커뮤니티 관계자와 현지 개발 활동가들에 의해 몇 가지 핵심 이슈가 지적되었고,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주민 이주 절차와 재정착지 개척을 위한 서비스 설치,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요소 등이 포함되었음.
National Program for Community Empowerment (Indonesia)	사회 통합과 임파워먼트	인도네시아의 농촌 및 도시 기본 인프라 지원 사업의 보완적 프로그램으로서 CSO의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빈곤감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을 추가함. 3개의 인도네시아 현지 CSO를 선정하여 수혜자에게 지원금 및 서비스 제공 영역을 일임함. 현지 종교단체를 비롯한 현지의 약 60개의 CSO를 통해 23개 도를 거쳐서 약 40,000명의 사회 소외계층(HIV/AIDS 보균자, 토착민, 거리의 아이들, 장애인, 인신매매 피해자)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침.
Upper Cisokan Pumped Hydro-electric Power Project	고충처리 매커니즘	독립적인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고용하여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을 추적함. 고충 추적 양식과 지표를 활용하고 회의와 현지 실사, 성공적인 선례 조사를 함.

출처: World Bank(2014), World Bank(201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

World Bank의 CSO 협력 요약

협력 전략	협력 현황	협력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 전반, 사업주기 전반에 걸친 CSO 참여 주류화 - 협력대상국의 개발환경과 맥락에 기반한 CSO 협력 - 수원정부의 주인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프가드 자문 -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 시 CSO의 의사결정 참여 - 고충처리 지원 - 커뮤니티주도의 개발 사업에 CSO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 계획단계 자문, 연구용역(환경영향평가, 사회분석) - 사업실행(sub-project)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CSO 역량강화

출처: 저자 작성

(3) World Bank 유상원조의 CSO 협력의 시사점

World Bank도 AfDB와 같은 타 다자개발은행과 같이 CSO의 참여 강화를 넘어 World Bank 지원 전반에 걸친 주류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력국가의 환경과 맥락에 맞는 CSO 협력과 수원정부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협력을 강조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World Bank는 원조기관 중 CSO와 협력의 역사가 가장 긴 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과 교훈을 통해 CSO 협력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있다. 다양한 원조방식을 가진 만큼 CSO 협력 방식과 전략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전담 부서를 통해 World Bank-CSO-협력국간의 CSO의 협력증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CSO의 참가적 협력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도구(tool)도 개발하였다.

3.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 CSO 협력 현황 및 특징

AfDB의 차관은 개도국 정부를 직접대상으로 하거나 공기업 등에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차관(Sovereign)과 정부보증이 없는 공기업,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부차관(Non-sovereign)으로 구분된다.

AfDB는 1990년대 초 NGO와의 첫 번째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CSO와 협업을 시작하였다. 책임성, 투명성, 굿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참여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빈곤감소를 강조하는 AfDB는 CSO를 ‘핵심적인 개발파트너’로 규정하며 AfDB 사업 전반에 걸친 CSO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¹²⁾

1990년대 초 CSO와의 협력을 시작한 이래로 1996년 CSO가 참여한 사업비중은 19%지만, 2008년에는 78%로 증가하였다.¹³⁾ 초기에는 주로 빈곤감소(33%), 농업 및 농촌개발(30%), 여성지원(16%) 사업에서 CSO의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¹⁴⁾ 그 후로 농업, 에너지, 거버넌스, 취약국가지원(인권, 분쟁예방, 재건 및 화해), 기후변화, 성주류화 지원 등 다각도에서 CSO의 참여가 많이 요구되었다. 현재는 AfDB 5대 중점분야 전반에 걸친 CSO의 참여를 증진하고 있다.

12) AfDB (2012b)

13) AfDB (2012a)

14) AfDB (2001)

AfDB에 유상원조의 CSO 협력에 관한 별도의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유무상 구분 없이 공통된 정책 및 전략 문서를 따른다.

〈표 12〉 AfDB의 CSO협력 관련 정책, 전략 문서

연도	문서 제목
1991	Procedures, Mechanisms and Guidelin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Bank and NGOs in Africa
1999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olicy and Guidelines
2001	Handbook on Stakeholder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in AfDB Operations
2012	Framework for Enhanced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2013	Integrated Safeguard System(ISS) and gender operational policies
2017	Strengthening AfDB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Action Plan

출처: AfD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2018년 3월 현재)

AfDB의 ‘CSO와의 협력: 정책과 가이드라인(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olicy and Guidelines, 이하 CSO 가이드라인)’은 1999년 수립되어 CSO와의 협력을 위한 규정, 절차, 협력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⁵⁾ AfDB는 2012년에 보다 효율적으로 CSO와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게 하려고 ‘CSO의 참여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Enhanced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이하 CSO 참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현재 AfDB는 CSO ‘참여강화’를 넘어서 CSO 참여를 모든 사업에서 ‘주류화’로 하는

15) AfDB (1999)

CSO 프레임워크 개정을 준비 중이다. ‘CSO 참여 프레임워크’는 AfDB의 5대 중점분야인 ‘High 5s¹⁶⁾’와 ‘2013-2022 장기전략(Long-Term Strategy: At the Center of Africa's Transformation 2013-2022)’에 부합된다. ‘CSO 참여 프레임워크’의 기본 목적은 CSO와의 협력을 개선하고 참여와 조정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AfDB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① CSO와의 협력 형태 구축을 위한 기관역량 강화, ② 사업 활동을 향상하고 협력국가 지원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기관 직원들과 CSO간의 상호작용 증진, ③ 본부, 지역사무소, 국가별 사무소 및 프로젝트 인력 지침 제공이다.¹⁷⁾ 이 프레임워크는 CSO 아웃리치(outreach), 대화(dialogu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CSO 참여를 더 확대 및 심화하도록 고안되었다.

CSO 프레임워크 수립 이후 AfDB는 CSO 협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다. 2000년 AfDB-CSO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주무부서인 ‘시민사회부(Civil Society and Community Engagement Division)’를 만들었다. ‘시민사회부’의 주요 업무 분야와 역할은 아래와 같다.

16) High 5s(2015년 선정된 AfDB의 5대 중점과제):

i) 에너지 공급; ii) 식량보급; iii) 역내통합; iv) 산업화; v) 삶의 질 향상

17) AfDB (2012a)

〈표 13〉 AfDB의 시민사회부의 주요 업무 분야

구분	세부 사항
커뮤니케이션	- 시민사회 포털을 통한 CSO와 소통 - AfDB와의 협력을 희망하는 CSO에게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AfDB의 외부 웹사이트에 CSO 구역을 만들어 관련 정책, 전략문서, 자문회의 결과 등을 공유
CSO 데이터베이스	- AfDB의 인트라넷에 아프리카 내 CSO 정보를 등록한 플랫폼 구축(High 5s 중점 분야별, 국가별 CSO를 구분하여 등록)
AfDB-CSO 위원회	- AfDB-CSO간 협력강화를 위한 자문 제공
CSO 연례 포럼	- CSO 대표들, AfDB 간부, 정부 관계자의 참여로 AfDB-CSO 협력에 대한 고위급 대화

출처: AfDB 시민사회부 담당자 서면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fDB는 2017년 CSO의 참여강화를 넘어 AfDB의 전 활동에 CSO 참여의 주류화를 위한 목적으로 ‘CSO 참여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관련 정책과 절차의 검토와 수정, 주무조직 재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3개년 ‘시민사회참여(CSE) 액션플랜(Strengthening AfDB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Action Plan, 이하 CSO 참여 액션플랜)’을 만들었다.¹⁸⁾

AfDB는 ‘CSO 참여 액션플랜’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AfDB의 CSO 협력 현황과 관련 정책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CSO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2016년 8월-12월간 5개의 지역별 자문회의(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개최하였다. 지역별 회원국으로부터 온 300여 명의 CSO 대표들과 함께

18) AfDB (2017d)

향후 AfDB의 5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AfDB와 CSO간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는 AfDB의 새로운 'CSO 참여 액션플랜'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¹⁹⁾

(2) CSO 협력 방식

AfDB가 2012년 수립한 'CSO 참여 프레임워크'는 CSO의 참여 방식을 크게 아웃리치 및 커뮤니케이션(Outreach & Communication), 대화 및 자문(Dialogue & Consultation), 파트너십(Partnership)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관차원, 지역 및 국가차원, 그리고 사업차원으로 구분한다.

〈표 14〉 AfDB의 CSO협력 매커니즘

구분	Outreach and Communication	Dialogue and Consultation	Partnership
기관 (Corporate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자문을 위한 인트라넷에 포털 구축 - 온라인 도서관과 뉴스레터 제공 - 미디어 기사 - 텔레비전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DB의 간부급과 CSO 간 최근 이슈에 관한 정기적인 정책자문회의 - 연례회의에 CSO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 AfDB-CSO 포럼 개최 - 아프리카 경제회의에 CSO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DB의 정책문서에 대한 동료평가 - AfDB의 CSO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맵핑(mapping) - CSO 선정기준 마련 - 특화된 CSO간 MoU 체결

19) Principal Civil Society Officer 서면 면담(2018.2.22)

구분	Outreach and Communication	Dialogue and Consultation	Partnership
지역 및 국가 (Regional/ Country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개시 - 차관 및 무상원조 협정 체결 - 미디어 기사 - 텔레비전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을 위한 정기적인 자문회의 실시 - 정책 및 프로젝트 검토와 평가 - 정책대화, 국가지원 전략(CSP), 지역전략(RIPS) 수립 시 CSO 참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DB가 CSO 공여 기관 분야회의에 참석 - AfDB의 국가지원 전략(CSP)과 다른 수원국 지원 관련 전략 수립 시 CSO의 참여 - 취약국가 지원 사업에 CSO의 참여
사업 (Operation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준비, 사업 착수, 현지 조사, 사업 검토, 모니터링과 평가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 사업 기획단계에서의 CSO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AfDB의 이니셔티브 실행에 참여 - 수혜자를 상대로 인식 개선활동 - 세이프가드 시스템(ISS)에 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성과 모니터링 참여 - 사업 실행 참여 - 독립평가 매커니즘(IRM) 협조

출처: AfDB (2012a)

AfDB는 다양한 CSO의 참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상원조 사업에서 실제적 CSO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 기획단계와 사업실행 전 사업관리에 관한 자문,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로 한정되어 있다.²⁰⁾ ‘CS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업, 농촌개발, 산림, 어업, 도시 개발, 보건 및 인구, 환경, 교육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사업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의 경우 실행단계에서 CSO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사업수행자에 의해 대규모의 차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의 기획단계, 계획단계에 참여한다. 따라서 산업개발, 인프라개발, 에너지개발 사업에서 CSO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20) Principal Civil Society Officer 서면 면담(2018.2.22)

참여하는 것은 어려우며 대신 사회,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AfDB의 'CSO 가이드라인'은 유상원조 사업의 단계별 CSO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5〉 AfDB의 유상원조 사업단계별 CSO의 역할

사업단계	CSO 역할
사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발에 관련된 아이디어 및 자료 제공 - 사업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자문회의 소집 - 중점 수요 분야, 역량, 직접 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그룹의 수원태도 파악
사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확보, 사업대상지의 상태 및 동향 정보 수집, - 타 CSO가 수행한 사업으로부터의 시사점 파악 - 수혜자 환경 데이터 수집 - 제도정비 지원 - 초기 기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모니터링에 필요한 현지 지표 파악
사업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적절성, 타당성,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 모니터링, 평가 방식에 대한 심사
사업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을 통한 용역: CSO가 사업수행에 참여할 경우의 역할은 커뮤니티 참여증진, 일반적인 사업관리, 커뮤니티기반 조직을 위한 관리감독 및 코칭, 현지 기관에 기술 및 절차관련 지식 제공, 교육훈련 및 조직개발 서비스, 소액금융 등 금융중개 역할, 그 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보조적인 서비스 등 - 프로그램, 프로젝트 운영위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의 위원으로서 CSO의 대표가 참여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과정 모니터링 - 진행사업 및 종료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의견 수집 - 조직적 문제 진단과 내부 정보관리 및 학습시스템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참여적 모니터링 및 평가 도모 - 사업의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수혜자 및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와 시사점 도출 - 분야 프로그램 및 정부의 차관전략 검토

출처: AfDB(199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CSO의 참여는 CSO 기관 차원의 계약, CSO 소속 또는 AfDB 소속의 개인 컨설턴트와의 계약 체결로 이루어진다.

CSO가 사업수행기관이 될 수는 있으나 기관의 사업수행역량을 포함한 내외적 환경에 따라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fDB는 CSO와 수원국 정부와의 관계, 기관의 역량을 중요한 요건으로 선정한다.

〈표 16〉 AfDB의 CSO 협력 요약

협력 전략	협력 현황	협력 방식
- CSO 참여 주류화를 통한 5대 중점과제 분야의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제고	- High 5s (5대 중점과제인 에너지공급, 식량보급, 역내통합, 산업화, 삶의 질 향상) 분야에 CSO와 협력	- 사업기획, 계획단계자문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출처: 저자 작성

(3) AfDB 유상원조의 CSO 협력의 시사점

지난 20여 년간 CSO와 협력해 오면서 AfDB는 사업 기획과 사업 성과, 시민 및 공공기관과 AfDB 간의 관계,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한다.²¹⁾

그러나 정책 및 전략적인 방향과 비교해 실질적인 CSO의 참여는 아직 제한적이다. CSO ‘참여강화’를 넘어 AfDB의 활동에 CSO 참여를 ‘주류화(mainstreaming)’ 하려는 비전과 비교해 아직 CSO의 참여는

21) AfDB (2012a)

대부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CSO 주류화를 위해서는 CSO 협력 주무부서 외에 기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CSO 협력 전략과 실행방향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AfDB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직원훈련 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fDB가 2016년에 실시한 아프리카 지역별 CSO 대표자 자문회의에서도 CSO의 참여범위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²²⁾ CSO가 사업의 모니터링 시 신뢰도, 투명성,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CSO의 강점을 활용하고, 커뮤니티기반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형성단계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CSO의 자문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민간협력을 통한 유상원조 사례 평가

조사 대상 공여기관 모두 CSO와의 협력을 주류화 또는 확대,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CSO의 강점인 분야 전문성과 지역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CSO 협력의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2) AfDB (2017a), AfDB (2017b)

(1) CSO의 지역 전문성 및 사업관리능력 적극 활용

사업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정능력 및 지역 전문성이 높은 CSO의 강점은 농촌개발사업,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 식수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위 사업들의 사업기획 및 준비단계에서 자문(세이프가드, 고충처리 등), 타당성 조사, 조직 역량강화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현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CSO의 분야 전문성 적극 활용

공여기관들은 식수 및 위생, 농업, 소액금융, 에너지, 환경보호, 인권 등 CSO가 축적해 온 분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사회환경분석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3) 유무상 혼합형의 사업을 추진하여 CSO가 무상사업을 수행

유무상 원조 기금을 모두 운용하는 원조기관인 AFD, World Bank는 대규모 유상사업에서 사회적 책임, 커뮤니티의 참여와 밀접한 사업 요소를 CSO를 통해 무상사업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4) CSO와의 대화 채널 구축

CSO와의 정보공유, 원활한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 공여기관들은 모두 기관 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CSO간 협의체를 만들어 CSO와의 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5) CSO 직접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CSO의 강점을 활용하여 원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자국 및 협력국 현지 CSO의 역량강화를 위해 CSO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제안요청을 통한 입찰로 직접지원(무상)을 하고 있다.

III. 국내 민간협력 기관 현황

CSO는 크게 비정부기구(NGO),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이하 NPO), 학계, 사회적 기업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자발적 시민그룹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국가, 국가 간 차원에서 공공의 선(Public good)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을 의미한다.²³⁾

23) United Nations DPI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99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는 해외원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보 공유 및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²⁴⁾ KCOC에서 2003년부터 실시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실적은 4천 9백억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응답한 NGO 역시 실적이 약 4배 상승하였고 사업금액은 약 9배 증가하였다.²⁵⁾

NGO의 분야별 사업 현황 중 가장 많은 사업 수는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분야이며,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이 그 뒤를 따른다. 정부지원금 역시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크다.²⁶⁾

2011년 시행된 ‘ODA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큰 성과가 예상되는 기관’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1순위로 NGO(68%), 2순위로 정부기관(65%), 3순위로 대학, 병원 전문기관(37%), 4순위로 민간기업(28%)을 뽑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정부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발원조사업에서 NGO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신뢰를 하는 이유는 NGO가 가진 강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NGO의 강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24)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5) KCOC (2016)

26) KCOC (2016)

첫째, NGO는 지역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보유 하고 있다. ODA 사업은 단순 분야별 기술에 앞서 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문화적 이해가 우선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지역적 전문성은 프로젝트성 사업을 위주로 하는 일반 기업이나, 사업팀에서 기대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지역에 근거를 둔 NGO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

둘째, NGO는 기관별 규모와 조직은 다소 다르지만, 대다수 소규모의 조직구조를 통해 문서에 의한 복잡한 의사결정 방식보다는 신속한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NGO의 경우 현장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여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쓰나미 현장에서 NGO가 그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하고 그 위급성에 대해 알리고 대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 차원의 긴급구호도 있었지만 이름 없이 헌신한 다양한 NGO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당시 NGO뿐만 아니라 대학별 봉사단원, 의료봉사단체, 교육봉사단체, 긴급 구호단체 등 수많은 NGO가 스리랑카 쓰나미 지진해일 복구를 위해 힘썼고 이는 한국-스리랑카 양국의 우호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²⁷⁾

셋째, NGO는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사업 진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급변하고 다변화된 국제사회에서 국제외교 및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수혜자 중심의 원조로 평가될 수 있다.

27) 485명으로 구성된 25개 팀(대한적십자사 제외)이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함

넷째, NGO는 활동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보건, 의료, 농업, 건축,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NGO는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요한 요소로 사업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책무를 더 중시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며, 책무성 자가진단²⁸⁾을 통해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사업개발을 위해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및 지역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 NPO (Non-Profit Organization)

NPO는 설립의 목적과 운영이 이윤창출을 위주로 하지 않는 조직을 의미한다.²⁹⁾ 국내의 NPO는 단체가 등록된 기준으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한국 NPO 공동회의는 정보공유차원의 모임에서 시작하여 2006년 이를 발전시켜 ‘한국비영리복지관련단체연합회’를 결성하였다. NPO 공동회의는 NPO들의 모금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새로운 방법 모색, 행동강령, 도덕적 투명성 확보, 사회적 책임,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NPO들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연구

28) KCOC는 2014-2016년 3개년도 국제개발협력 NGO 책무성 자가진단 결과를 공개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책무성 자가진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는 총 179개 단체(누적 총 수)이며, 1회 이상 참여한 단체는 97개 단체, 3년 연속 참여한 단체는 22개 단체임.
29) OECD (2003)

조사 사업을 통해 정부와 정책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³⁰⁾

3.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³¹⁾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먼저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정의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 또는 시장실패를 완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원리, 혁신성에 기반을 둔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비즈니스 벤처(venture business)이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사회적 기회를 찾고 이를 구현해내는 사회적기업가의 아이디어, 도전정신, 열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³²⁾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30) 한국 NPO 공동회의 공식홈페이지

31) 2015-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글로벌창업팀(총 55팀)을 대상으로 조사

32)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벤처(Social Venture)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목적 및 운영의 원리는 유사하지만, 정부 인증이 필수인 사회적기업에 비해 소셜벤처는 인증 제도에서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업화가 가능함

3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해외에서도 창의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분야는 크게 ① 일자리 창출, ② 지역개발(식수), ③ 제조·판매, ④ 인권신장 및 정체성 확립으로 나누어진다.

글로벌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들은 2015년부터 글로벌 특화팀을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성장 폭이 아직은 매우 낮다. 1년에 14-15팀이라는 적은 수이지만, 이미 현지에서 인정받은 기업들은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기업의 선순환 기능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은 개도국 주민만이 아닌 공여국 즉, 사회적기업가의 모국인 한국에서도 판매가 된다. 자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그 금액을 다시 개발도상국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사회적기업가들이 이익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글로벌 분야에서 그들만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국내 확산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업 분야 및 특화된 사회적 목적(Social Mission)으로 NGO와 NPO가 가지고 있는 모금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³⁴⁾ 사회적

3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업은 사회적 목적(Social Mission)과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만 없으면 많은 수익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즉,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기업을 만든다는 그들이 정해놓은 협의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4. 학계

국내 학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개발과 관련된 학계 현황은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이하 DAK) 등록기준, ODA 정보 포털 사이트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 체결 기준, 기타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 학술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DAK는 시민사회, 정부, 학계, 기업을 포함하는 무상원조 분야의 혁신적인 민관협력체제이며, 총 207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39개 기관은 학계 및 연구기관으로 분류된다.

ODA 정보 포털의 MOU 체결을 기준으로 14개 기관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행정, 국토개발, 경제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석사학위 과정 운영 협력 및 국제보건의료 분야, 환경주류화 사업, 기후변화 대응기술 분야 연수 및 연구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타 학술기관은 DAK 또는 ODA 정보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기관 이외의 학술 단체 중 개발협력센터를 운영 중인 학술기관을 분류하였다.

국내 학계는 학교 자체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별로 ODA 사업 수행 및 각 분야 전문 교수들은 전문가로 현지조사를 하는 형태로 개인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민간협력에서 학계의 역할은 분야별 전문성 있는 연구와 평가를 통해 민간협력 사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수립 및 개발 전략의 기초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계가 현장과 정책수립 과정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틈을 감소시켜 거시적 개발 담론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기관 및 정책 결정 기관들이 학계와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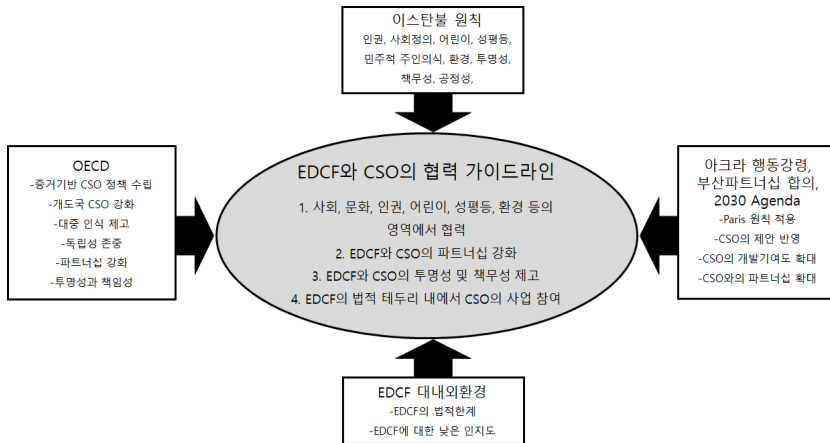
IV. EDCF와 CSO 협력 모델

1. EDCF와 CSO의 협력 가이드라인

CSO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양자 또는 다자 개발원조 기구와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오랫동안 구축해 온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역 여건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높은 서비스 전달력, 그리고 분야의 기술 및 전문성 등의 역량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혁신성 등이 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CSO의 장점과 EDCF의 환경에 따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EDCF와 CSO의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는 공적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수용하되 국내 ODA 환경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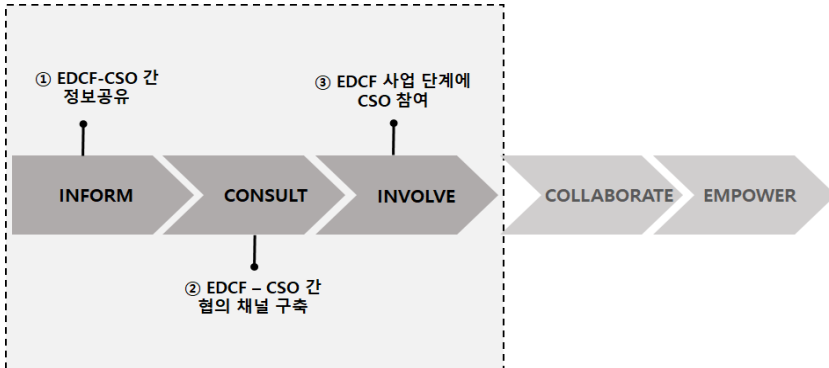
〈그림 1〉 EDCF와 CSO의 협력 가이드라인



출처: 저자 작성

2. EDCF와 CSO의 협력방안

〈그림 2〉 EDCF-CSO 협력 모델



출처: IAP2, Public Participation Spectrum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의 EDCF와 CSO의 협력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진은 EDCF와 CSO 간 협력 모델로서 ① EDCF-CSO 간 정보 공유, ② EDCF-CSO 간 협의 채널 구축, ③ EDCF 사업 단계의 CSO 참여라는 3가지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EDCF-CSO간 정보 공유

EDCF는 주로 대형 인프라 건설을 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무상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비교할 때, 그동안 CSO와의 협력이 활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CSO의 EDCF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EDCF 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 또한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EDCF 역시

국내외 CSO 현황, 사업사례 등 전반적으로 CSO에 대한 인지가 충분하지 않았다. 앞으로 EDCF가 CSO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EDCF는 사업정보, 사업참여를 위한 절차와 규정, 협력 전략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CSO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전담 창구(홈페이지 CSO 구역 마련, 유선전화망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EDCF는 CSO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기관 내 CSO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야별, 지역 및 국가별 전문성을 가진 CSO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EDCF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표 18> CSO 선정 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CSO 평가 관리가 요청된다.

(2) EDCF-CSO간 협의 채널 구축

EDCF는 사회적 자본,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환경, 기후변화, 인권 등 EDCF가 사업 전반에 걸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범분야적 이슈와 사업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CSO와의 협의를 통해 EDCF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CSO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대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EDCF-CSO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강화를 위한 대화 시행, CSO와의 포럼 개최(주제별, 지역별)를 제안한다.

(3) EDCF 사업 단계에 CSO 참여

〈표 17〉 EDCF 사업 단계별 CSO 협력 방안 제안

단계	CSO 역할
1. 사업발굴	- 사업개발 단계에서 사회적 자본, 환경, 젠더, 인권, 어린이, 문화 다양성 등을 고려한 검토의견 제공 - 수원국 개발환경 및 수요에 관한 정보 제공(수원태도, 타 공여국 지원 현황, 중점 수요 분야 등)
2. 사업준비	-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사업실시계획서 검토 - 사회적 자본, 환경영향평가, 사회환경분석 및 세이프가드, 고충처리 매커니즘 개발 - 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3. 사업심사	- CSO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현지 심사 참여 - 프로젝트의 적절성, 타당성, 원조 조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의견 제공
4. 약정 체결	-
5. 사업실시 및 감리	-
6. 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 사후평가 및 영향평가 - 사후관리, 출구 전략 수립 자문

출처: 저자 작성

가. 사업발굴

사업 개발단계에서 CSO는 사회적 자본, 환경, 젠더, 인권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기획 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 현지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원국 정부, 직접적 수혜그룹, 간접적 수혜그룹의 수원 태도, 타 공여국의 동 분야 지원현황 등 현지 개발환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EDCF 사업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EDCF 원조 사업의

투명성과 타당성 제고 뿐만 아니라, 수원국 내 공공 및 민간의 협조와 협력을 끌어내 수원국의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한 수원국 내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과성 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업준비

사업준비 단계에서 CSO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 전문성과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CSO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원국 측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EDCF 측은 CSO에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실시 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의뢰하여 사회적 자본, 환경, 젠더, 인권 등 주요 범분야적 이슈와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검토한다. 또한 CSO는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영향 분석을 통해 주민이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이프가드 마련에 협력할 수 있다.

다만 국내 CSO의 여건상 현지 전문성과 분야별 전문성 그리고 공적 원조 사업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CSO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검증된 CSO 간의 컨소시엄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사업심사

CSO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현지 심사 시 CSO가 참여하여 사업의 적절성, 환경, 사회적 타당성, 잠재적 영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환경영향, 여성참여

증진, 취약계층(학교 밖 아동, 장애인, 난민, 고아, 청소년 등)의 인권 보호 등 CSO의 전문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서는 현지 심사 시 CSO의 참여를 고려하도록 한다.

라. 약정 체결 / 사업실시 및 감리

한국 정부와 수원 정부 간의 차관 약정 체결이나 사업실시 및 감리 단계에서 CSO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EDCF는 수원 정부가 구매계약 수립 단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현지 CSO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댐 건설 시 건설 공정에 따른 주민 공청회, 세이프가드, 고충 시정 등을 CSO가 주민들과 직접 시행하여 주 계약업체의 공정을 바로잡도록 한다.

마. 평가 및 사후관리

CSO는 사후평가에 참여하여 사업 선정의 적정성, 운영의 문제점, 사업 지역 및 수원국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사업 평가 시 CSO에게 참여기회를 주어 성 주류화, 환경영향, 인권 등에 대한 고려가 사업기획 및 실행에 반영된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사업 부문별 정량화된 사업 평가를 넘어 지역사회에 미친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는 영향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CSO는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및 조직 그리고 수원국의 제도와 재정적 환경을 고려하여 사후 관리 방안 및 출구 전략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CSO 선정기준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향후 EDCF 사업에 CSO가 참여할 경우 분야 전문성 외에도 조직적 역량과 현지 전문성 등 다각도에서 CSO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CSO 선정기준을 수립하였다. 주요 선정기준은 ① 기관의 사회적 인증, ② 사업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③ 법적 지위와 역사, ④ 조직의 인적 및 물적 역량, ⑤ 현지 지역 전문성과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 ⑥ 경영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이다.

〈표 18〉 EDCF 사업 참여를 위한 CSO 선정기준

구분	기준
1. 사회적 인증	KCOC 가입 기관
2. 분야 전문성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정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 파트너십 구축현황, 발행물 등 단체의 활동 증빙)
3. 법적 지위	정식 인가 또는 등록(최소 5년 이상 활동)
4. 조직적 역량	조직 구성, 규모, 물적 자원
5. 지역 전문성 및 현지 사회 이해도	현지핵심인력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에 대한 전문성(현지 지역 사무소 운영), 현지 네트워크 보유, 현지인들에 대한 인지성과 책임성, 성인지역
6. 거버넌스	경영의 건전성, 회계 투명성(회계보고서 공개)

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연구진은 EDCF와 CSO의 협력 모델 도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프랑스의 유상원조와 CSO 협력 사례, 둘째, World Bank 및 AfDB와 같은 다자간 원조 기구와 CSO 협력 사례, 셋째, 국내 CSO 기관들의 현황, 넷째, 국제 사회의 공적원조와 CSO 협력의 가이드라인이다.

해외 양자 및 다자간 유상원조 기관들의 CSO 협력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공여국 및 공여 기관들의 CSO와의 협력은 대내적으로는 신뢰도 및 투명성을 강화 할 수 있다. 공여 기관에 대한 CSO의 견제와 감시를 공여 사업의 외부가 아닌 공여 사업 과정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킴으로서 공여 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CSO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여기관들은 과거 비주류적 관점으로 여겨지던 사회적 자본, 여성, 어린이, 환경 등의 이슈들을 주류화 할 수 있다. CSO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및 관점의 조율을 원조 사업으로 편입시켜 원조사업 부문들의 복잡성과 중첩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강화 할 수 있다. 셋째, 국가 대 국가 혹은 국가 대 기구라는 유상원조의 틀 속에서는 소외 되어왔던 최종 수혜자들을 원조사업의 주요한 이해 당사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당국간 혹은 기구간 대화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에게 지역이나 부문에서의 이해관계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원국 측의 주인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원조사업과 CSO의 협력에 대한 원칙과 규범들을 이미 제시 하고 있고 이는 향후 EDCF와 CSO의 협력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원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EDCF는 CSO의 전문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협력의 규범들은 풀뿌리에 기반한 CSO의 지역 전문성 및 분야별 전문성이 원조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원조 기관이 수용할 때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CSO와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적 협력이 아니라 상위 단위인 정책적, 전략적 차원에서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 국제사회가 CSO와의 협력을 중요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CSO가 지역적 토대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토대를 유지 한다는 것은 지역의 요구를 감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원조사업의 근본적 목적인 최종수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는데 기초적인 사항이 된다. 따라서 원조사업의 정책 및 전략 수립 논의 과정에서 CSO의 참여는 최종 수혜자들의 입장 반영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CSO들은 크게 NGO, NPO, 학계, 사회적 기업으로 나뉘어 있고 2000년대 중후반기 이후로 급성장 하고 있다. 한국 CSO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진은 EDCF-CSO 협력 사업을 위한 다음과 같은 CSO에 대한 검토를 제언한다. 첫째, 수원국 현지에 대한 CSO의 지역 전문성을 검토해야 한다. 많은 CSO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현지 네트워크, 활동 사항 및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 환경, 여성, 어린이 이슈 등에 대한 전문가 활용, 축적된 노하우, 활동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ODA 사업 참여 경험을 보아야 한다. ODA 원조 사업의 특성과 절차 그리고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CSO의 이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EDCF는 타공여기관들과 동일한 방식의 CSO 협력을 할 수는 없다. EDCF가 유상원조에만 한정된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일본 등 타공여기관들이 유상원조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무상원조 사업으로 CSO와 협력하고 있는 반면, EDCF는 법적으로 무상원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타공여기관들의 CSO 협력 사례와 국제 사회의 CSO협력 규범과 원칙 그리고 EDCF의 제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EDCF와 CSO와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정보 공유를 위한 EDCF-CSO 협의이다. 지금까지 무상원조에 비하여 EDCF 원조 사업에 대한 CSO의 인식은 크지 않았다. 양자간의 협력관계 향상을 위하여 EDCF의 사업 정보, 사업참여를 위한 절차와 규정 그리고 협력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 여성, 어린이, 환경, 인권 등에 대한 주류화 관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위 단위에서의 정책 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타당성조사와 영향평가 그리고 심사와 평가 같은 사업 준비 및 실시 단계에서 CSO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기회를 CSO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EDCF (2016). 2016 EDCF Annual Report.
____ (2017a). EDCF 가이드북.
____ (2017b). 대외경제협력기금 30년 역사.
____ (2017c). 2017 세계 ODA 통계자료집.
KCOC (2016). 2015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국외문헌

- AFD (2012a). Plan d'Orientations Stratégiques 2012-2016.
____ (2012b). L'AFD et l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 un partenariat renouvelé et renforcé.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____ (2013). Cadre d'intervention transversal L'AFD et les OSC(CIT/OSC) 2013-2016.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____ (2016). Methodology Guide for Co-funding of "Field" and "Public Interest" Projects and Programmes.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____ (2017a). L'AFD et les organisations de la société civile: 2012-2016 un partenariat enforcé.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____ (2017b). Rapport Annuel 2016.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____ (2017c). L'AFD en chiffres 2012-2016. Paris,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B (1999).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 Policy and Guidelines.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____ (2001). Handbook on Stakeholder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in AfDB Operations.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____ (2012a). Framework for Enhanced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 _____ (2012b). Long-Term Strategy: At the Center of Africa's Transformation 2013-2022.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 _____ (2017a). Central Africa Civil Society Regional Consultation Report. (Yaounde, 2016.11.26.-28.)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 _____ (2017b). West Africa Civil Society Regional Consultation Report. (Dakar, 2016.8.31.-9.2.)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 _____ (2017c). Annual Report 2016.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 _____ (2017d). Strengthening AfDB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Action Plan.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 CICID (2013). Relevé de décisions :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du 31 juillet 2013.
- MAEDI (2017). Document d'orientation politique relatif au partenariat entre le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et du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et la société civile. Pari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 MAEE (2011).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Une Vision Française-Framework Document, Paris,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 OECD (2003).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 Paris, OECD.
- _____ (2010). Civil Society and Aid Effectiveness: Findings, Recommendations and Good Practice, Better Aid, Paris, OECD.
- _____ (2011). How DAC members work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Paris, OECD.
- _____ (2012).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 12 Lessons from DAC Peer Reviews. Paris, OECD.
- World Bank (2000). Working Together: The World Bank's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Washington. D.C., World Bank.
- _____ (2013). World Bank-Civil Society Engagement Review of Fiscal Years 2010-2012. Washington, D.C., World Bank.
- _____ (2014). Strategic Framework for Mainstreaming Citizen Engagement in World Bank Group Operations. Washington, D.C., World Bank.

온라인 자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www.ngokcoc.or.kr) (검색일: 2018.1.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www.odakorea.go.kr) (검색일: 2018.1.1)

열매나눔재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rryyear09>) (검색일: 2018.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검색일: 2018.1.3)

한국수출입은행 (<https://www.edcfkorea.go.kr>) (검색일: 2018.1.5)

한국 NPO 공동협의회 (<http://npokorea.kr>) (검색일: 2018.1.5)

AFD (<https://www.afd.fr/fr>) (검색일: 2018.3.1)

AfDB (www.afdb.org) (검색일: 2018.2.1)

IAP (www.iap2.org) (검색일: 2018.4.10)

ODA 포털사이트 (<http://www.oda.go.kr/opo/masc/mainPage.do>) (검색일: 2018.1.3)

OECD.Stat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1.18)

PROPARCO (<https://www.proparco.fr/fr>) (검색일: 2018.3.12)

World Bank (www.worldbank.org) (검색일: 2018.3.20)

EDCF

I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도현 한국수출입은행 조사역

탄자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오경일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도현

한국수출입은행 조사역

목 차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2. 사회동향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1. 국가개황

1. 일반개황

면적	677천 km ²	GDP	663.6억 달러
인구	52.7백만 명 (2017년 기준)	1인당 GDP	1,260.4 달러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Kyat(KT)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1,360.4

-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는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민족구성(버마인 70%, 소수민족 25% 등)과 종교분포(불교 89%, 기독교 4%, 이슬람 4% 등)가 복잡하여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음.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버마연방을 국가명으로 사용하다가 1989년에 미얀마연방으로 개칭하고 2010년에는 헌법규정에 따라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함.
- 1962년 군사정권 출범으로 폐쇄적이고 자급자족하는 고립경제 체제를 채택하였으나, 2011년 민간으로의 정권 이양, 2015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당(NLD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집권 및 2016년 NLD 당의 틸 쉐 대통령 당선으로 50여년 만에 민주적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산림,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인근 국가 대비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 등을 보유함.
- 전력, 도로 등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오랜 군부 통치로 자본시장 개방정도가 미비하였으나 최근 신 외국인투자법 시행 등 외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5.5.16 수교 (북한과는 1975.5.16 수교, 1983.11 단교, 2007.4 복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67), 항공운수협정('78), 이중과세방지협정('02), 사증면제협정('10), 투자보장협정('14)

〈표 1〉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659,895	760,717	573,174	직물, 수송 및 산업기계, 섬유제품
수 입	505,679	458,666	463,336	섬유제품, 농산물, 생활용품, 비철금속

-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 총투자 기준): 393건, 32.4억 달러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8.0	7.0	5.9	6.7	6.9
소비자물가상승률	5.1	10.1	6.8	5.1	5.5
재정수지/GDP	-0.9	-4.4	-2.5	-3.5	-3.9

출처: IMF WEO

□ 외국인투자 증가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6.7%로 전년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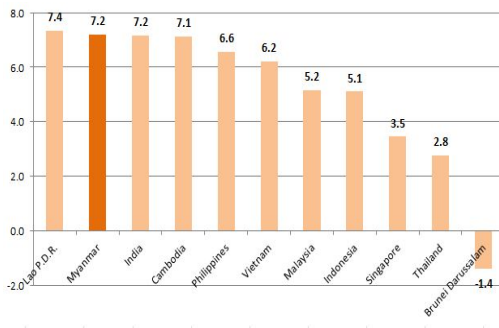
○ 2011년 군부가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미얀마는 2013-2014년 중 서방 국가들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기술·재정적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8%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였음.

* 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승인액(백만 달러, OECD) : 307('11) → 2,717('12) → 7,201('13)

○ 한편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가격 하락,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2015-2016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2017년 신 외국인투자법 시행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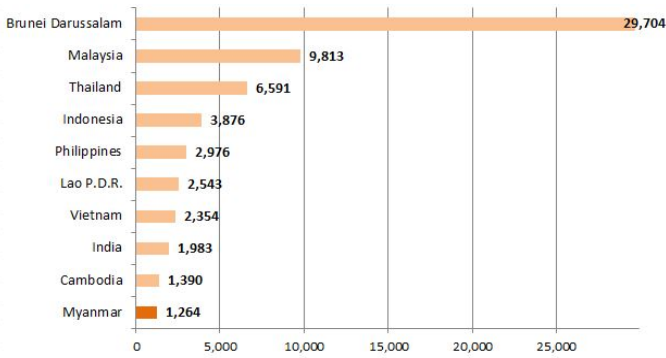
* 천연가스 국제가격(Henry Hub Spot Price, \$/MMbtu) : 3.7('13) → 4.4('14) → 2.6('15) → 2.5('16) → 2.7('17)

〈그림 1〉 ASEAN 국가의 연평균경제성장률('13-17)



〈그림 2〉

ASEAN 국가의 1인당 GDP('17)



출처: IMF WEO

□ 짜트화 가치 약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5.1% 기록

- 미얀마는 2012년 4월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이후 경상·재정 수지 적자폭 확대로 미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물가 상승으로 2013-2014년 5%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짜트화/달러 환율(EIU) : 933.6('13) → 984.3('14) → 1,162.6('15) → 1,234.9('16) → 1,360.4('17)

- 2015년에는 총선 실시 및 대홍수로 인한 식량부족 해결을 위한 지출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CBM)의 화폐발행을 통한 차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까지 급등함.

- 2017년은 짜트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화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추진으로 전년(6.8%)보다 낮은 5.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증가, 짜트화 가치 약세 등으로 2018년에도 5.8%의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 인프라 투자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미안마는 2015년 총선실시 및 대홍수로 인한 식량부족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4.4%로 확대된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낮은 소득수준과 취약한 세수기반, 48년간의 군사 독재로 개발이 미비한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로 재정적자가 지속됨.

○ 2017년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5%를 기록하였으며 교통 및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관련 정부지출 증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유지가 예상되어 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8-2019년 중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대외거래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1,833	-2,450	-2,011	-3,349	-4,153
경상수지 / GDP	-2.8	-3.9	-3.1	-5.1	-5.7
상 품 수 지	-1,872	-3,773	-3,717	-5,192	-6,088
상 품 수 출	10,026	9,966	9,085	9,801	10,971
상 품 수 입	11,899	13,739	12,802	14,993	17,059
외 환 보 유 액	4,142	4,477	4,672	4,911	5,511
총 외 채	8,830	9,559	9,893	7,713	8,384
총외채잔액/GDP	13.3	15.3	15.3	11.6	11.9
D.S.R.	2.4	3.4	4.0	3.8	3.5

출처: IMF, EIU, OECD CRAM

※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4/1~3/31

□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12년 이후 수출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홍수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2016년 중 수출이 감소함.

-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외국인 투자 유입 및 대규모 인프라개발 사업 활성화로 자본재**·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3개월분에 미달(2.8개월)함.

* 2016.10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국가비상상황(National Emergency)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재무부 산하 자산

관리국(OFAC)의 경제 및 금융제제도 해제됨. 한편 EU는 2018년 4월 현재 라카인(Rakhine) 주 내 로힝야 족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로 경제제재 연장을 결의함.

** 자본재 수입액/전체수입액 비중 : 46%('14) → 51%('15) → 40%('16) → 37%('17^o)[미얀마 통계청]

*** 경상수지/GDP(%) : -0.6('13) → -2.8('14) → -3.9('15) → -3.1('16) → -5.1('17^o) → -5.7('18^l)

- 대규모 인프라개발사업 확대로 자본재 수입(輸入)규모가 천연가스 수출 및 관광업 등의 수입(收入)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2018년에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5.7%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외채상환능력

□ 과거 파리클럽의 부채탕감 및 채무재조정 실시 이후 외채상환능력 양호

- 2013년 파리클럽의 부채탕감(59억 달러 규모) 및 잔여부채 채무 재조정 실시 이후, 2017년 총외채잔액은 GDP의 12%, 총수출의 54% 수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외채 부담이 높지 않고 D.S.R.도 4% 내외로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대체로 양호함.

※ 파리클럽의 부채탕감('13.1) 전제조건으로,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한 투자환경 및 제도를 마련

□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유지

○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대 미얀마 제재 완화 및 신 투자법 시행 등으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미얀마 앞 공적개발 원조자금(ODA) 집행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연도별 FDI 유입액(백만 달러, EU) : 2,255('13) → 2,175('14) → 4,084('15) → 3,278('16) → 4,900('17)

** 외환보유액 증가율 : 4.4%('16) → 5.1%('17)

III. 경제구조 및 정책

1. 구조적 취약성

□ 기후특성상 자연재해 위험이 높고 정부의 대처 능력 부족

○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몬순(Monsoon) 기후지역에 속하며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이 빈번하고 벵골(Bengal) 만에 위치해 열대 폭풍인 사이클론(Cyclone)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며, 지진과 그로 인한 해일이 발생하는 등 수시로 다양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자연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국가임.

- Climate Risk Index(2017)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과거 20년 (1996-2015년)간 평균적인 피해규모로 볼 때 온두라스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며, 정부의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재난 후 수요평가(Post Disaster Needs Assessment)’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5년 7-10월의 대홍수로 15.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어 경제성장률이 하락(‘14년 8% → ’15년 7%)했으며 전체 인구의 17%가 홍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인프라 부족, 군부 영향력 지속으로 기업경영 여건 취약

- World Bank Group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90개국 중 171위로 최하위권이며, 특히 계약실행(188위), 소액투자자보호(183위), 자금조달(177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 미얀마는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2016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도 인프라 부문 최하위(134/140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은행 2016년 물류운용지수에서 물류경쟁력 최하위(113/160위)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및 제품 수급문제와 물류비용 상승이 현지 진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전력보급률 30%, 전체 도로 중 비포장도로 비율 44% 등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른 미얀마의 부패인식수준은 180개국 중 하위권인 130위로 평가됨.

- 현행 헌법상 선거 없이 미얀마의 상·하원 의석수의 25%를 군부가 할당받으면서 발생하는 정치적 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국영기업의 경우도 군 출신 인사가 정부 소유 주요 산업시설의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경영에 관여하면서 불투명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영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됨.

□ 소수민족 갈등 등 기초적인 국민의 생활안정성 낮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미얀마 노동인구 중 6.4%의 구매력 수준이 1.9달러 미만이며, 2015년 기준 전체인구의 32.1%가 국가빈곤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세계은행 분류 기준 중저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y)로 분류됨. 기대 수명은 66세 정도이고, 2016년중 5세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51명 수준임.

* 1인당 GDP가 1,045-4,125달러 이하인 국가

○ 빈곤 지역 주민들은 적절한 식수 공급 부족, 불안정한 식료품 공급, 기본 통신 인프라 부족*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힝야 족 인권탄압 문제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정부군과의 오랜 갈등을 겪고 있음.

* 식수접근율 81%, 인터넷 사용자 비율 25% 등

2. 성장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미얀마는 산림자원이 많고 지질학적 구조상 각종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함.

- 보유 국토의 48%가 산림지역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식물종과 수목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 티크(teak) 목재의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티크의 75%를 보유하고 있음.

- 우라늄이 함유된 페그마타이트(Pegmatite), 알라스카이트(Alaskite) 등 광물질, 루비, 옥 등 귀금속, 천연가스, 석유 등 각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 천연가스 매장량 : 2,832억m³ (세계 40위), 원유매장량 : 5천만 배럴(세계 75위)

○ 실제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발표한 '18.4월 기준 '미얀마의 산업별 투자유치 비중은 석유·가스 부문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전력 27.6%, 제조업 12.6%, 교통·통신 11.9%, 부동산 개발 6.5%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저임금의 젊은 노동력 보유 및 지리적 이점

○ 미얀마의 2017년 월평균 최저임금은 80-90달러 수준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저렴함.

또한 전체인구의 평균연령이 27.1세로 젊은 노동인구가 많아 세계 각국에서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의 진출이 활발함.

- 미얀마 노동부는 2018년 5월 기존(시간당 450짜트, 일당 3,600짜트) 대비 33% 인상한 시간당 600짜트, 일당 4,800짜트(3.6달러)로 최저임금을 확정함. 다만 인상된 월평균 최저임금(107달러)은 인근의 아세안 하위중소득국인 캄보디아(170달러), 라오스(144달러) 보다 낮아 생산비용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음.

※ 미얀마 최저임금법상 2년에 한 번씩 개정하도록 규정

- 또한 지리적으로 세계 2대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중국과 인도,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미얀마 내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거대 수출 시장 확보에 유리하고 동남 및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허브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3. 정책성과

□ 新투자법 시행 및 新회사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新투자법을 발표하고, 2017년 4월 기존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新투자법을 시행함.

- 주요 변경사항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 취득이 필요한 사업을 다섯 가지* 정도로 한정하고, 특별 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 허가대상 외의 투자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임.

* 1) 전략산업, 2) 대규모 자본투자 산업, 3) 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4) 정부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5) 투자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정부 지정사업

- 2018년 1월부터 발효되는 新회사법은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914년에 제정되었던 회사법을 대체하고, 기존에 외국회사(Foreign Company) 앞으로 부과하던 규제를 완화해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新회사법은 외국회사로의 분류 기준* 및 외국인의 미얀마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과거 외국인투자를 제한해오던 산업기계 및 제약 부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이 주요한 변경사항으로 포함됨.

* 외국회사 분류 조건 완화 : 외국인 보유주식 1주 이상 → 지분비율 35% 초과

-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2018년 4월 사립학교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투자를 허용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미얀마 내 사립학교 지분 100%를 소유·운영할 수 있게 됨.

□ 외국기업에 대한 무역규제 완화 노력

○ 미얀마는 경제개방 초기에는 순수 현지기업 앞으로만 무역업을 허가하였으나, 2015-2016년 중 현지기업과 합작형태로 운영하는 외국기업 앞으로 농업 및 의료기기, 건축자재 분야 무역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이후에도 무역 관련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음.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Notification 36/2017’을 통해, 정부가 장려하는 상기 3개 분야에 대한 무역을 미얀마 정부기관(DICA)에 정식 등록된 기업 중 상무부 산하 무역국으로부터 수출입허가증을 받은 외국기업으로 확장 허용기로 함.
- 2018년 5월에는 최초 투자금 요건*을 충족한 외국기업, 내·외국인 합작기업(20%이상 미얀마인 지분), 내국기업 앞으로 미얀마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도·소매로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함.

〈표 4〉 최초 투자금 요건

구분	외국기업	합작기업 (내국인 지분 20% 이상)	내국기업
도매업	500만불 초과	200만불 초과	해당 없음
소매업	500만불 초과	70만불 초과	

출처: Myanmar Times, 법무법인 지평

- 무역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노력은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국제무역 관습 및 규제 준수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IV.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민주정권 출범에도 군부 영향력 높아 정치 다소 불안정

○ 2015년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상·하원 의석의 과반이상을 확보하고 2016년 3월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인 틸 쉐(Htin Kyaw)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1962년 네 윈(Ne Win)*의 쿠데타 이후 54년 만에 첫 민주 정부가 출범함.

* 1962년 2차례의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미얀마의 대통령을 지냈으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도입했던 군인이자 정치인

- 아웅산 수치는 후보 출마 제한 조항* 개정 부결로 2016년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했으나, 틸 쉐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실장 및 외교부 장관의 겸직에 이어 국가고문으로 추대되어 실권을 장악함.

* 헌법 제 59조에 의거, 친족이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제한되며, 아웅산 수치는 작고한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영국 국적

※ 미얀마는 상원, 하원, 군부에서 각 1명씩 대통령 후보를 지명, 의회 투표를 통해 최대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선출, 나머지 2명은 부통령으로 임명

- 한편, 2018년 3월 틸 쉐(Htin Kyaw)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하면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또 다른 최측근인 윈 민트(Win Myint) 전 하원의장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됨.

- 정치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현행 헌법은 2008년 군사정권 당시 제정된 것으로 상·하원의 25%를 보장하고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 주요 각료에 대한 임명권을 군 최고사령관에 부여하는 등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편임.
- 2018년 1월 틸 쉐 대통령은 미얀마 독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각주의 자치권 강화 등 민주주의 연방 국가에 어울리는 신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
- 한편 개헌은 의회의 75%가 넘는 찬성이 필요하나, 의회의 25%를 구성하고 있는 군부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현 정권과 군부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으로 보임.

2. 사회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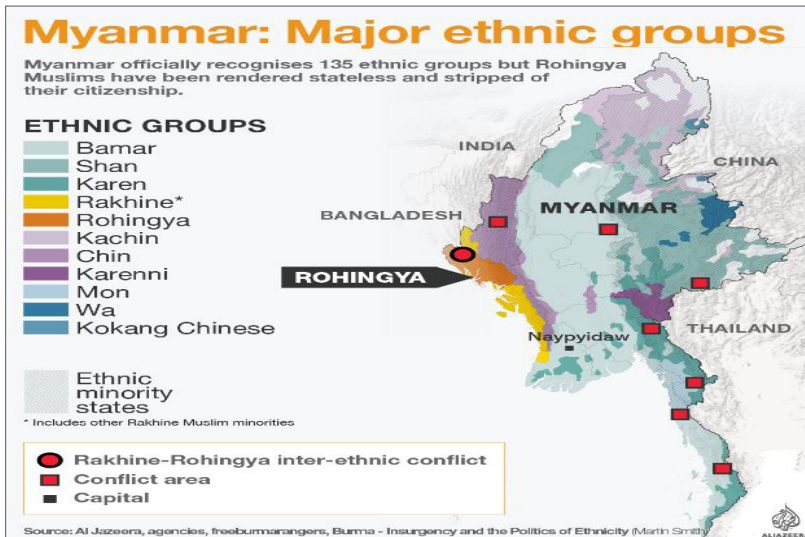
□ 로힝야(Rohingya) 족 사태 등 소수민족 갈등 심화

- 미얀마는 다민족 연방국가로 버마족이 인구의 70%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외 샨, 카렌 등 130여개의 소수민족이 있어 민족 간, 종교간 갈등이 지속됨. 그 중에서도 서부 방글라데시 접경지역 라카인(Rakhine) 주에 거주하는 로힝야 족 반군과 군부 간의 유혈사태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됨.
- 2017년 8월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 족의 주거지인 북서쪽 라카인(Rakhine) 주에서 경찰서를 습격한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 토벌을 빌미로, 미얀마 정부군이 무력을

행사하면서 400여명이 사망하고 7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것으로 파악됨.

-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태를 두고 ‘인종청소’라며 미얀마 정부를 비난하는 가운데, 2018년 6월 미얀마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UNHCR)와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70만 명의 로힝야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그러나 여전히 로힝야 난민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 자발적 귀국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로힝야 난민들이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로힝야 난민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3〉 미얀마 지역별 인종그룹



출처: Aljazeera 기사 ('Myanmar: Major ethnic groups and where they live', 2017.3)

3. 국제관계

□ 미국은 대 미얀마 제재 해제, EU는 로힝야 사태로 제재 연장 결의

○ 미국은 2015년 11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총선 승리 등 정치 민주화 진전에 따라 대 미얀마 경제제재를 완화하였으며, 2016년 10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 미얀마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및 기업들을 미국의 제재 리스트(SDN)*에서 제외함.

*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미국 정부가 자국기업과의 금융거래, 투자, 교역을 금지하는 ‘특별지정 제재 대상’

- 또한 미국 정부는 2016년 11월, 미얀마를 GSP(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대상국으로 재지정하여, 5,0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GSP 수혜품목의 현지 생산 및 대미 수출 활성화가 기대됨.

○ 유럽연합(EU)은 2018년 4월 지난해 불거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살인, 성폭행, 강제노동 등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해 이에 가담한 군부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자산동결 등 책임자 추가 제재와 함께, 기존의 무기금수 조치 및 합동 군사훈련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함.

□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 과거 미얀마 군부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문민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 본격화로 친 서방 정책을 펼치면서도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균형적인 외교노선 유지하는 모습임.

- BMI Country Report 기준에 의하면 중국은 미얀마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무세(Muse), 례제(Lweje) 등 국경 지역의 무역활성화에 따라 2017년 기준 수출 및 수입비중이 각 34%, 45%로 제1위 교역국이며,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비중은 10.5%로 싱가포르(57.5%), 베트남(20.8%) 다음으로 큰 주요 투자국임.
- 한편 미얀마 행정부는 2018년 6월 초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9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라카인(Rakhine) 주 내 차우퉁크 항구 건설사업과 관련해, 높은 금융 비용 부담, 채무불이행시 항만에 대한 통제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안해 동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함.

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과거 파리클럽 채무탕감 실시, 높은 ECA 금융 연체율 등 외채상환 지연

○ 2013년 1월 파리클럽은 회원국들에 대한 미얀마의 국가채무 103억 달러 중 56억 달러(54.4%)를 탕감하고, 43억 달러(41.7%)는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함.

* 채무탕감액의 25%는 즉시 탕감, 75%는 미얀마가 IMF 프로그램 이행 완료 후 2014년 3월에 탕감

○ 2018년 3월 18일 기준, 미얀마의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1,183.5백만 달러(단기 78.6백만 달러, 중장기 1,104.9백만 달러)로, 단기외채비율은 6.6%에 불과해 외채만기구조가 양호하나, 이 중 연체비율이 73.9%로 높은 편임.

2. 국제시장평가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8.6)	6등급 (2017.6)

* 동국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OECD 등급 상황, 국제신용평가 3사는 신용등급 미부여

○ OECD는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외채비율(GDP의 15%) 등 경제 여건 개선, 2015년 11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정당의 총선 승리 등 정치 민주화, FDI 유치를 위한 투자법 개정 등 개혁·개방 추진 등을 근거로 2017년 6월 중 미얀마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함.

○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8년 5월 현재 미얀마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VI. 종합의견

□ 2015-2016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정당의 집권 및 틸 쉐 대통령의 당선 등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와 공적개발원조 유입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함. 2017년에도 新투자법 및 新회사법 제정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6.7%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

□ 군부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 개발이 미비했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투자지출이 증가 및 세수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2017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GDP의 3.5%를 기록하였으며, 인프라 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 GDP의 5.1%를 기록함.

- 한편 민주정부 출범이후에도 헌법상 의회 1/4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군부가 차지하는 등 군부의 영향력이 유지됨에 따른 정치권 내 부정부패 문제, 로HING 사태와 같은 민족 및 종교 간 갈등과 인권 유린 사태가 정치·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존재함.

- 경제규모 대비 외채규모는 크지 않고 D.S.R.도 4% 이내로 외채 상환능력이 양호한 편이나, 과거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기록, OECD 회원국 ECA 앞 높은 금융연체율(74%)로 볼 때, 외채상환 태도가 불량함.

- 대외적으로 민주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방의 경제제재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최근 로HING 난민 문제로 유럽연합(EU)이 다시 제재연장을 결의하는 등 신정부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탄자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오경일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

목 차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2. 사회동향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1. 국가개황

1. 일반개황

면적	947천 km ²	G D P	566.64억 달러
인구	51.046백만 명 (2018년 기준)	1인당 GDP	1,110.05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Tanzania Shilling (TSh)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 (달러당)	2,270.90

-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대륙 본토인 탕가니카와 과거 오만의 지배로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 섬(인구 약 1백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지바르는 별도의 자치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음.
- 1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종족간 또는 종교간 마찰이 적어 내란과 테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 풍부한 부존자원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며 전통적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 현대화 정책이 추진 중임.
-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일원으로 관세 동맹, 공동시장 설립 등을 통해 역내 평화 및 지역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케냐와의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갈등이 드러나고 있음.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4.30 수교 (북한과는 1965.1.4.)

□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05), 문화협정('06), 대외경제협력
기금협정('05), 무상원조기본협정('14)

〈표 1〉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193,680	138,983	124,819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수 입	50,835	41,650	40,382	농림수산물, 귀금속제품

□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 총투자 기준): 18건, 7,000천 달러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7.0	7.0	7.0	6.0	6.4
소비자물가상승률	6.1	5.6	5.2	5.3	4.8
재정수지/GDP	-3.0	-3.3	-2.2	-2.7	-4.4

출처: IMF, EIU

□ 천연가스, 인프라개발과 가계소비 증가로 6%대 성장 유지 전망

○ 탄자니아는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항만·전력 등 인프라 개선, 서비스 부문(GDP의 약 60% 점유)과 광업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2011-2016년 평균 6-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17년에는 광물법 개정으로 금을 비롯한 주요 광물의 비가공 수출(별도의 가공 없이 선별된 원광석을 그대로 수출)이 제한을 받음에 따른 상품수출 감소, 민간 소비 및 투자의 확장 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 포인트 위축된 6.0%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탄자니아 정부는 2017년 3월 2일 광업 부문의 부가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탄자니아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속광물(금, 은, 구리, 니켈 등)의 정광(mineral concentrates) 및 원광석(ore)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 2018년에는 천연가스 및 인프라개발 확대, 기업환경의 점진적 개선에 따른 투자 활성화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은 6%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광물법 개정으로 인한 광물 수출 부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 탄자니아 최대의 금광회사인 Acacia Mining은 8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자니아 정부의 금 수출 제한으로 인해 2018년

상반기의 금 생산량이 25.8만 온스로 전년 동기 대비 41%나 감소하였다고 공개하였음.

- IMF는 2018년 1월 탄자니아에 대한 Country Report¹⁾에서 동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기적으로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은행들의 부실여신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 증가(credit growth)가 부진한 수준에 그치는 등 경제활동 둔화의 신호가 일부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열악한 세수 기반과 인프라개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 탄자니아는 세수 기반이 열악하고 성장 및 빈곤감축 전략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빈곤 감소 프로그램 추진,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 투자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IMF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2002년 8%에서 2016년 12.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접국들인 케냐와 르완다(2016년 15%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탄자니아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해 2012년 면세대상 축소를 단행하였으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인프라개발 확대의 지속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1) IMF Country Report No.18/11, United Republic of Tanzania - Staff Report (January 2018).

- 2018년에는 제조업 부문 기업들에 대한 면세 혜택 유지, 재정지출 총액의 30%에 육박하는 정부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 국영 광물 기업의 2차 가공 프로젝트 추진, 각종 인프라개발 투자 지속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대 중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우려됨.

□ 식료품 가격 안정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전망

- 2012년 식료품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16.0%에 달했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이후 국제유가 하락,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2014년 6.1%로 하락한 뒤 2015-2017년 3년 연속 5%대로 하향 안정되었음.
- 2018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4%대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미 달러화 강세 지속에 따른 탄자니아 실링화 가치 변동성, 4월 중순 발생한 홍수(사망자 20명)의 피해가 농산물 작황에 미칠 영향 등의 변수가 상존함.

2. 대외거래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5,344	-4,120	-2,009	-1,530	-1,809
경상수지 / GDP	-11.1	-9.0	-4.2	-3.0	-3.2
상 품 수 지	-5,724	-4,441	-2,766	-2,726	-3,001
상 품 수 출	5,194	5,402	5,697	4,621	4,702
상 품 수 입	10,918	9,843	8,464	7,347	7,703
외 환 보 유 액	4,181	3,934	4,245	5,082	4,848
총 외 채	13,731	15,505	16,475	19,244	21,311
총외채잔액/GDP	28.5	34.0	34.6	37.2	37.5
D.S.R.	3.5	7.7	9.7	11.0	12.9

출처: IMF, EIU

□ 금 수출량 감소 및 가격 하락, 자본재·소비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주요 수출품인 금의 수출물량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및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발생이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

○ 2018년에도 금의 수출물량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 제조업 및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 추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3.0%)대비 약간 상승한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뉴욕상품거래소(COMEX) 선물 기준 2007년 11월 14일 705.00달러 까지 하락했던 온스(ounce)당 국제 금 가격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상승세를 타고²⁾ 2011년 9월 9일 1,899.00달러까지 고공행진을 지속한 이후 2012년 하반기에 하락세로 전환, 2018년 8월 16일 1,176.20달러까지 하락하였음.

- 금융위기 진정에 따라 2015년 12월 18일 1,050.80달러까지 하락한 국제 금 가격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1월 25일 다시 1,362.4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재차 하락세로 접어들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감소로 외환보유액 증가에 차질

○ 외환보유액은 원유·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연간 FDI 유입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환보유액의 증가 및 안정적 수준의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UNCTAD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5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UNCTAD는 열악한 기업경영환경,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 결여, 부적합한 투자 인센티브, 중복적인 규제, 주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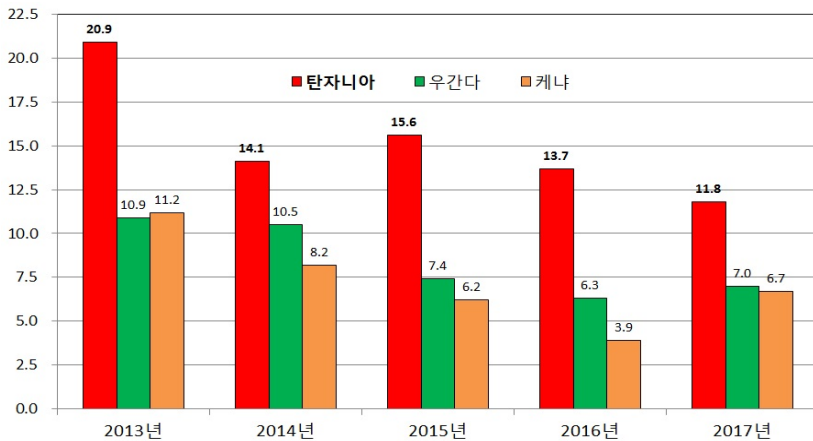
2) 금은 미 달러화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국제 금 가격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비례하고 미 달러화 가치와 반비례함. 따라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제수요 급증을 초래하여 국제 금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음.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이 FDI 유입 감소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FDI 유입액(억 달러)³⁾ : 20.9('13) → 14.2('14) → 15.6('15) → 13.7('16) → 11.8('17)

〈그림 1〉 최근 5년 간 탄자니아의 FDI 유입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출처: UNCTAD

3. 외채상환능력

□ 재정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해외차입 규모 증가 지속

○ 총외채잔액 규모는 파리클럽의 대규모 외채 탕감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으나, 재정수지 적자분을 해외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최근 외채잔액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27.7억 달러 증가한 192.4억 달러 (GDP의 37.2%)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전년보다 20.7억 달러 증가한 213.1억 달러(GDP의 3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IMF는 2018년 1월 기준 탄자니아에 대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 보고서⁴⁾를 통해, 탄자니아의 부채고통 위기(risk of debt distress) 수준을 '낮음'(Low)으로 평가하여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고 있음.

□ 단기적 외채상환불능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외채규모가 증가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단기외채잔액도 증가하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4년 44.9%에서 2017년 58.7%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D.S.R.도 2014년 3.5%에서 2017년 11.1%로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나, 세계은행 권고기준인 18%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기적 외채상환불능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4) <https://www.imf.org/external/Pubs/ft/dsa/DSAlist.pdf> (검색일: 2018.8.23)

III. 경제구조 및 정책

1. 구조적 취약성

-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로 기후변화 및 세계경기에 민감
 - 농업은 GDP의 약 30% 및 노동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임. 그러나 경작지가 국토의 약 5%에 불과하고 소규모 생계농이 대부분으로, 관개시설 등 농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강수량 등의 기후변화에 작황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
 - 또한, 탄자니아의 주요 농산물은 커피, 차, 향신료, 면화 등 수출용이며 식량용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가격에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가 크게 좌우됨.
-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만연, 고급인력 부족으로 성장기반 취약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인프라 수준은 137개국 중 114위(도로 90위, 항공운송 114위, 전력공급 110위, 이동전화 124위)로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다만, 2013-14년 GCI에서는 148개국 중 134위(도로 109위, 항공운송 134위, 전력공급 131위, 이동전화 131위)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완만하나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의하면, 탄자니아 전체 인구의 32.8%만 전력 사용이 가능(2016년 기준)하고, 수력발전이 전력 공급원의 41.6%(2015년 기준)을 차지하여 가뭄 발생 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음. 한편, 도로는 우천과 일몰 이후 안전상의 문제로 통행이 불가하며, 홍수 시에는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음.

○ 탄자니아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국 중 103위, UN개발계획이 발표하는 2016년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88개국 중 151위로 중하위권에 그쳐, 부정부패와 고급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기업환경이 경제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적됨.

2. 성장잠재력

□ 인도양 연안 역외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개발 가속화

○ Oilprice.com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7년 기준 약 1.6조m³ 규모이며, 인도양 연안의 4개 해상 가스전 광구에서 가스개발이 진행 중임.⁵⁾

5) http://oilprice.com/Energy/Natural_Gas/Tanzanias-344M-Natural-Gas-Plant-Is-A-Game-Changer.html (2018.4.7)

- 영국 BG Group과 이스라엘 Ophir가 1·3·4광구, 노르웨이 Statoil과 미국 ExxonMobil이 4광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2010년 이후 인도양 연안에서 천연가스전이 꾸준히 발견됨에 따라 추후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외의 관심을 받고 있음.

○ 탄자니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발전연료 등으로 사용하면서 유류 수입을 감축하여, 2015-2017년 중 40억 달러 이상의 유류 수입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짐.

○ 탄자니아석유개발공사(TPDC)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국내 수요는 2016년 약 411만m³에서 2017년 약 850만m³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2〉 탄자니아의 인도양 연안 해상 천연가스전



□ 천연가스 화력발전 개발을 통해 전력의 자급자족 및 수출 추진

○ 2018년 4월 3일 총 발전 용량 약 240MW 규모의 Kinyerezi II 천연가스-증기 복합 화력발전소가 준공되었음. 발전용량의 167.82MW는 천연가스, 80.4MW는 증기에 의한 용량임.

- 탄자니아의 경제수도인 Dar es Salaam 외곽의 Kinyerezi 지역에 소재한 동 발전소의 건설에 소요된 예산 3억 4,400만 달러의 15%는 정부 재정자금, 85%는 일본 Sumitomo Mitsui 은행과 JBIC의 대출로 충당되었음.

○ 앞서 2015년 10월 13일 역시 Kinyerezi 지역에 준공된 Kinyerezi I 화력발전소는 총 발전 용량 150MW 규모로, 천연가스와 액상 연료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탄자니아 에너지부의 Medard Kalemani 장관은 TPDC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을 통해, Kinyerezi 지역에 가스 화력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여 총 발전 용량을 600MW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음.

- 과거 탄자니아는 전력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수력발전에 의존한 결과, 가뭄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이 빈발하였음. 이에 탄자니아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코자 하고 있음.

- Kinyerezi II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용은 2025년까지 탄자니아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국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의 일환임.
 - 전력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의 중요한 조건들 중 하나임.

- 아울러 탄자니아 정부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소요예산 20억 달러, 총 발전 용량 약 2,100MW 규모의 Stiegler's Gorge 수력발전 댐 건설의 연내 착공을 추진 중임.

- 탄자니아 정부는 이처럼 가스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 댐의 병행 건설을 통해 2021년 말까지 총 발전 용량을 5,000MW 수준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 경우 자체 전력수요 충족을 넘어 인근 국가로의 전력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탄자니아의 총 발전 용량은 1,357.69MW로, 발전 형태별로는 가스 화력발전 607MW(45%), 수력발전 566.78MW(42%), 석유 화력발전 173.40MW(13%)의 비중임.⁶⁾
 - John Magufuli 대통령은 지난 2017년의 연설을 통해 탄자니아가 급증하는 에너지 국내수요에 부응코자 노후한 에너지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데 향후 20년 간 462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6) <http://www.tanzaniainvest.com/energy/kinyerezi-2-launch> (2018.4.5)

것으로 전망하였음.

□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탄자니아는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석탄, 니켈, 탄자나이트(탄자니아에서만 생산되는 보석류) 등 상업적으로 가치가 큰 광물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수출광물인 금의 확인매장량은 4,500만 온스이며,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전 국토의 약 2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각종 광물자원 매장량의 추가 확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탄자니아의 주요 광물 수출액은 상품수출 총액의 25% 내외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금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금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와 맞물려 탄자니아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

□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부문의 성장 지속

- 탄자니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공원,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 이슬람의 영향으로 독특한 문화를 지닌 잔지바르 섬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유럽과 미국 등으로부터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관광 부문의 지속적인 수입(收入) 유지로 인해 탄자니아의 서비스수지는 대부분의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관광산업은 탄자니아 GDP의 15% 내외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TanzaniaInvest.com에 의하면 연간 관광객 유치 규모는 2006년 62.2만 명에서 2014년 11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3. 정책성과

□ 사회적 안정과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한 중소득국 진입 추진

○ 탄자니아 정부는 농업 위주의 저소득국가에서 산업화를 기반으로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를 추진하고 있음.

- 동 계획은 단순한 경제발전 외에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안정, 고등교육환경 조성, 부정부패 척결 등 정치적, 사회적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을 목표로 하는 농업정책 추진

○ 탄자니아 농업은 GDP의 약 30%와 전체 고용의 약 6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나, 생산자의 80% 이상이 소규모 생계농이고 농업기술이 낙후되어 생산성이 매우 낮음.

- 주요 수출 농산물은 담배, 캐슈너트, 커피, 차(tea), 정향(clove), 면화, 사이잘삼 등이며, 내수용 농산물은 옥수수, 쌀, 밀, 콩 카사바 등임.

○ 탄자니아 정부는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을 위해 독립 직후부터 농업 발전을 중시하였으며, 현 정부도 농업의 혁신을 위해 각종 농업 진흥정책을 추진 중임.

- 정부는 민간, NGO, 국외 투자자 등 여러 주체의 참여를 통해 탄자니아 국토의 약 1/3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농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식량 자급자족, 농업의 현대화라는 정책전략을 추진 중임.

○ 영농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탄자니아 정부에 의해 설립된 탄자니아농업개발은행(TADB)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음.

□ 도로, 신항만 건설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지속

- 탄자니아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8/19회계연도 정부 예산총액(32.5조 탄자니아실링)의 약 37%를 인프라 구축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할당하고 있음.
 - 2018/19회계연도 인프라개발 계획은 교통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인프라 구축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할당된 정부예산의 약 35%가 동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탄자니아 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으로부터 1.2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 Arusha부터 Halili를 잇는 총연장 157.5km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Bagamoyo 지역에 새로운 항구 및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Dar es Salaam 항만설비 개선을 위한 Dar es Salaam Maritime Gateway 프로젝트(투자규모 US\$ 5.65억, 세계은행 및 영국 정부 지원)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남서부 Ruvuma 지역의 Kikonge 수력발전용 댐 건설(아프리카개발은행이 지원, 2025년 완공 목표), 농촌 지역 송배전망 구축 및 확장 프로그램(세계은행이 지원, 2021년 완공 목표)도 추진 중임.

□ 정부 정책의 보호주의 성향과 추진의 일관성 부족이 문제점

○ 최근 탄자니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독립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보호주의 정책, 경제정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 부족은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

○ EIU는 2018년 7월 탄자니아에 대한 Country Report에서, 탄자니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제적 국수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하였음.

-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6/17-2020/21년)은 예고 없이 단행되는 세율 인상, 자의적으로 시행되는 규제 변동,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아울러 산업정책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 국제경쟁으로부터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광물법 개정으로 광업 부문의 부가가치 제고를 추진 중이나 산업적 기반의 결여로 역효과 초래

○ 탄자니아 의회는 2017년 광물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격한 관리·규제 및 이를 통한 국가경제 이익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동법의 주요 내용은 광물수익에 대한 탄자니아 정부의 무상이익 공유율(free-carried interest rate)을 최소 16%로 정하고, 광업 부문 관련 중재는 탄자니아 법원이 담당하며, 광업 부문 거래에 탄자니아 국내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비가공 광물의 수출을 억제하고 가공 사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등임.
- 그러나 탄자니아의 광물 정련·제련업 발전은 아직까지 매우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가공 광물의 수출 억제는 금을 비롯한 주요 광물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중하지 못한 정책 입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과의 합작기업인 탄자니아-중국 국제광물자원회사(TCIMRL)는 탄자니아 광물 정련·제련업 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6년부터 철광석 매장지역인 소재한 탄자니아 남부의 Liganga에 신규 철광산 개발, 연간 생산량 1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투자규모가 18억 달러에 이르는 동 프로젝트는 2018/19회계연도 중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⁷⁾

7) www.tanzaniainvest.com/mining

IV.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Magufuli 대통령, 강도 높은 공공개혁 추진

- 탄자니아는 1961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래 현 여당인 탄자니아 혁명당(CCM)이 계속 집권하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1992년 개헌을 통해 다당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CCM이 탄자니아의 유일한 합법적 정당이었음.
- 2015년 10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John Magufuli 現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통폐합, 관료주의 타파,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 등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관련 조치들로는 공무원 해외출장시 대통령실 승인 취득 의무화, 장부상에만 존재하며 급여를 착복하는 ‘유령 공무원’의 정리, 부패와 연루된 고위 공무원의 해임, 정부 조달의 투명성 강화, 학력 위조 공무원의 퇴출 등이 있음.
-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빈곤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를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Magufuli 대통령,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정책 강행

- Magufuli 대통령은 취임 후 강도 높은 공공 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근무 태만 공무원의 해고, 불필요한 예산지출의 취소, 부패와의 전쟁 추진 등으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전방위적인 반발이 높아지고 있음.
- Magufuli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의회에서의 토의표결 등 의사결정 과정의 방송 생중계를 중단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 여당 주도로 발의된 일련의 새 법률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이 체포·구금되고 있음.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공무원들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있음.
- 2017년 7월 주요 야당인 민주진보당(Chadema) 소속 의원 3명이 의회 건물에서 나오던 중 총격을 당해 2명이 피살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Magufuli 대통령과 여당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정부·여당의 야당 탄압 및 와해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진보당 대표인 Freeman Mbowe 의원은 지난 4월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반란 선동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유도공작의 결과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 4명과 지방의회 의원 75명이 여당으로 이적한 바 있음.

- 또한 보궐선거는 투표표 조작, 경찰의 개입, 납치, 폭력 등으로 결과가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아울러 Magufuli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예산 배정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일부 판사들이 부패와 나태를 일삼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노골화하고 있음.

□ Magufuli 대통령의 전횡에 대한 반발, 수면 위로 부상

○ 금년 초 탄자니아의 Ibrahim Hamis Juma 대법원장은 법 주간(Law Week) 기념 연설을 통해 3권 분립을 침해하려는 행위의 '심각하고 엄중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을 삼갈 것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 이어 2월 탄자니아 최종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기소국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 DPP)⁸⁾의 권한 중 일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음. 5명의 판사들은 DPP에게 어떤 범죄가 보석(保釋)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형법상의 조항이 DPP의 권한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 하였음.

○ 7월 5일 탄자니아의 비정부기구인 Twaweza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동 결과에 의하면 Magufuli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지율은 2015년 96%에서 2017년 55%로 급락하였음.

- 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인 7월 24일 탄자니아 이민국은 합당한 설명 없이 Twaweza의 Aidan Eyakuze 사무총장의 여권을 압류하였음.

○ 이렇듯 자신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발과 저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Magufuli 대통령은 자신이 신임하는 최측근들을 여당 및 정부의 요직에 집중적으로 포진시키는 등 권력기반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8) 영국 사법체계에서 (탄자니아는 과거 영국 식민지로서 영국 법체계를 사법체계의 기본으로 삼음) 범죄 혐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공무원으로, 우리나라 검찰의 검사장에 해당됨.

2. 사회동향

- 종족·종교간 큰 갈등 없이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잔지바르 섬의 분리 독립 움직임 잔존
 - 탄자니아는 1961년 독립 이후 아프리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으며, 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두드러진 종족 간 또는 종교 간 갈등은 없음.
 - 다만, 탄자니아 정부는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잔지바르 섬에 자치 정부와 의회 및 독자적인 헌법을 허용하고 화합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잔지바르에서 일부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분리 독립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
 - 탕가니카(탄자니아 본토)는 1961년 12월 9일, 잔지바르는 1963년 12월 10일 각각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음. 이후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연합하여 1964년 4월 26일 탕가니카-잔지바르 연합 공화국이 출범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일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으로 국명을 변경하였음.
 - 과거 야당 주도로 잔지바르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유혈진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독립파와 잔류파 간의 정치적 공방만 이어지고 있음.

□ 독재로 기울어지는 Magufuli 대통령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저항

- Magufuli 대통령의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정부 시위는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 위협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탄자니아 사회 전반에 걸쳐 현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음.
- 금년 사순절 기간 중 탄자니아의 가톨릭 주교단과 루터파 복음주의 개신교 주교단은 Magufuli 대통령의 독재와 야당 탄압, 사법부에 대한 압력, 시민 자유의 억압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 하였음.
 - 같은 시기에 탄자니아의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Magufuli 대통령의 억압적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에 공동 서명하였음.

3. 국제관계

-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중심국 역할 수행
 - 탄자니아는 케냐와 더불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의 주도국으로,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2016.4 가입)의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임. 2005년 역내 관세동맹 출범, 2009년 단일 공동시장 창설협약 체결, 2010년 역내 공동 관세율 적용 등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EAC 5개 회원국들은 2013년 11월 30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단일 통화를 도입한다는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합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재정정책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임.

○ EAC는 2016년 4월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Vision 2050’을 발표, 2050년까지 정치적으로 연합된 중간소득 수준의 국가통합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천명하였음.

□ 탄자니아-케냐 간 갈등으로 EAC의 내부 분열 표면화

○ 그러나 EAC의 양대 축인 동시에 역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인 탄자니아와 케냐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며 내부 분열이 표면화되고 있음.

○ 탄자니아는 부룬디와 우의를 다지면서 비회원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을 끌어들이는 반면, 케냐는 이에 맞서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과 결속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6월 케냐, 우간다, 르완다 3개국 정상은 3개국을 통과하는 송유관, 철도, 발전소 건설과 단일 관광비자 발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이에 2013년 10월 탄자니아 EAC 장관은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와 경제적 결속을 추진 중임을 발표하였으며, 11월에는 EAC 국가 간 단일 비자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여 EAC의 분열이 표면화되었음.

○ 탄자니아는 Dar es Salaam 항을 주로 이용하는 내륙국인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반면, 케냐는 Mombassa 항을 주로 이용하는 내륙국인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과 새로운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측됨.

○ 그러나 최근 탄자니아는 월유, 천연가스 부문에서 우간다와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EAC 내에서의 역학관계가 보다 복잡해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탄자니아 국영 석유개발공사(TPDC)는 8월 6일(현지시각) Dar es Salaam에서 시작되어 인도양 연안 Tanga 항과 빅토리아 호수 연안 Mwanza 항을 거쳐 우간다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⁹⁾

-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2016년 우간다 서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월유의 수출을 위해 우간다 유전지대와 탄자니아의 수출항만을

9) www.standardmedia.co.ke/business/article/2001291014/tanzania-wants-to-pump-gas-to-uganda

연결하는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에 합의한 바 있음.

- 한편, 최근 EAC 회원국들은 자국에 불법체류 중인 타 회원국 국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 회원국 간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해온 ECA의 설립 정신에 반하는 정책 기조를 추진하고 있음.¹⁰⁾
 - 탄자니아 이민국도 지난 1월 초 94명의 외국인을 불법입국자로 분류하여 강제 추방하였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이 케냐인 71명, 르완다인 7명, 우간다인 2명 등 EAC 회원국 국민들이었음.¹¹⁾

□ EAC와 EU 간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지연

- EAC는 유럽연합(EU)과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동 EPA는 당초 2016년 7월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자국산업 보호를 내세우는 탄자니아와 부룬디의 서명 거부로 현재까지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 EAC 회원국들 중 케냐와 르완다는 이미 2016년 9월 동 EPA에 서명하였음.

10) 우간다 정부는 지난 7월 2일 자국에 여행 관련 증명서 없이 불법입국한 72명의 르완다인들을 강제 추방하였음. 르완다인은 자국의 적법한 신분증명서(여권 포함)를 소지할 경우 우간다에 자유로운 체류가 가능함.

11) 추방된 외국인의 상당수는 탄자니아인과 결혼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1972년부터 탄자니아에 체류해 온 이들도 포함됨.

□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천연가스에 대한 미국의 관심 증가

○ 탄자니아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3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탄자니아를 방문한 바 있음.

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두 차례의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현재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연체 없음

○ 탄자니아는 2000년 고채무 저소득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에 따라 30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은 데 이어 2006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Initiative)에 따라 38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았음.

○ 2018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1,230백만 달러(단기 39.5백만 달러, 중장기 1,190.5백만 달러)이며,

연체비율은 단기 2.0%(0.8백만 달러), 중장기 4.1%(48.9백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2018년 3월 말 기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8.6)	6등급(2017.6)
Moody's	B1 (2018.3)	

□ OECD는 6등급 유지, Moody's는 B1 등급 부여

- OECD는 탄자니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6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한편, Moody's는 금년 3월 처음으로 탄자니아에 대한 국가신용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B1 등급을 부여한 바 있음.

VI. 종합의견

□ 탄자니아는 천연가스 개발, 풍부한 광물자원, 인프라개발 확대 등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6-7%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와 기술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2018년에는 천연가스 및 인프라개발 확대, 투자 활성화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은 6%대 초·중반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열악한 세수기반과 지속적인 인프라개발에 따른 재정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수출품인 금의 수출물량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쌍둥이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보호주의 정책, 경제 정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부족 등이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
- 독립 이후 현재까지 탄자니아혁명당(CCM)의 집권이 지속되고 있으나, John Magufuli 대통령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정책을 강행하여 사회 각계의 반발과 저항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 투자 증대에 따라 총외채잔액 및 단기외채 잔액이 증가하고 D.S.R.도 상승 추세이나, IMF는 2018년 1월 탄자니아에 대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서 탄자니아의 부채위기 수준을 '낮음'(Low)으로 평가하여 단기적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고 있음.

「한국의 개발협력」 원고 기고

□ 발간 목적

- 「한국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원고 집필 요령

- 내용 및 작성 : 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 형식으로 작성
- 형식 : 한글과일 사용 (13 포인트, 200자 원고지기준)
-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E-MAIL : mark2002@koreaexim.go.kr / kwlee@koreaexim.go.kr

Tel : 02-3779-6608

- 기고원고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기고 원고는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 심사 절차는 한국의 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원고의 심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원고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게재

-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하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는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ttp://www.edcfkorea.go.kr>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